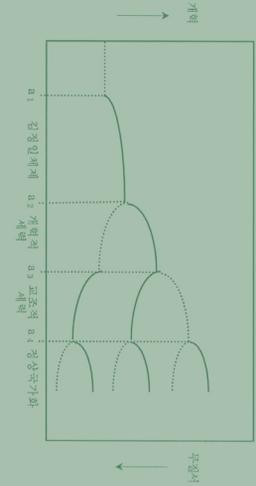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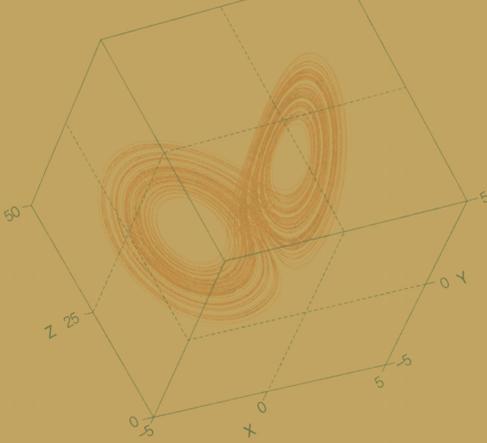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 조동준 · 김치욱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www.kinu.or.kr

북한의 정상화국가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인 쇄 2010년 12월 30일

발 행 2010년 12월 30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76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디자인 양동문화사 (02-2272-1767)

인 쇄 처 두일디자인 (02-2285-0936)

가 격 7,500원

ISBN 978-89-8479-577-8 93340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통일연구원
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통일연구원
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이 교 덕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전 현 준 선임연구위원 조 정 아 선임연구위원 민 병 원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정 규 섭 교수(관동대) 외
	통일연구원	전 현 준 선임연구위원	김 국 신 선임연구위원 김 갑 식 입법조사원(국회 입법조사처)
	통일연구원	조 정 아 선임연구위원	김 영 윤 선임연구위원 박 영 자 연구교수(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민 병 원 교수	조 동 준 교수(서울시립대) 김 치 옥 연구위원(세종연구소)

목차 C o n t e n t s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조동준, 김치욱

제1장 들어가는 말 / 1

제2장 불량국가의 군사적 측면

1. 불량국가의 분류기준	가. 테러금지규범	6
	나. 핵확산금지규범	9
	다.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	14
2. 국제체제와 불량국가	가. 패권과 동맹국 수	21
	나. 미국의 패권과 불량국가	25
3. 불량국가의 국내적 속성	가. 군사화	27
	나. 정치체제의 비민주성	30
4. 불량국가의 관계적 특성	가. 불량국가의 외교행태	33
	나. 불량국가와 무력분쟁	39
	다.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	45

제3장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

1. 문제제기		52
2. 정치경제의 비정상성	가. 취약국가	54
	나. 불량국가의 경제적 측면	59
3.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특징	가. 경제지표	63
	나. 비정상국가의 유형과 리스트	68
4.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상호작용	가. 속성 파라미터	69
	나. 상호작용의 패턴	71

제4장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에 대한 함의

- | | | |
|--------------------|-----------------------------|----|
| 1. 불량국가의 정상화 과정 | 가. 불량국가의 분화 | 80 |
| | 나.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 | 81 |
|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 가. 정치경제적 차원의 지원 | 85 |
| | 나. 외교정책 및 정치군사적 차원의 지원 | 87 |
| | 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한 실천방안 | 88 |

제5장 맺는 말 / 91

참고문헌 / 95

부록

- | | |
|------------------|-----|
| A. 비정상국가의 경제지표 | 103 |
| B. 비정상국가 리스트 | 104 |
| C. 비정상국가의 지리적 확산 | 106 |
| D. 글로벌 경제지표 | 107 |
| E. 주요 비정상국가 지표 | 109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37

〈표 II-1〉 테러 수출에 관여하는 불량국가	8
〈표 II-2〉 핵무기 확산에 관여하는 불량국가 (1970년 이후)	12
〈표 II-3〉 조직적 인권 탄압에 관여하는 불량정권	16
〈표 II-4〉 패권의 상대적 강도 분포	21
〈표 II-5〉 패권국의 동맹국 분포 (절대 수)	23
〈표 II-6〉 패권국의 동맹국 분포 (비율)	23
〈표 II-7〉 최강 패권도전국의 동맹국 분포 (절대 수)	23
〈표 II-8〉 최강 패권도전국의 동맹국 분포 (비율)	23
〈표 II-9〉 패권의 강도와 패권국의 동맹국 비율	24
〈표 II-10〉 패권의 강도와 최강 패권도전국 동맹국 비율	24
〈표 II-11〉 미국 패권과 불량국가 수	26
〈표 II-12〉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현역 군인수 차이	28
〈표 II-13〉 천 명당 현역 군인수의 분포	28
〈표 II-14〉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군사비 차이	29
〈표 II-15〉 연간 군사비 분포	29
〈표 II-16〉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군사비 차이	29
〈표 II-17〉 민주주의 지표의 분포 (사분위)	30
〈표 II-18〉 민주주의 지표의 분포 (백분율)	30
〈표 II-19〉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민주주의 차이	31
〈표 II-20〉 정치체제의 속성과 불량국가의 분포	32
〈표 II-21〉 국제사회에서 기피국가로 언급된 국가들	34
〈표 II-22〉 상주외교사절 비율의 분포	35
〈표 II-23〉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상주외교사절 비율 차이	36
〈표 II-24〉 상주외교사절 비율에 관한 회귀분석 (1970~2005)	37
〈표 II-25〉 상주사절 수용에 관한 Maximum Likelihood 분석	38
〈표 II-26〉 무력분쟁 관여 횟수의 분포	41

〈표 II-27〉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무력분쟁 관여 횟수 차이	42
〈표 II-28〉 무력분쟁 관여 횟수에 관한 Poisson 회귀분석	42
〈표 II-29〉 무력분쟁 개시에 관한 Logit 분석	43
〈표 II-30〉 국가가 국제사회로 보내는 협력적 신호의 사례와 점수	46
〈표 II-31〉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협력적 신호의 사례 및 차이	46
〈표 II-32〉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협력적 신호의 점수 차이	47
〈표 II-33〉 국가가 국제사회로 보내는 갈등적 신호의 사례와 점수	47
〈표 II-34〉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갈등적 신호의 사례 및 차이	48
〈표 II-35〉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갈등적 신호의 점수 차이	48
〈표 II-36〉 국가-국제사회 간 평화지수(협력점수-갈등점수) 차이	49
〈표 II-37〉 국제사회-국가 간 평화지수(협력점수-갈등점수) 차이	49
〈표 III-1〉 국가 취약성의 주요 구성요소	54
〈표 III-2〉 취약국가 유형	56
〈표 III-3〉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비정상국가의 유형과 리스트	69
〈표 III-4〉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파라미터	70
〈표 III-5〉 비정상국가의 지리적 확산	73
〈표 III-6〉 인접국가의 경제 파라미터	75
〈표 III-7〉 글로벌 경제 파라미터	75
〈표 IV-1〉 불량국가의 분화	81

〈그림 II-1〉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수	13
〈그림 II-2〉 불량정권(정치학살을 자행하는 나라)의 추세	20
〈그림 II-3〉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군사화	39
〈그림 II-4〉 북한과 이라크의 군사화	40
〈그림 III-1〉 비정상국가와 저소득국가	77
〈그림 IV-1〉 아프가니스탄과 국제사회의 관계	82
〈그림 IV-2〉 리비아와 국제사회의 관계	83
〈그림 IV-3〉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84

제1장

들어가는 말

북한의 정상외교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제1장

들어가는 말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불량국가와 취약국가, 그리고 실패국가 등 정상적인 모습을 결여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 또는 제재방안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 외교정책과 더불어 대테러전쟁이 가속화되고,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지면서 21세기의 국제정치는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비정상국가 담론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방향성을 잃고 있으며, 이라크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상황이 안정될 기미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담론을 경험적 맥락에서 짚어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그동안 몇 가지의 담론에 의해 지배되어왔다. 그 중 하나는 ‘실패국가(failed states)’로서, 이는 비단 북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저개발국에 해당되는 담론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본원적인 임무, 즉 국방·경찰·복지·민주주의·인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가제도와 정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이처럼 ‘국가의 실패’라는 현상은 오랫동안 ‘주권(sovereignty)’이라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면서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기준이 더 중시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국가의 실패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주범으로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가의 실패’ 담론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생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이라는 구호조차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많은 빈곤국가들은 해외원조에 의존하기도 하지

만, 그나마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제적 곤경으로 인해 국가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경제적인 요인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제도적·정책적 한계로 인하여 국가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켜 국제사회에서는 ‘취약국가(weak states)’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비록 붕괴하지는 않더라도 붕괴 직전 상황에 몰리면서 국가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약국가’의 담론은 ‘실패국가’의 담론이나 ‘국가의 붕괴’ 담론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¹⁾

‘국가의 실패’ 담론과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안보 및 외교정책 차원의 이슈 역시 오늘날 국제정치의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안보차원에서는 내전과 테러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국가의 실패’에 버금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국가들 중의 일부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테러범들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을 별도로 지칭하여 ‘불량국가(rogue states)’로 부르고 있다. 불량국가들은 대부분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주요 규범들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경제적인 취약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 볼 때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비정상국가’의 담론은 크게 ‘취약국가’와 ‘불량국가’의 차원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두 차원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실패국가’ 또는 ‘국가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문제를 진단하는데 있어 ‘취약국가’와 ‘불량국가’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적 곤경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국가’의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불량국가’ 담론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지만 ‘취약국가’ 담론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북한의 ‘불량국가’적 속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경제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추가적인

1) 취약국가, 불량국가 및 ‘국가의 실패’에 관한 개념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것. 민병원·조동준·김치욱,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제3장.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먼저 국제사회의 불량국가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속성들을 짚어보고, 이들이 어떤 국제규범에서 문제시되는지, 그리고 미국 중심의 패권체제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불량국가들이 민주주의 등 국내적 속성에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아울러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취약국가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살펴보고, 특히 불량국가에서 나타나는 취약국가의 속성을 함께 검토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비정상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특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진단하고자 하며, 이들과 국제사회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본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제4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며, 제5장에서는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불량국가의 군사적 측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제2장

불량국가의 군사적 측면

1. 불량국가의 분류기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비정상성’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비정상 여부와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관습)규범의 준수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꼽을 수 있다. 국제(관습)규범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형성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서 대량살상무기금지, 테러금지,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제(관습)규범, 경제규범 등 몇 가지 국제(관습)규범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국가의 비정상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테러금지, 대량살상무기금지, 인권보호 관련 국제규범을 검토한다.

가. 테러금지규범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위협한다. 첫째, 국가의 지원에 의한 테러는 내정불간섭 원칙을 위반한다. 16세기 서양에서 종교개혁 이후 종파 선택을 둘러싼 갈등은 30년 전쟁과 같은 전쟁을 거치면서, 종교 문제에 관하여 외부의 개입을 금지하는 관행을 만들었다. 종교 문제에서 불간섭 관행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어, 주권국가의 내부 문제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포괄적 규범으로 확장되었다. 내정불간섭 규범은 국제연합 헌장 2조 7항²⁾과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안³⁾으로 명문화

2) 국제연합 헌장 2조 7항은 ‘국제연합 헌장이 회원국의 국내관할권에 속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연합의 권위에 기반을 두고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3) Declaration on the Inadmissibility of Intervention in Domestic Affairs of States (A/Res/2131(XX), 21 December 1965);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A/Res/2625(XXV), 24 October 1970).

되었다. 반면, 국가의 지원에 의한 테러는 특정 국가의 정책 변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정간섭을 당연하게 내포한다.

둘째, 국가의 지원에 의한 테러는 전쟁법을 위반한다. 전쟁이 국가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인정을 받던 시기에서도 민간인을 전투의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는 관습은 국제사회의 강행규범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규범은 민간인을 전투 행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성문법으로 발전되었다. 폭격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연맹 결의안(Protection of Civilian Populations Against Bombing From the Air in Case of War, League of Nations, 30 September 1938), 국제군사법정(뉴른베르크법정)의 원칙(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8 August 1945) 제 6조, 제네바 협약(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12 August 1949)의 2부, 국제연합의 인권결의안(Resolution on Human Rights, 19 December 1968) 등에 의하여 민간인 보호가 점차 강화되었다.

국가에 의한 테러는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피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전쟁법을 위반한다. 국제사회는 전투 행위의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강조해왔다. 전투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전투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은 명확하지 않지만, 성문화되었다. 제네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정서 51조와 57조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예상 이익’에 비하여 민간인 피해가 과도할 경우 군사행위를 취소해야 한다. 이 원칙을 위반한 군사행동은 무차별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명시한다. 테러는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피해를 통하여 국가 행동의 변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다.

국제사회는 국가의 지원에 의한 테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과 의정서를 발전시키고 있다. 1963년 항공기에 불법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이후 국제사회는 총 12개의 협약과 의정서를 맺었다. 국제사회는 국가에게 테러를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 한다는 소극적 금지규범은 물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적극적 개입규범을 국가에게 지우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의 지원에 의한 테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다자적 규범이 아직까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는 비정부행위자에 의한 폭력행위로 인식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테러를 지원하는 현상이 1960년대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는 테러 단체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무기를 제공하는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테러 단체를 지원하여 상대국을 위협하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⁴⁾ 1960년대부터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본격화되었다. 테러 단체에게 기지와 자금을 제공하거나, 테러 단체와 협력을 추구하는 국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서는 수단, 이란, 쿠바, 시리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도 정권 붕괴 이전 ‘테러 수출국’이었고, 북한도 오랫동안 ‘테러 수출국’으로 지정되어왔다.⁵⁾

다음의 <표 II-1>은 국가차원의 테러 수출에 관여하기 때문에 불량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군들을 보여준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국무성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었거나 아직도 포함되어 있는 국가이다(아프가니스탄 제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알 카에다에 대하여 기지를 제공했다. 수단이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 기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힌 후, 알 카에다 지도자들은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주한 바 있다. 2001년 미국 주도의 연합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기 직전까지 알 카에다는 이곳에서 피난처를 제공받았다.

<표 II-1> 테러 수출에 관여하는 불량국가

국 가	기 간	사 유
쿠바	1982~현재	테러 단체에 피난처 제공
이란	1984~현재	테러 단체에 피난처 제공 테러 단체 지원
이라크	1982~2003	위와 동일
리비아	1979~2006	위와 동일

4) 미국, 구소련 또는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적대관계에 놓인 국가가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현상까지 테러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

5) Robert S. Litwak, *Rogue States and U.S. Foreign Policy: Containment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0), pp. 47~49.

국 가	기 간	사 유
북한	1987~2008	테러 단체에 피난처 제공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시리아	1979~현재	테러 단체에 피난처 제공
수단	1993~현재	위와 동일
아프가니스탄	1996~2001	위와 동일
남예멘	1979~1990	위와 동일

자료: US Department of Sate, various years,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표 II-1>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국가들 가운데, 미국,⁶⁾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팔레스타인이 잠재적으로 테러 수출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 미국은 반미성향의 국가에 대한 반정부 무장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 상대방에 적대적인 무장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의 지위를 활용하여 ‘테러 수출국’의 낙인에서 벗어난 바 있다.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무장단체 지원은 전통적 적대관계의 연장으로 이해되어온 까닭에 ‘테러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붙지는 않고 있다.

나. 핵확산금지규범

핵무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첫째, 핵무기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할 수 없는 무기라는 점에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는 전쟁법과 양립하기 어렵다. 핵무기의 사용 또는 위협은 “전투행위에 적용되는 국제법과 일반적으로 상치한다(would generally be contrary).”⁷⁾ 국가 생존이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극단적인 환경 때문에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이 가지는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을 뿐, 핵무기는 그 속성상

6)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은 미국이 내정불간섭과 영토보전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불량국가’로 규정한다. Edward S. Herman, “Global Rogue State: The Opinion of the Biggest is Always the Best” (Z Magazine, 1998). 이처럼 ‘불량국가’라는 명칭은 여러 면에서 정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7)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8 July 1996). 이 조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찬성 7명, 반대 7명을 팽팽하게 갈렸다. 재판소장 Bedjaoui가 찬성표를 던져 상기 조항은 겨우 통과되었다.

전쟁법과 인도법과 양립하기 어렵다.

둘째, 핵무기는 과도한 피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전쟁법의 비례성 원칙과 양립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파괴력 측면에서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무기로써 효과적이지 못하다. 핵폭발에 필요한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최소 플루토늄 10.5 Kg이 필요하다. 플루토늄의 순도를 현실적으로 고려하면, 핵폭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의 양은 최소 11Kg을 상회해야 한다. 임계점을 겨우 넘길 정도로 최소 핵물질을 탑재한 핵무기라도 그 위력은 매우 강하다. 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핵무기의 피해가 핵무기 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하여 과도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 사용의 피해와 목적 간의 차이로 인하여, 핵무기는 전쟁법의 비례성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

셋째, 핵무기는 영토와 독립을 위해하는 위협 또는 폭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연합 헌장 2조 4항과 양립하지 않는다.⁸⁾ 국제사회는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써 전쟁을 불법화시켰다(Kellog-Briand Pact, 27 August 1928; 국제연합 헌장 2조 3항). 정책수단으로써 전쟁이 불법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핵무기의 사용과 위협은 당연히 불법적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현재 핵무기의 불법성을 규정하는 국제규범 또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류는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폐기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가진다.⁹⁾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의 발효는 비확산 규범이 성문화된 구체적 계기였다. 핵확산금지조약이 처음 작동될 당시, 6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1945년), 구소련/러시아(1949), 영국(1952년), 프랑스(1960), 중국(1964)이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보유를 알렸다. 또한, 이스라엘은 1956년부터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969년경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추정된다.¹⁰⁾ 6개국이 공인된 또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전제 아래서 핵확산금지조약은 추가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합의로서 출발했다.

8) *Ibid.* 이 조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전원일치 판정을 내렸다.

9) *Ibid.* 이 조항에 대하여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전원일치 판정을 내렸다.

10) 1969년을 이스라엘의 사실상 핵보유 시점으로 잡은 근거는 이스라엘의 핵정책의 변화이다. 이 해에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 여부에 관한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핵무기 보유를 감추려는 불투명성(nuclear opacity)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Avner Cohen, *Israel and Bomb*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277.

‘불량국가’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를 통칭한다.¹¹⁾ ‘불량국가’의 개념은 1990년 이라크-쿠웨이트 전쟁과 이후 전개된 1차 걸프 전쟁 경험에서 유래하였다. 1990년 8월 2일부터 4일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는데, 미국은 1991년 1차 걸프전쟁에서 승리한 후 냉전 기간 동안 구소련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던 군사교범에 ‘불량국가’의 개념을 추가했던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교범은 1차 걸프전쟁과 같은 전쟁을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를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과 “핵무기와 생화학 능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군사적 침략행위를 통하여 특정 지역을 지배하려는 불량 지도자”를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¹²⁾ 이후 ‘불량국가’는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세계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하며 … 대규모 군사력과 초기 단계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호전적 제3세계 국가”를 지칭하게 되었다.¹³⁾

불량국가과 관련된 개념으로 ‘악의 축’(Axis of Evil)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고 의심을 받던 이란, 이라크, 북한을 지칭했고,¹⁴⁾ ‘악의 축 근린국’(beyond the Axis of Evil)은 리비아, 시리아, 쿠바를 지칭했다.¹⁵⁾ ‘불량국가’의 범주에는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할 경제적·기술적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아프리카의 수단을 제외하면, 국가 차원의 테러 수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불량국가’의 개념이 1990년대 미국의 외교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개념의 핵심은 핵무기 개발 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행위가 불량국가를 표현하는 수식으로 사용되는 점이 이 개념의 정치적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냉전 후 미국이 세계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던 상황에서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곧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량국가’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핵무기 개발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11) Mary Caprioli and Peter F. Trumbore, “Rhetoric versus Reality: Rogue States in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9, No. 5 (2005), p. 770.

12)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1993), p. 19.

13) Michael Klare, *Rogue States and Nuclear Outlaws: America's Search for a New Foreign Policy* (New York, NY: Hills & Wang, 1995), p. 26.

14) President Georges W. Bush, “State of the Union Speech” (Washington D.C, 29 January 2002).

15) John Bolton, “Beyond the Axis of Evil” (Speech by John Bolton, 6 May 2002).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일치하지 않으며 동시에 미국이 재편하려던 세계질서와 부합하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불량국가’의 개념이 지닌 정치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은 특정 국가의 정상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2> 핵무기 확산에 관여하는 불량국가 (1970년 이후)

국 가	핵무기 프로그램	사실상 핵무기 보유	핵실험
남아프리카공화국	1971 - 1990	1979 - 1991 (자체 폐기)	
인도	1972 - 현재	1988 - 현재	1974, 1998
파키스탄	1972 - 현재	1987 - 현재	1998
북한	1982 - 현재	1994 - 현재	2006, 2009
유고슬라비아	1982 - 1987	해당사항 없음	
대만	1967 - 1976		
한국	1971 - 1975		
이란	1974 - 1978 1984 - 현재		
이라크	1973 - 2002		
아르헨티나	1976 - 1990		
브라질	1978 - 1990		
루마니아	1981 - 1989		
리비아	1981 -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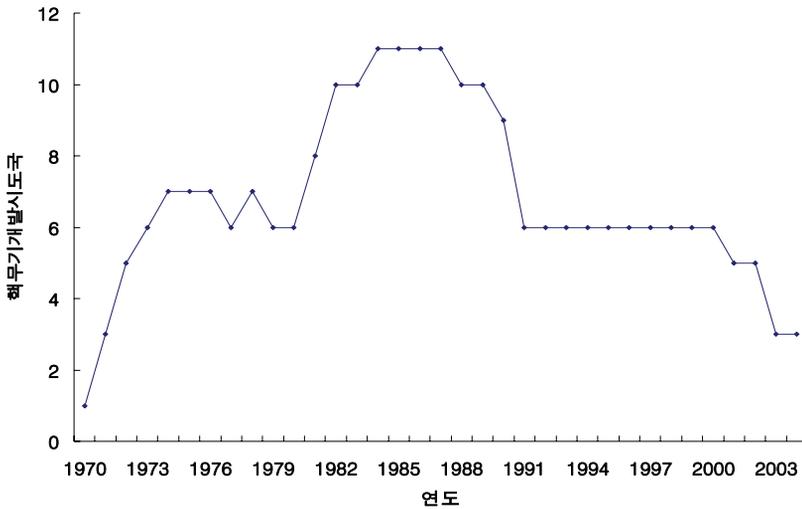
자료: Dong-Joon Jo and Erik Gartzke, 2005, “Data Notes for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 Quantitative Model.” (available from the authors by request).

<표 II-2>와 <그림 II-1>은 핵무기 확산을 시도했거나 시도하고 있는 국가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 핵확산방지조약이 발효된 이후에도 여러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해왔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파키스탄, 한국, 대만,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1974년 인도의 ‘평화적 핵실험’ 이후 이란,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핵무기 개발에 뛰어 들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북한, 유고, 루마니아 등 공산권 국가가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였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공산권의 경제적 침체로 통상 전력에 기반을 둔 경쟁을 견딜 수 없게 됨에 따라 핵무기 개발을 택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북아프리카에서

는 리비아가 핵무기 개발에 뛰어 들었다. 리비아는 1968년부터 중국으로부터 핵무기 구입을 추진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1970년대 후반 리비아는 생화학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듯했으나, 1981년부터 원자로 건설을 시작했던 점으로 보아 핵무기 개발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1>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수

(5개 핵보유 선언국과 이스라엘 제외)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초래한다. 1970년대 발효된 핵확산방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은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대만과 한국이 가장 먼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상호 자제를 약속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였다. 리비아도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되었다.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였다.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이 주도한 직접적 군사개입으로 강제적으로 중단되었다.

반면, 인도, 파키스탄, 북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인도는 1974년 ‘평화적 핵실험’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였지만, 파키

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시점까지는 핵무기 보유를 자제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 이후에도 바로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내적 불안을 경험하고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국내정치적 이유로 핵실험을 거행하였다. 북한도 핵무기 보유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다가 국제정세가 불리한 시점에서 핵실험을 진행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핵무기를 폐기하였다. 이처럼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는 작업은 고도의 정치적 선택을 포함한다.

다.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

국제사회에서 ‘불량정권’이라 함은, 국제질서에 도전하지는 않더라도 집단 학살에 근접할 정도의 박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차별, 부패 등 국가주권의 이름으로 만행을 자행하는 정권을 지칭한다.¹⁶⁾ 캄보디아의 폴 포트(Pol Pot) 정권, 우간다의 이디 아민(Idi Amin) 정권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들 정권은 통상적인 독재나 압제의 수준을 넘어 국내에서 특정 사회세력을 조직적으로 박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 또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초래하고 있다. 인권보호가 국제규범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국내적으로 인권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국가가 ‘국제규범 위반국’으로 규정되었다. 비록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지만, 냉전 이후 인권탄압 여부는 정권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불량정권’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는 표현은 전체주의적 독재국으로서 벨라루스, 버마(미얀마), 쿠바, 이란, 북한, 짐바브웨 등에 사용되어왔다.¹⁷⁾

인권 탄압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 탄압으로 인하여 불량국가로 규정될 수 있는 국가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캄보디아, 우간다, 르완다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학살이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행되었기 때문에,

16) Washington Post Editorial, "Rogue Regime," *Washington Post* (April 3, 1979), p.A18.

17) Glenn Kessler, "Rice Stays Close to Bush Policies in Hearing," *Washington Post* (19 January 2005). 벨라루스, 버마, 쿠바, 이란, 북한, 짐바브웨는 미국 국무장관 라이스에 의하여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된 국가이다. 이들 국가는 통상적인 독재 국가와 다르게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한 집단으로 묶이고 있다. 버마와 쿠바는 일당 독재, 벨라루스, 짐바브웨, 북한은 일인 독재, 이란은 신정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독재와 구별된다.

비정상 국가로 규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특히, 캄보디아와 르완다 사례는 인종학살에 근접할 정도이다. 우간다의 경우 이디 아민 행정부는 8년 통치기 최소 10만 명의 반대파를 처형하였다.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이 정도 처형 규모는 비정상 여부를 판별하는데 충분하게 보인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색인차별정책을 실시한 사례를 들어 해당 정권을 불량정권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은 194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당시 기준에서 보면 비정상 국가로 판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권 보호국을 자부하던 미국에서조차도 인종차별정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비정상 국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지목하는 시점으로 1958년이 선택된 이유는 유색인에 대한 참정권 박탈을 들 수 있다. 유색인에 대한 참정권 박탈은 참정권 확대를 경험하는 인류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정책을 더욱 심화하였다. 1990년이 되어서 인종차별정책이 완화되고, 1994년에 이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이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량정권’의 개념도 냉전 이후 민주주의 확산을 시도하던 미국의 외교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외교정책에서 ‘불량정권’으로 지목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인권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동시에 반미 성향을 보이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 탄압이 자행되는 경우에도 친서방·친미국 성향을 보일 경우 ‘불량정권’이라는 오명을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미국의 정치적 판단이 투영된 개념으로서 ‘불량정권’은 조직적 인권 탄압을 그 핵심요소로 하고 있지만,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한다.

한 나라가 ‘불량정권’인지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인종학살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¹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¹⁹⁾의 준수 여부다. 우선 인종학살은 국적, 인종,

18) 인종학살금지협약은 국제연합 결의안 UN/Res/260(III, 9 December 1948)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제연합 결의안 UN/Res/2200A(XXI, 16 December 1966)을 바탕으로 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1976년 3월 23일 발효되었다.

종교에 근거한 집단에 대한 살해,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경제적 박해, 재산상 통제와 특정 집단에 속한 아이에 대한 강제 이송 행위를 포함한다. 제2차 대전 동안 발생했던 인종학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강력한 국제규범을 창설함으로써 인종학살의 재발을 막으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준수 여부도 정권의 불량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인종학살보다도 ‘정치학살(politicide)’ 현상이 국제사회에서 더 심각한 쟁점이 되었다. 이 기간 중 이념 경쟁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는 집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정치적 지향의 차이를 용인해야 한다는 규범으로 발전되었다.

다음의 <표 II-3>은 정치학살(politicide)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했던 정권들을 보여준다. 정치적 지향, 인종, 민족, 종교에 기반을 둔 특정 집단을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초래해왔다.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정권은 주권독립, 내정불간섭 원칙을 근거로 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시하려 하지만, 불량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 관행은 국제관습법 수준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3> 조직적 인권 탄압에 관여하는 불량정권

국가	시작 연월	종결 연월	사유
Afghanistan	1978년 4월	1992년 4월	아프가니스탄 공산정권이 반정부세력을 조직적 테러, 마을파괴, 포로처형 등으로 억압. 매년 최소 만 6천명 사망 (1984~85년 사이 최소 10만명 이상 사망).
Algeria	1962년 7월	1962년 12월	알제리 독립군이 유럽인과 프랑스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인사들 학살 (최소 만 6천명).
Angola	1975년 11월	1994년 11월	National Union for Independence of Angola(UNITA)와 Popular Movement of the Liberation of Angola(MPLA)간 내전에서 인종학살 발생함. 1994년 11월 Lusaka 의정서에 합의함으로써 내전 종결. 내전 기간 중 매년 최소 4천명 학살당함 (1987년부터 1990년, 1992년부터 1994년 내전이 악화되고 매년 최소 3만 2천명 사망).

국가	시작 연월	종결 연월	사유
Angola	1998년 12월	2002년 12월	UNITA와 정부군간 휴전이 1998년 12월 깨어진 후 내전 지속. 2002년 3월 교전 당사자간 합의로 내전 종식 (매년 최소 1만 6천명 사망).
Argentina	1976년 3월	1980년 4월	군사 쿠데타 발생 후 계엄령 선포. 반정부 세력에 대한 고문, 납치, 암살이 발생함 (매년 최소 천명 실종).
Bosnia	1992년 5월	1995년 4월	보스니아 독립선언 후 세르비아계 민병대, 크로아티아계 민병대, 보스니아 정부군 간 내전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약 13만명 학살). 1995년 Dayton 합의로 내전 종식.
Myanmar	1978년 1월	1978년 12월	버마 정부군이 Arakanese 이슬람 지역에서 대규모 학살 (최소 4천명).
Burundi	1965년 10월	1973년 12월	Hutu반란 이후 Tutsis 정부군이 Hutu족 공격 (1972년 10월부터 1973년 12월 사이 최소 6만 4천명 학살).
	1988년 8월	1993년 12월	Hutu족의 반정부활동 이후 Tutsis정부가 Hutu족 탄압 (최소 8천명 사망).
	1993년 10월	1993년 12월	Tutsis계 반란군과 Hutu정부군 간 내전 (최소 3만 2천명 사망).
Cambodia	1975년 4월	1979년 1월	Khmer Rouge 공산정권의 정치 학살이 진행됨.
Chile	1973년 9월	1976년 12월	군사 쿠데타 발생 후 구정권과 좌파 세력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 시작.
China	1959년 3월	1959년 12월	공산군의 티벳 점령 후, 티벳 불교계, 지주, 장개석 정권 지지자에 대한 학살 (최소 6만 4천명).
	1966년 5월	1975년 3월	문화혁명기 홍위병에 의한 조직적인 정치적 탄압과 처형이 진행됨 (매년 최소 3만 2천명 학살).
Zaire	1964년 2월	1965년 2월	콩고 독립군이 유럽인, 선교사, 지식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정치 탄압.
	1977년 3월	1979년 12월	정부군이 반정부 활동에 대하여 조직적 탄압을 진행.
El Salvador	1980년 1월	1989년 12월	반정부 소요사태를 직면한 정부가 좌파 노동운동가, 해방신학인, 지식인 등에 대하여 조직적 탄압을 진행 (1980년부터 1982년까지 매년 최소 8천명 학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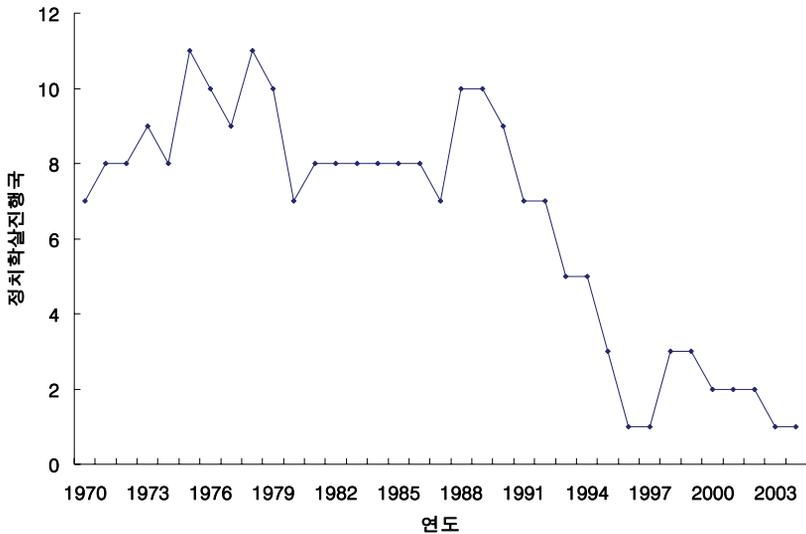
국가	시작 연월	종결 연월	사유
Equatorial Guinea	1969년 3월	1979년 8월	Macias 대통령이 스페인계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를 취한 후, 쿠데타 발생. 정부군이 반정부세력은 물론 Bubi 분리주의 세력에 대하여 조직적 탄압 (1969년부터 1970년 사이 매년 최소 4천명 사망).
Ethiopia	1976년 7월	1979년 12월	정부군이 급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사회 세력을 조직적으로 탄압 (1978년 최소 4천명 사망).
Guatemala	1978년 7월	1990년 12월	군사정권이 반정부세력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진행함 (1982년 최소 3만 2천명 사망).
Indonesia	1965년 10월	1966년 7월	공산세력의 쿠데타 이후 정부군이 공산주의 추종세력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진행함 (1965년부터 1966년 사이 매년 최소 13만명 사망).
	1975년 12월	1992년 7월	인도네시아군이 동티모르에 진주 후 동티모르 독립세력을 조직적으로 탄압 (1975년 최소 3만 2천명 사망).
Iran	1981년 6월	1992년 12월	이슬람 혁명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후 반정부 세력에 대한 조직적 탄압.
Iraq	1963년 6월	1975년 3월	이라크 정부군이 Kurd 반군 통제 지역에서 조직적 탄압과 강제 이주.
	1988년 3월	1991년 6월	이라크 정부군이 Kurd 반군 통제 지역에서 조직적 탄압과 강제 이주를 진행함.
Nigeria	1967년 6월	1970년 1월	나이지리아정부가 Ibo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탄압. 1967년 5월 30일부터 Biafra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
Pakistan	1971년 3월	1971년 12월	파키스탄정부가 Bengali 민족주의 운동을 조직적으로 탄압. 방글라데시 독립으로 정치적 탄압이 종식됨.
	1973년 2월	1977년 7월	파키스탄 정부군이 Baluchi 반란 지역에서 조직적 탄압을 진행함 (1974년 최소 2천명 사망).
Philippines	1972년 9월	1976년 6월	필리핀 정부군이 Moro 저항세력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진행함 (1972년부터 1976년 사이 매년 최소 4천명 사망).
Rwanda	1963년 12월	1964년 6월	Tutsis계 반군의 공격 이후 Hutu 정부군이 Tutsis인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진행함.
	1994년 4월	1994년 7월	Tutsis계 RPF의 공격 이후 Hutu 정부군이 Tutsis인과 중도 Hutu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함.

국가	시작 연월	종결 연월	사유
Somalia	1988년 5월	1991년 1월	소말리아아 정부군이 북부 Somali National Movement의 반란지역에서 조직적 탄압을 진행함. 1991년 Said Barre 정권의 붕괴로 이어짐.
Sri Lanka	1989년 7월	1990년 1월	스리랑카 정부군이 공산 Sinhalese JVP의 반란 지역에서 조직적 탄압을 진행 (1990년 최소 1만 6천명 사망).
Sudan	1956년 10월	1972년 3월	수단 정부군이 남부 분리주의 세력에 대하여 조직적 탄압을 진행함.
	1983년 9월	2002년 10월	수단 정부군이 남부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와 Nuba 지역에서 조직적 탄압을 진행함. 2002년 7월 Machakos 의정서에 합의함으로써 내전 종식.
	2003년 7월	현재 진행	수단 정부군이 Darfur 지역에서 Fur, Zaghawa, Msaleit 등 비아랍 세력에게 조직적 탄압을 진행함.
Syria	1981년 4월	1982년 2월	시리아 정부군이 Hama와 Aleppo 지방에서 발생한 이슬람 반란을 조직적으로 진압함 (1981년부터 1982년 사이 매년 최소 1만명 사망).
Uganda	1971년 2월	1979년 4월	Amin 장군의 쿠데타 이후 반정부 세력에 대한 조직적 탄압이 진행됨 (1971년부터 1979년까지 매년 최소 1만 6천명 사망).
	1980년 12월	1986년 1월	Obote 수상의 집권 이후 Amin 대통령 추종세력과 반군세력에 대한 탄압이 진행됨 (1980년부터 1985년 매년 최소 1만 6천명 사망).
Vietnam South	1965년 1월	1975년 4월	남월남 정부군이 VietCong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조직적 탄압을 진행함 (1966년부터 1975년 4월 정부 붕괴 전까지 매년 최소 1만 6천명 사망).
Yugoslavia	1999년 2월	1999년 6월	유고 정부군이 Kosovo 지역에서 알바니아계 반군 지지세력을 조직적으로 탄압함. 1999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공습이 발생함.

자료: 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 2010, "Genocide and Politicide," *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tional Wars and Failure Governance, 1955-2009*.

다음의 <그림 II-2>는 불량정권이 1970~80년대에 상당수 존재하다가 냉전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이후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에 해당할 만큼 끔찍한 인권을 유리하는 국가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인권 관련 규범의 확산과 내재화이다. 1948년 국제연합의 인권선언은 인권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 원칙을 현실세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국제합의는 이후 계속하여 발전되고 성문화되고 있다. 둘째, 미국 외교정책의 성공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인권보호를 외교정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였다. 미국 국내정치에서 정권의 변동이 있고 민주화에 관한 우선순위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었지만, 미국 외교정책에서 민주화는 상수처럼 존재한다. 특히 냉전 이후 유일패권국이 된 미국의 강력한 인권정책이 정치학살과 인종학살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2> 불량정권(정치학살을 자행하는 나라)의 추세



자료: 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 2010, "Genocide and Politicide," *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tional Wars and Failure Governance, 1955-2009*.

2. 국제체제와 불량국가

국제사회의 불량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도전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이들이 국제체제의 '구성'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험적으로 보면, 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 아래서 불량국가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90년을 기점으로 핵무기프로그램을 폐기하는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앞의 <그림 II-1> 참조). 또한 1990년을 기점으로 인종학살 또는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도 급격하게 감소했다(앞의 <그림 II-2> 참조). 2002년 이후 인종학살 또는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로 유일하게 아프리카의 수단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는 곧 미국의 단일패권이 '불량국가'의 숫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개연성을 의미한다.

가. 패권과 동맹국 수

다음의 <표 II-4>는 1816년부터 2001년 패권의 상대적 강도를 [패권국의 국력지표/(패권국의 국력지표 + max(패권 도전국))]으로 측정된 결과를 보여 준다.²⁰⁾ 19세기 초반부터 제2차 대전 전까지는 영국이 패권국이었다. 1816년부터 1869년까지 프랑스와 러시아가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형국이었고, 1870년부터 2차대전 전까지는 독일이 영국 패권에 도전하는 형국이었다. 제2차 대전 이후에 들어와서는 미국이 패권국이 되었고, 냉전기 구소련이 미국 패권에 맞섰다. 냉전 이후에는 중국이 잠재적 패권도전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표 II-4> 패권의 상대적 강도 분포

백분위수	최소값	25	50	75	95	최대값
패권의 상대적 강도	0.244	0.533	0.650	0.723	0.826	0.902
평균=0.627; 표준편차=0.1361; 관찰 수=180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20) 국력지표는 (특정국의 군비/세계 군비 + 특정국의 에너지 사용량/세계 에너지 사용량)/2의 공식으로 측정한다. Correlates of War Project의 국력지표는 군인수, 군사비, 에너지 소비량, 철강생산량, 도시 인구, 총인구로 측정되는데, 총인구와 도시인구가 저개발국의 국력을 과도하게 측정한다는 비판이 있다. 인구로 인한 국력측정의 왜곡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력지표를 군비와 에너지 사용량으로 측정한다.

패권의 상대적 강도는 패권국의 동맹국 숫자와 패권 도전국의 동맹국 숫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패권국이 상대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패권국은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동맹국 숫자를 확장시킬 필요가 없다. 반면, 패권국이 강하면, 다른 국가들이 패권국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패권국의 동맹국이 늘어날 수도 있다. 패권국의 이해와 다른 국가의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패권 강도와 동맹국 숫자간 관계를 예측하기 어렵다.

반면, 패권의 상대적 강도는 패권 도전국의 동맹국 숫자간 관계도 예측하기 어렵다. 첫째, 패권의 상대적 강도와 패권 도전국의 동맹국 숫자간 역관계를 가질 수 있다. 패권의 상대적 강도가 높아지면, 패권 도전국을 지지하는 행위가 정치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패권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중소국을 공격하는 행위를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가들은 패권국에 맞서기보다는 이익을 위하여 편승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²¹⁾ 둘째, 패권의 상대적 강도와 패권 도전국의 동맹국 숫자가 정관계를 가질 수 있다. 강력한 패권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패권 도전국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국가들이 패권국에 대한 균형을 선택할 경우 패권 도전국의 동맹국 숫자가 늘어갈 수 있다.

다음의 <표 II-5>부터 <표 II-8>까지 살펴보면, 패권국이 더 많은 동맹국 숫자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권국의 동맹국 숫자, 패권국의 동맹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최강 패권도전의 동맹국 숫자/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맹국 숫자/비율은 패권국과 ‘최강 패권도전국’에 상관 없이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몇 극단적 사례가 패권국과 ‘최강 패권도전국’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수와 비율을 현상적으로 높게 보인다. 상위 5% 이상의 극단적 사례(주로 전시동맹)를 제외하면, 패권국 또는 ‘최강 패권도전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21) James Lee Ray, *Global Politics* (New York, NY: Houghton Mifflin Co., 2005), pp. 215~217.

22) Kenneth Waltz, "Structural Realism and Unipola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1 (2002), pp. 28~32.

<표 II-5> 패권국의 동맹국 분포 (절대 수)

백분위수	최소값	25	50	75	95	최대값
패권국의 동맹국	0	4	5	42	51	57
평균=16.5; 표준편차=19.34; 관찰 수=180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표 II-6> 패권국의 동맹국 분포 (비율)

백분위수	최소값	25	50	75	95	최대값
패권국의 동맹국	0	0.089	0.115	0.293	0.469	.5
평균=16.5; 표준편차=19.34; 관찰 수=180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표 II-7> 최강 패권도전국의 동맹국 분포 (절대 수)²³⁾

백분위수	최소값	25	50	75	95	최대값
최강 패권도전국의 동맹국	0	2	3	10	18	33
평균=5.55; 표준편차=5.83; 관찰 수=180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표 II-8> 최강 패권도전국 동맹국 분포 (비율)

백분위수	최소값	25	50	75	95	최대값
최강 패권도전국의 동맹국	0	0.046	0.077	0.103	0.136	0.2
평균=0.070; 표준편차=0.044; 관찰 수=180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23) '최강 패권도전국'은 패권 도전국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가장 높은 국력지표를 보유한 국가이다.

패권의 강도와 동맹국 숫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아래의 <표 II-9>와 <표 II-10>에서 볼 수 있듯이, 패권의 강도를 4등분한 상태에서 패권국의 동맹국 숫자가 전체 국가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결과는 패권의 강도와 편승 경향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패권의 강도와 ‘최강 패권도전국’의 동맹국 비율은 역관계(상관계수 = -0.2703; p-value = 0.0002)를 가진다. 즉, 패권이 강해지면, ‘최강 패권도전국’의 동맹국 숫자/비율이 감소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패권에 대한 세력균형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I-9> 패권의 강도와 패권국의 동맹국 비율

(패권국의 동맹국/전체 국가 수)

패권의 강도	평균	표준편차	관찰 수	F-계수	p-value
하위 25%	0.178325	0.10123	45	0.27	0.8494
하위 25%-중위값	0.188742	0.13322	45		
중위값-상위 25%	0.165278	0.15179	45		
상위 25%	0.176623	0.10621	45		
전체	0.177242	0.12405	180		

<표 II-10> 패권의 강도와 최강 패권도전국 동맹국 비율

(패권도전국의 동맹국/전체 국가 수)

패권의 강도	평균	표준편차	관찰 수	F-계수	p-value
하위 25%	0.081892	.0302783	45	7.23	0.0001
하위 25% ~ 중위값	0.084115	.0336405	45		
중위값 ~ 상위 25%	0.067433	.0504544	45		
상위 25%	0.048074	.0476838	45		
전체	0.070378	.0476838	180		

나. 미국의 패권과 불량국가

미국 패권의 강도는 ‘불량국가’의 숫자와 역관계, 그리고 미국 동맹국의 숫자와 정관계를 보이고 있다. 미국 패권의 강도를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국가와의 상대적 국력[미국의 국력지표 / (미국의 국력지표 + max(구소련의 국력지표, 중국의 국력지표))]으로 측정한 후,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불량국가’의 숫자와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0.8206 (p-value = 0.000)을 얻었다. 반면, 미국 패권의 강도는 미국의 동맹국 숫자 간 상관관계는 0.6642 (p-value = 0.000)으로 나타났다. 1970년부터 2001년까지를 연구시기로 잡았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가 냉전 후 특수상황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상관관계는 미국 패권이 강해지면서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모색하기보다는 미국으로 편승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패권이 강해지면 미국으로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결과와 비슷한 현상이 냉전기에서도 존재했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남미 국가들이 미국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해졌는데, 이런 변화가 미소관계의 변화를 반영했다. 냉전 초기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대응하는 구소련이 존재할 때, 남미 국가들은 국제연합에서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반면, 구소련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미국과 협력을 도모하고 남미로의 영향력 확장을 중단하자, 남미 국가들이 국제연합에서 미국에게 편승하였다. 미국 주도의 질서에 맞서게 될 경우, 외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남미 국가들이 미국에 도전하기 어려운 형국이 된 것이다.²⁴⁾

24) 국제연합에서 남미 국가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도가 구소련의 평화공존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Fernando H. Cardoso and Enzo Faletto,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p. 195. 구소련이 평화공존정책을 펴면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도전을 하지 않자, 남미 국가들에게 대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표 II-11> 미국 패권과 불량국가 수

(미국패권: 미국 국력지표/(미국 국력지표 + max(소련/러시아, 중국)))

연도	불량 국가	핵확산	테러 수출	정치 학살	국력지표			미국 패권
					미국	소련/ 러시아	중국	
1970	11	1	4	7	0.31	0.24	0.07	0.57
1971	14	3	4	8	0.29	0.24	0.07	0.55
1972	17	5	5	8	0.29	0.24	0.07	0.54
1973	17	6	5	9	0.27	0.24	0.07	0.53
1974	17	7	5	8	0.26	0.24	0.07	0.52
1975	20	7	5	11	0.25	0.25	0.07	0.50
1976	19	7	5	10	0.24	0.25	0.07	0.49
1977	17	6	5	9	0.24	0.25	0.07	0.49
1978	21	7	5	11	0.24	0.24	0.07	0.49
1979	20	6	6	10	0.23	0.24	0.06	0.49
1980	17	6	6	7	0.24	0.24	0.05	0.49
1981	19	8	6	8	0.25	0.25	0.05	0.50
1982	20	10	7	8	0.25	0.24	0.06	0.50
1983	21	10	7	8	0.25	0.25	0.06	0.50
1984	21	11	7	8	0.26	0.25	0.05	0.51
1985	21	11	7	8	0.27	0.27	0.04	0.50
1986	21	11	7	8	0.27	0.26	0.04	0.51
1987	20	11	7	7	0.26	0.26	0.04	0.50
1988	21	10	7	10	0.26	0.26	0.05	0.50
1989	21	10	8	10	0.30	0.17	0.05	0.64
1990	19	9	8	9	0.28	0.16	0.04	0.64
1991	13	6	7	7	0.26	0.16	0.05	0.63
1992	14	6	7	7	0.30	0.08	0.06	0.80
1993	13	6	7	5	0.32	0.06	0.06	0.83
1994	13	6	7	5	0.30	0.10	0.07	0.76
1995	11	6	7	3	0.29	0.09	0.07	0.77
1996	10	6	8	1	0.28	0.08	0.07	0.78
1997	10	6	8	1	0.30	0.08	0.07	0.80
1998	12	6	8	3	0.30	0.07	0.07	0.81
1999	12	6	8	3	0.31	0.07	0.07	0.81
2000	11	6	8	2	0.31	0.07	0.07	0.81
2001	9	5	7	2	0.32	0.07	0.08	0.81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위의 <표 II-11>은 ‘불량국가’에게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냉전 이후 미국 패권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가 많은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패권에 맞서는 강력한 도전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곧 대안의 부재를 의미한다. 2003년 이라크 전쟁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보이듯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맞설 경우 이러한 도전에 대해 도움을 주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없다. 단일 패권국으로서 미국은 그만큼 ‘불량국가’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다.

3. 불량국가의 국내적 속성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는 국가, 테러를 국가 차원에서 수출하는 국가, 인종학살 또는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정권을 통치하는 불량국가는 비정상국가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와 상이한 속성을 가진다. 이 절에서는 불량국가와 정상국가 간 속성 차이를 군사화 정도, 국내 정치체제, 산업화 정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가. 군사화

먼저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군사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군사화 정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 첫째, 군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정상국가에서는 인구 천 명당 현역 군인수가 6.2명인 반면, 불량국가에서는 현역 군인수가 매우 높다. 한편 ‘불량’의 속성 가운데 ‘정치학살’의 특징만을 보이는 국가의 경우 인구 천 명당 현역 군인수가 7.0명으로 정상국가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테러 수출 또는 핵무기프로그램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구 천 명당 현역 군인수가 16.2명으로 정상국가 현역 군인수의 세 배에 근접하고 있다. 다음의 <표 II-12>는 이러한 추세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II-12>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현역 군인수 차이

(천 명당 현역 군인수)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4692	6.20	6.83	273.52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175	7.01	9.51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343	16.24	14.52		
모든 국가		5210	6.89	8.07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한편 불량국가의 현역 군인수는 거듭제곱의 법칙(power-law)에 부합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현역 군인수의 분포는 최소값에 근접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천 명당 현역 군인수가 무려 77명에 근접한 극단적 사례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역 군인수의 분포는 오른쪽 꼬리가 긴 형태를 보인다. 백분위수 95위 이상의 이상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불량국가가 정상국가보다 군사화가 심화되어 있는 모습은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II-31>은 이러한 현황을 보여준다.

<표 II-13> 천 명당 현역 군인수의 분포

백분위수	최소값	25	50	75	95	최대값
현역 군인수	0	1.7	4.3	8.9	22.0	76.9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둘째,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군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한다. 다음의 <표 II-14>와 <표 II-15>는 모든 국가를 ‘정상국가’와 ‘불량국가’로 분류한 후, 연간 군사비 총액 간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정상국가의 평균 군사비 지출이 연간 45억 달러인 반면, 불량국가의 군사비 총액은 연간 25억 달러이다. 언뜻 보면, 정상국가가 불량국가보다 군사비를 더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연간 군사비 총액은 극심한 거듭제곱의 법칙에 부합하는

분포도를 보인다. 연간 군사비 총액의 중위값이 1억9천만 달러인데 반하여, 평균 군사비 총액은 43억 달러이다. 즉, 일부 정상국가가 엄청나게 군사비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상성과 연간 군사비 총액 간 관계를 현상적으로 왜곡되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인 것이다.

<표 II-14>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군사비 차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계수	p-value
정상국가	4478	4,501.5	2.41e+7	0	3.22e+5	1.8296	0.0674
불량국가	495	2,518.2	3,892.3	356	2.85e+4		
모든 국가	4973	4,304.1	2.29e+7	0	3.22e+5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표 II-15> 연간 군사비 분포 (단위: 백만 달러)

백분위수	최소값	25	50	75	95	최대값
현역 군인수	0	31.2	200.2	1,592.3	1.36e+4	3.22e+5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표 II-16>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군사비 차이

(단위: 백만 달러; 상위 5% 극단사례 제외)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4240	999.4	1,792.7	96.10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148	594.4			753.2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329	2,538.1			2,521.0
모든 국가	4717	1,094.0	2,029.5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위의 <표 II-16>은 불량국가가 정상국가보다 더 많이 군사비를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상국가 가운데 극단적으로 군사비를 사용하는 상위 5%

를 제외하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정치학살’을 자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량국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연간 군사비 평균이 정상국가보다도 낮다. 반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테러를 국가 차원에서 수출하는 이유로 불량국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연간 군사비 평균이 정상국가의 두 배를 상회한다. 즉, 불량국가 가운데서 핵확산을 추구하거나 테러를 수출하는 행위로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국가의 경우 과도하게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정치체제의 비민주성

<표 II-17>과 <표 II-18>을 보면, 불량국가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1970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표 분포는 쌍봉형태를 보인다. 약 46%의 국가의 민주주의 지표가 0으로 나타나서 최다 관찰수를 보인다. 반면, 민주주의 지표의 최대치인 10은 두 번째로 높은 관찰수를 보이고 있다. 최소값 근처에 많은 관찰수가 모여면서 동시에 최대치 근처에도 상당히 많은 관찰수가 보인다. 반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가운데 지점에는 관찰수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3.909)이 중위값보다 높기 때문에, 민주주의 지표는 최대값 근처에 상당한 분포를 보인다.

<표 II-17> 민주주의 지표의 분포 (사분위)

백분위수	최소값	25	50	75	95	최대값
민주주의 지표	0	0	1	8	10	10

자료: Monty G. Marshall and Keith Jaggers, 2008. “Polity IV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06.”

<표 II-18> 민주주의 지표의 분포 (백분율)

민주주의	관찰 수	백분율	구분	백분율
0	2,269	46.0%	비민주	53.0%
1	207	4.2%		
2	140	2.8%		

민주주의	관찰 수	백분율	구분	백분율
3	95	1.9%	혼합	10.5%
4	72	1.5%		
5	115	2.3%		
6	236	4.8%		
7	257	5.2%	민주	36.5%
8	346	7.0%		
9	296	6.0%		
10	900	18.2%		
합	4,933	100.0%	평균	3.909

자료: Marshall and Jaggers, 2008.

<표 II-19>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민주주의 차이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4417	4.18066	4.25116	94.95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151	0.82119			1.91863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365	1.89589			3.26656
모든 국가	4933	3.90877	4.21177			

자료: Marshall and Jaggers, 2008.

위의 <표 II-19>를 보면,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민주주의 평균 지표가 낮다. 정상국가의 민주주의 평균지표는 4.18인 반면,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의 민주주의 평균지표는 0.82, 핵무기프로그램 보유국 및 테러수출국의 민주주의 평균지표는 1.90이다. ‘정치학살’ 자행국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평균지표가 낮은 현상은 당연하게 보인다.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지표가 최소값 또는 최소값 근처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25)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 가운데 엘살바도르의 민주주의 지표가 6(1984~1989), 수단 민주주의 지표가 8(1986~1988), 스리랑카의 민주주의가 지표가 6(1989~1990)이다. 상기의 세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의 민주주의는 매우 약하다.

반면, 핵무기프로그램 보유국 및 테러수출국의 민주주의 평균지표가 ‘정치학살’을 자행하는 국가의 민주주의 지표보다 높은 현상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핵무기프로그램을 가진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경우, 민주주의 지표가 7~8(1985~1990),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 지표가 8(1983~1990), 인도의 민주주의 지표가 7~9(1972~2001), 파키스탄의 민주주의 지표가 7~8(1973~1976, 1988~1996)이다. 비민주주의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일반적인 믿음과 다르게 민주주의 국가도 국제사회의 비확산규범을 무시하는 불량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²⁶⁾

<표 II-20> 정치체제의 속성과 불량국가의 분포

		정상국가	불량국	합	Pearson Chi ²
정치체제	비민주	2,211	405	2,616	149.98 (p-value = 0.000)
		84.52%	15.48%		
	혼합체제	492	26	518	
		94.98%	5.02%		
	민주	1,714	85	1,799	
		95.28	4.72%		
합		4,417	516	4,933	

위의 <표 II-20>은 정치체제의 속성에 따른 불량국가의 분포를 보여준다. 비민주주의 국가군의 경우 불량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5.48%이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군의 경우 불량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4.72%에 불과하다. 혼합체제 국가군의 경우, 불량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2%로 민주주의 국가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표 II-20>은 정상국가화가 민주주의 도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향유하면서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다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경로에 있는 국가 또는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국가가

26) 일단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핵무기 보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Dong-Joon Jo and Erik Gartzke,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 Quantitative Model" 참조.

불량국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4. 불량국가의 관계적 특징

불량국가는 타국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정상국가’와 상이하게 행동한다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다. 불량국가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주 ‘기피국가(pariah state)’로 묘사되곤 한다. 또한, 불량국가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은 미국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우려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다.²⁷⁾ 더 나아가 불량국가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묘사된다.²⁸⁾ 그렇다면 불량국가의 행위는 어느 정도로 ‘비정상적’인가? 여기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불량국가의 외교관계, 분쟁, 상호작용의 양태를 비교 검토한다.

가. 불량국가의 외교행태

국제사회의 ‘기피국가’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강대국 정치구조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없으며,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사회의 소통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는 국가를 지칭한다.²⁹⁾ 기피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기피 대상으로 발전하는 인과사슬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게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기피국가는 외교적 고립과 국제사회의 비난이라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음의 <표 II-21>에서 볼 수 있듯이, 기피국가는 국가차원의 테러 수출, 핵무기 개발, 내정간섭, 조직적 인권탄압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기피국가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7) Klare, *Rogue States and Nuclear Outlaws*, pp. 25~26; William J. Perry, “Defense in an Age of Hope,” *Foreign Affairs*, Vol. 75, No. 6, pp. 64~79; US Department of Defense (1993), p. 19.

28) Barry Rubin, “US Foreign Policy and Rogue States,” *Middle East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 No. 3 (1999), pp. 72~77.

29) Robert E. Harkavy, “Pariah States and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5, No. 1 (1981), p. 135.

<표 II -21> 국제사회에서 기피국가로 언급된 국가들

사유	기피국
테러 수출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 파키스탄, 남아공, 한국, 대만
내정간섭	에리트리아(소말리아 반군지원, 1990-2000년대)
인권탄압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대만(계엄령, 1971~1987), 적도 기니(1969~1979, 1996-현재), 아이티(군부독재+인권탄압, 1991~1994),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스라엘(민족자결무시, 1948~현재), 북한, 리베리아(내전+학살, 1989~2002), 사우디아라비아(종교적 불관용), 남아공(흑백차별+인종자결 무시, 1948~1994), 투르크메니스탄(독재, 1991~현재), 우간다, 우즈베크스탄(1991~현재), 짐바브웨(독재, 1980~현재)

위의 표를 보면, 국제사회의 기피국가와 불량국가의 리스트가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차원의 테러수출에 관여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9개국 가운데, 시리아, 수단, 그리고 남예멘이 ‘기피국가’로 분류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반면,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은 ‘기피국가’로 분류된다(중첩율 = 6/9).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13개국 가운데, 인도, 유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루마니아는 ‘기피국가’로 분류되지 않는다.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통상적으로 지역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루마니아와 유고의 핵무기프로그램은 시작 단계에서 폐기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 파키스탄, 남아공, 한국, 대만 등 8개국은 ‘기피국가’로 언급된 적이 있다(중첩율 = 8/13).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했던 국가 29개국 가운데, 12개국(아프가니스탄, 버마,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중국, 적도 기니,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북한, 남아공, 우간다)이 ‘기피국가’로 분류된 적이 있다. 한편,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한 29개국 가운데 17개국(알제리, 앙골라, 보스니아, 부룬디, 자이레,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필리핀,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남베트남, 유고)은 ‘기피국가’로 분류된 적이 없다(중첩율 = 12/29).

또한 ‘기피국가’와 ‘불량국가’가 서로 중첩되지 않는 영역에 7개국이 자리

잡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소말리아 북부 군벌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S/Res/1907, 23 December 2009)까지 받았다. 에리트리아는 국제사회의 오랜 관행인 내정불간섭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도 외교적 고립을 당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오랫동안 ‘기피국가’로 분류되어왔다. 영토 문제와 팔레스타인의 자결 문제로 이스라엘은 주변국으로부터 외교적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는 명백한 ‘인종학살’ 또는 ‘정치학살’을 자행하지는 않으나, 오랜 독재국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표 II-22> 상주외교사절 비율의 분포³⁰⁾

백분위수	최소값	25	50	75	95	최대값
외교적 승인 비율	0	0.1229	0.2670	0.4426	0.7756	0.9487

자료: Resat Bayer, “The Correlates of War Diplomatic Exchange Data Set” (Version 2006.1) <<http://www.correlatesofwar.org>>.

위의 <표 II-22>는 한 국가에 상주외교사절단을 파견한 국가와 전체 국가 간 비율의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상주외교사절단 수용이 전무한 국가로부터 거의 모든 국가의 외교사절단이 상주하는 국가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주외교사절 비율의 평균이 0.3051이고 중위값이 0.2670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국가는 최소값 근처에 몰려 있는 반면, 최대값 주변에는 극소수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주외교사절의 비율은 거듭제곱 분포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 II-23>은 불량국가에 관한 통상적 인식과 일치하지 않은 경험적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불량국가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불량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테러를 수출한다는 비난을 받는 국가들은 오히려 정상국가에

30) 상주외교사절 비율은 ‘외교관계를 가진 국가의 숫자/전체 국가’로 측정한다. Bayer는 외교적 관계를 5년 주기로 대사급, 공사급, 대리대사 및 공사(chargé d'affaires), 기타급으로 측정한다.

비해 더 많은 상주외교사절단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거나 테러를 수출하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상주외교사절단이 상대적으로 적게 파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불량국가의 외교적 고립이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국가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는 외교적 고립을 당하기보다는 외교적 승인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이는 불량국가에 대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참조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23>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상주외교사절 비율 차이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1220	0.29696	0.22487	16.47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37	0.27995			0.14997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79	0.44203			0.14749
모든 국가	1336	0.30507	0.22189			

다음의 <표 II-24>는 불량국가에 관한 통상적 인식과 일치하지 않은 경험적 자료를 보여준다. 상주사절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불량국가에 더 많은 외교사절이 상주한다. 또한, 통상적 인식과 반대로 미국과의 동맹구조 일치도와 국력지표가 상주외교사절 비율과 역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미국과 동맹구조가 유사한 국가와 국력 자산을 많이 가진 국가에 외교사절이 상대적으로 적게 상주함을 의미한다. 반면, 무역비중과 민주주의 척도는 통상적 인식과 달리 상주외교사절 비율과 정관계를 가진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교사절이 상주한다는 뜻이다.

<표 II-24> 상주외교사절 비유에 관한 회귀분석 (1970~2005)

독립변수	계수	S.E.	t-계수	p-value
불량국가	0.10893	0.02053	5.30	0.000
핵무기 보유	-0.07963	0.05381	-1.48	0.139
국력지표	-0.61260	0.34460	-1.78	0.076
무역 비중	5.98029	0.54431	10.99	0.000
강대국 (세계)	0.186611	0.04536	4.11	0.000
강대국 (지역)	0.029292	0.03458	0.85	0.397
민주주의	0.005279	0.00185	2.84	0.005
미국과 동맹구조 일치도	-0.07533	0.03870	-1.95	0.052
상수	0.315678	.0157684	20.02	0.000
관찰수			773	
F-계수			57.22	0.000
Adjusted-R ²			0.3681	

다음 <표 II-25>는 잠재적 외교사절수용국과 잠재적 외교사절파견국 사이에 상주외교사절의 수용에 관한 이항 Logit 분석과 순위 Logit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이항 Logit 분석 종속변수는 상주외교사절이 잠재적 수용국에 상주하는지 여부이며, 순위 Logit 분석 종속변수는 대사급(3점), 공사급(2점), 대리대사/공사(chargé d'affaires, 1점), 상주외교사절 전무(0점)로 측정된다.³¹⁾ 이 표는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잠재적 외교사절수용국 또는 잠재적 외교사절파견국이 불량국가이면 상주외교사절의 수용할 개연성이 높다. 이 결과는 불량국가가 외교적 고립을 당한다는 기존 통설과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잠재적 외교사절 수용국 또는 잠재적 외교사절 파견국의 핵무기 보유, 강대국 지위, 국력 지표, 민주주의는 상주외교사절의 수용 개연성과 정관계를 가진다. 이는 외교사절의 수용 및 파견에 관한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잠재적 외교사절수용국과 잠재적 외교사절 파견국간 관계의 속성을 측정하는 변수들도 기존 연구결과와 대부분 유사하다. 한 가지 예외는 두 국가 간 동맹구조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외교사절수용

31) 외교사절단의 직급을 구분할 수 없는 행태(예: 무역대표부)는 순위 Logit 분석에서는 실측치(missing value)로 처리한다.

의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II-25> 상주사절 수용에 관한 Maximum Likelihood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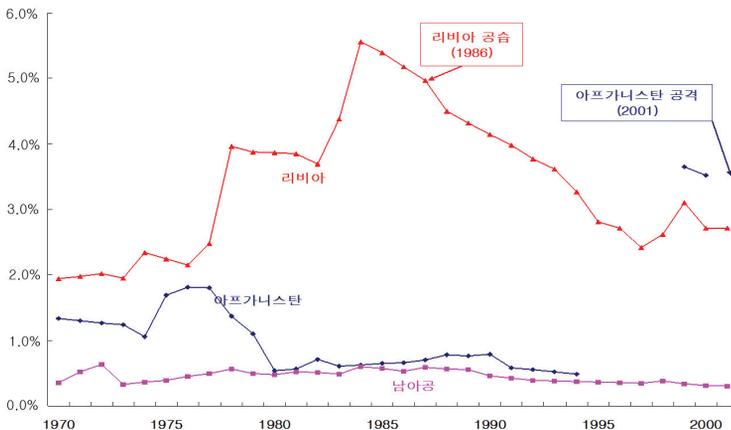
독립변수	이항 Logit 분석			순위 Logit 분석		
	계수	S.E.	p-value	계수	S.E.	p-value
수용국						
불량국가 A	0.168	0.015	0.000	0.153	0.015	0.000
핵무기 보유 A	0.033	0.038	0.386	0.014	0.038	0.706
강대국(세계) A	0.693	0.033	0.000	0.681	0.030	0.000
강대국(지역) A	0.253	0.023	0.000	0.255	0.023	0.000
국력지표 A	4.099	0.507	0.000	3.141	0.375	0.000
민주주의 A	0.015	0.001	0.000	0.016	0.001	0.000
파견국						
불량국가 B	0.367	0.016	0.000	0.334	0.015	0.000
핵무기 보유 B	0.139	0.038	0.000	0.168	0.038	0.000
강대국(세계) B	0.708	0.052	0.000	0.793	0.042	0.000
강대국(지역) B	0.090	0.028	0.001	0.095	0.025	0.000
국력지표 B	9.093	1.384	0.000	6.847	0.970	0.000
민주주의 B	0.016	0.001	0.000	0.016	0.001	0.000
관계 속성						
무력분쟁	-0.481	0.095	0.000	-0.462	0.086	0.000
군사경쟁	-0.626	0.166	0.000	-0.671	0.149	0.000
동맹	0.974	0.019	0.000	0.944	0.019	0.000
동맹구조 일치도	-0.821	0.020	0.000	-0.834	0.020	0.000
수용국 무역의존도	1870.5	152.5	0.000	507.3	361.6	0.161
정치체제 상이도	0.013	0.001	0.000	0.014	0.001	0.000
근접여부	0.289	0.014	0.000	0.292	0.013	0.000
수도간 거리	-0.384	0.007	0.000	-0.376	0.007	0.000
상수	1.218	0.058	0.000			
/cut1				-1.158	0.053	
/cut2				-1.076	0.053	
/cut3				-1.075	0.053	
관찰수	98310			97858		
Log pseudolikelihood	-54462			-63775		
Wald chi2(20)	13239		0.000	13774		0.000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불량국가의 외교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일관되게 이들이 외교적 고립을 당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정권이 외교적 고립을 당하는 듯 보이지만,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국가 차원의 테러 수출국과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교사절이 상주한다. 이 연구결과는 불량국가에 관한 기존 통설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불량국가에 대하여 더 많은 외교사절을 파견함으로써 불량국가와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나. 불량국가와 무력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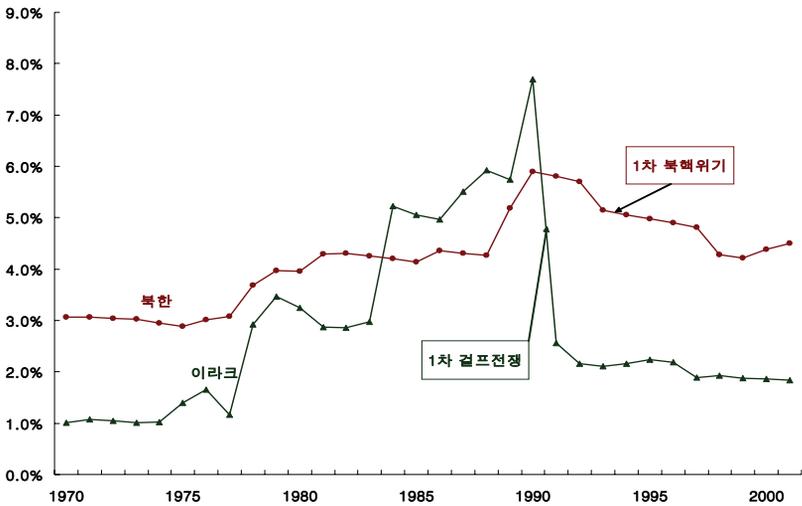
지금까지 불량국가는 국제질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고 묘사되어왔다. 경험적으로 보면, 불량국가의 군사화 정도가 국제사회의 갈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그림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비아와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사회와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경험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과 전쟁을 치렀고, 1986년 리비아는 미국의 공습을 받았다. 이러한 두 ‘비정상국가’가 국제사회와 충돌을 경험한 시점이 두 불량국가의 군사화가 최고점을 지난 직후임을 알 수 있다. 리비아와 아프가니스탄은 군인 수를 갑자기 늘인 직후, 국제사회와 무력충돌을 경험했다.

<그림 II-3>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군사화



다음의 <그림 II-4>도 군사화 정도와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1차 걸프전쟁은 이라크의 군사화가 급격하게 이루어 직후 발생하였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한 시점을 전후하여 이라크의 군사화가 진행되었던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라크의 군사화는 이미 1984년부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급격한 군사화를 추진한 이후, 1993년부터 미국 및 한국과 심각한 갈등 국면을 맞이하였다. 1994년 영변 폭격안이 검토될 정도로 북한은 국제사회와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림 II-4> 북한과 이라크의 군사화



한편 <그림 II-3>에서 본 바와 같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군사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완만하게 약화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던 1970년대 초반과 핵무기 완성에 근접했던 1970년대 후반, 핵무기 운송수단의 개발에 착수했던 1980년대 중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군사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군사화 정도가 높았던 세 시점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시작 또는 심화 결정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군사화와 핵개발이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1984년 이후 군사화가 서서히 약화되면서 국제사

회와의 갈등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다음의 <표 II-26>은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군사행위에 관여한 횟수의 분포를 보이는데, 무력분쟁에 관여되는 현상은 예외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위값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현상은 특정 소수의 무력분쟁에 많은 국가가 다량으로 관여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0년 구유고의 경우 총 40개국과 무력분쟁에 관여되었는데, 이는 구유고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했던 ‘인종청소’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 가운데 최소 11개국, 최대 20개국이 구유고에게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군사적 행동을 취했다. 1999년에는 21개국이, 2000년에는 40개국이 구유고에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군사적 행동을 취했다.

또한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최소 12개국에서 최대 28개국이 이란에 대하여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행동을 취했고, 1980년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했던 구소련이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군사행동의 집중적 대상이었다. 1999년에는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 17개국으로부터 유고 사태에 관여하지 말라는 군사적 위협을 받았다. 이라크도 1984년부터 1985년, 1987년, 1990년부터 1991년, 1999년 집중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직접적 행동의 대상이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이라크의 편을 든 요르단이 집중적으로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 15개국이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군사행동이 취해졌다. 이와 같은 소수의 극단적 사례로 인하여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에 관여되는 횟수의 평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표 II-26> 무력분쟁 관여 횟수의 분포³²⁾

백분위수	최소값	25	50	75	95	최대값
무력분쟁 관여 횟수	0	0	0	1	3	40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32) 상주외교사절 비율은(외교관계를 가진 국가의 숫자/전체 국가)로 측정한다. Bayer는 외교적 관계를 5년 주기로 대사급, 공사급, 대리대사/공사(chargé d'affaires), 기타 급으로 측정한다(Bayer, "The Correlates of War Diplomatic Exchange Data Set").

<표 II-27>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무력분쟁 관여 횟수 차이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6061	0.41313	1.19041	220.75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176	1.61363			3.19260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388	1.84020			3.19887
모든 국가	625	0.52860	1.51914			

자료: Correlates of War Project 2007.

불량국가는 국제사회에 정말 위협적 존재인가? 위의 <표 II-27>은 불량 국가가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에 많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정권이 무력분쟁에 관여되는 횟수는 정상국가의 3.9배, 테러 수출 또는 핵무기프로그램 보유국이 무력분쟁에 관여되는 횟수는 정상국의 4.5배에 달한다.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무력분쟁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불량국가가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여된다는 분석결과는 Poisson 회귀분석에서도 드러난다. 핵무기보유여부와 국력 지표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움직인다.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국력 자원을 많이 가지거나,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거나, 지역 강대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무력분쟁에 관여된다. 또한, 동맹국 숫자가 많거나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국가가 많거나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무력분쟁에 관여된다. 이 세 가지 변수는 국제분쟁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무력분쟁에 관여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표 II-28>은 이러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28> 무력분쟁 관여 횟수에 관한 Poisson 회귀분석

독립변수	계수	S.E.	Z	p-value
불량국가	0.964	0.099	9.72	0.0000
핵무기 보유	0.418	0.147	2.85	0.0040
국력지표	2.882	0.698	4.13	0.0000

독립변수	계수	S.E.	Z	p-value
동맹국 숫자	0.009	0.003	3.11	0.0020
강대국(세계)	0.095	0.241	0.39	0.6930
강대국(지역)	0.540	0.190	2.84	0.0050
무역개방도	0.001	0.001	1.28	0.2000
GDP per capita	0.000	0.000	4.29	0.0000
민주주의	-0.023	0.007	-3.32	0.0010
군사적 경쟁국 수	0.503	0.054	9.23	0.0000
국가 수	0.008	0.002	4.37	0.0000
상수	-2.327	0.307	-7.58	0.0000
관찰수			3893	
Wald $\chi^2(11)$			1412.71	0.0000
Pseudo R^2			0.1784	

<표 II-29> 무력분쟁 개시에 관한 Logit 분석

독립변수	계수	S.E.	Z	p-value
잠재적 유발국				
불량국가 A	0.462	0.034	13.720	0.000
핵무기 보유 A	-0.057	0.120	-0.480	0.633
강대국(세계) A	1.574	0.424	3.710	0.000
강대국(지역) A	-0.079	0.091	-0.860	0.387
국력지표 A	0.509	0.052	9.820	0.000
민주주의 A	-0.004	0.004	-1.270	0.205
잠재적 대상국				
불량국가 B	0.148	0.044	3.360	0.001
핵무기 보유 B	-0.100	0.124	-0.810	0.420
강대국(세계) B	1.373	0.463	2.960	0.003
강대국(지역) B	0.180	0.079	2.290	0.022
국력지표 B	0.077	0.069	1.110	0.268
민주주의 B	0.010	0.004	2.530	0.011
관계 속성				
군사경쟁	0.691	0.079	8.790	0.000
동맹	-0.054	0.047	-1.150	0.252
동맹구조 일치도	-0.128	0.071	-1.800	0.072

독립변수	계수	S.E.	Z	p-value
수용국의 무역의존도	-1276.68	711.070	-1.800	0.073
정치체제 상이도	0.011	0.004	2.650	0.008
근접여부	-0.207	0.041	-5.030	0.000
수도간 거리	-0.060	0.024	-2.470	0.013
상수	-1.753	0.083	-21.050	0.000
관찰수			398260	
Log pseudolikelihood			-3649.12	0.000
Wald chi ² (19)			4044.55	
Pseudo R ²			0.297	

한편 불량국가는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시하며 동시에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의 대상이 된다. 위의 <표 II-29>의 종속변수는 1년 동안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을 먼저 시작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즉, 무력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먼저 개시한 국가만이 관측치 '1'로 기록되는 반면, 무력분쟁의 대상국의 관측치는 '0'으로 처리된다. 이 표에서는 지역강대국과 국력이 강한 국가가 무력분쟁을 더 많이 개시하며, 동시에 무력분쟁의 대상국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 간 군사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맹구조 일치도가 낮은 경우, 정치체제 상이도가 높은 경우, 근접한 경우, 무역관계가 낮은 경우에 무력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핵무기 보유, 세계 수준의 강대국 여부, 동맹 여부는 무력분쟁의 개시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하게도 민주주의 국가가 무력분쟁의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주의 자체는 무력분쟁의 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합하면, 불량국가는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을 개시할 개연성이 높고, 동시에 무력분쟁의 대상이 될 개연성도 높다. 불량국가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은 경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³³⁾ 국제규범의 준수 여부를 둘러싼 갈등선이 실제 군사적 무력충돌선으로 확장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33) 불량국가와 무력분쟁이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Mary Caprioli and Peter F. Trumbore, "Rhetoric versus Reality: Rogue States in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9, No. 5 (2005), pp. 783~787 참조.

다.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

불량국가가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무력분쟁에 관여된다는 이상의 경험적인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불량국가가 국제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전반적인 관계는 이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불량국가가 국제사회와 우호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불량국가가 국제사회와 우호적으로 상호작용할 의사가 있거나 실제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응방식과 조응하지 못함으로써 불량국가가 무력분쟁에 관여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불량국가의 무력분쟁 관여는 그 나라의 국가적 속성에 기인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불량국가가 국제사회와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동시에 분석해야만 불량국가와 국제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균형 있게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 (1990~2004)’에 나타난 국가 간 상호작용의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냉전 후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를 분석하려 한다.³⁴⁾ 이 자료는 냉전 후 국제관계의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상기 자료에서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현상을 일 단위로 Goldstein의 협력-갈등 점수로 변환한 자료를 사용한다.³⁵⁾ 방향성을 가진 국제관계의 쌍(directed dyad)에서 발생한 국제관계를 일 단위로 합산하여 협력행위의 숫자, 협력점수, 갈등행위의 숫자, 갈등점수를 계산하면, 한 쌍에서의 국가 간 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한 국가 단위로 합산하면, 한 국가와 국제사회의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의 <표 II-30>은 그 결과이다.

34) Gary King, 2007,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 (1990~2004).” 상기 자료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한 상호작용(비국가행위자와 국제기구를 행위자로 포함; 전쟁과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까지 포함)을 총 244개 범주로 분류한다. <<http://gking.harvard.edu/events/>>.

35) Joshua S. Goldstein,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6, No. 2 (1992), pp. 369~385. Goldstein 점수표에서 협력에 해당되는 상호작용은 0,1(‘Ask for Information’)에서 8,3(‘Extended Military Assistance’)까지 측정되며, 갈등에 해당되는 상호작용은 0,1(‘Request Action’) and ‘Call for’)에서 10(‘Military Attack, Clash, Assault’)까지 측정된다.

<표 II-30> 국가가 국제사회로 보내는 협력적 신호의 사례와 점수

(분석단위: '국가-월(country-month)')

백분위수	최소값	25	50	75	95	최대값
협력 사례의 숫자	0	0	0	3	24	348
협력 점수	0	0	0	9.5	57.1	797.7

자료: Gony King, 2007,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 (1990~2004)," <<http://gking.harvard.edu/events/>>.

다음의 <표 II-31>과 <표 II-32>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게 보낸 협력의 신호 사례와 점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특히 <표 II-31>은 국제관계에서 협력적 신호가 예외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 달에 한 국가가 약 5회의 협력적 신호를 다른 국가에게 보내지만, 협력적 신호를 보내는 국가는 소수로 세계 차원의 강대국과 지역 차원의 강대국만을 포함한다. 일부 중진국이 협력적 신호를 보내지만, 이것은 예외적 현상이다. 반면, 강대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는 다른 국가에게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즉, 국가간 협력적 상호작용은 일부 국가에게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표 II-31>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협력적 신호의 사례 및 차이

(분석단위: '국가-월(country-month)')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31487	4.95683	18.4536	34.61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384	4.41145			7.24991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1632	8.76409			12.1831
모든 국가	33503	5.13604	18.1259			

자료: Gony King, 2007,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 (1990~2004)," <<http://gking.harvard.edu/events/>>.

<표 II-32>는 불량국가가 정상국가보다 더 많이 협력적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량국가 가운데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또는 테러 수출국

이 국제사회로 보내는 협력적 신호는 정상국가의 협력적 신호의 2배에 육박한다. 반면, ‘불량정권’과 정상국가는 협력적 신호의 숫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표에서는 협력적 신호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과 테러 수출국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협력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불량정권’은 정상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력의 정도가 낮다.

〈표 II-32〉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협력적 신호의 점수 차이

(분석단위: ‘국가-월(country-month)’)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31487	12.6534	45.723542	26.16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384	10.5346			16.7657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1632	20.7820			27.5716
모든 국가	33503	13.0250	44.8128			

자료: Gony King, 2007,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 (1990~2004),”
<<http://gking.harvard.edu/events/>>.

〈표 II-33〉 국가가 국제사회로 보내는 갈등적 신호의 사례와 점수

(분석단위: ‘국가-월(country-month)’)

백분위수	최소값	25	50	75	95	최대값
협력 사례의 숫자	0	0	0	0	6	378
협력 점수	0	0	0	0	22.6	2263.8

자료: Gony King, 2007,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 (1990~2004),”
<<http://gking.harvard.edu/events/>>.

위의 <표 II-33>은 국제관계에서 갈등적 신호가 예외적임을 보여준다. 한 달에 한 국가가 약 5.1회의 갈등적 신호를 다른 국가에게 보내고 있지만, 갈등적 신호를 보내는 국가는 소수이며, 세계 차원의 강대국과 지역 차원의 강대국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갈등적 신호는 예외적 현상이다. 반면, 강대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는 다른 국가에게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즉, 국가 간 갈등적 상호작용은 일부 국가에게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II-34>는 불량국가가 정상국가보다 더 많은 갈등적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량국가 가운데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또는 테러 수출국이 국제사회로 보내는 갈등적 신호는 정상국가의 협력적 신호의 2배에 육박한다. ‘불량정권’도 정상국가에 비하여 갈등적 신호를 더 많이 보낸다. <표 II-35>는 갈등적 신호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과 테러 수출국이 다른 국가에게 갈등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량정권’도 정상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갈등의 정도가 높다. 이 연구결과는 통상적 인식과 부합하며, 불량국가가 정상국가보다 국제사회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34>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갈등적 신호의 사례 및 차이

(분석단위: ‘국가-월(country-month)’)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31487	4.88338	17.6827	49.75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384	5.77083			9.54333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1632	9.27757			12.7164
모든 국가	33503	5.10760	17.4262			

자료: Gony King, 2007,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 (1990~2004),”
<<http://gking.harvard.edu/events/>>.

<표 II-35> 정상국가와 불량국가 간 갈등적 신호의 점수 차이

(분석단위: ‘국가-월(country-month)’)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31487	12.3275	42.2845	54.96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384	16.4848			26.5853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1632	23.2788			31.9245
모든 국가	33503	12.9086	41.7587			

자료: Gony King, 2007,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 (1990~2004),”
<<http://gking.harvard.edu/events/>>.

한편, 국가와 국제사회간 갈등과 협력의 상호작용을 종합하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의 <표 II-36>과 <표 II-37>은 협력점수에서 갈등점수를 뺀 점수로 ‘평화지수’를 계산한 후, ‘정상국가,’ ‘불량정권,’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및 테러 수출국’으로 구분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II-36>은 불량국가가 정상국가에 비하여 다른 국가에게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인다. 반면,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불량정권’은 국제사회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음을 보인다. <표 II-37>은 국제사회가 불량국가에 대하여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함을 보여준다. 반면,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불량정권’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한하고 있다.

<표 II-36> 국가-국제사회 간 평화지수(협력점수-갈등점수) 차이

(분석단위: ‘국가-월(country-month)’)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31487	5.68660	46.1361	15.38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384	1.76458			23.0717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1632	11.7455			36.7063
모든 국가	33503	5.93679	45.5416			

자료: Gony King, 2007,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 (1990~2004),” <<http://gking.harvard.edu/events/>>.

<표 II-37> 국제사회-국가간 평화지수(협력점수-갈등점수)의 차이

(분석단위: ‘국가-월(country-month)’)

구분	관찰 수	평균	표준 편차	F-계수	p-value	
정상국가	31487	6.30221	42.1231	13.19	0.000	
불량국가	정치학살	384	3.55729			23.4396
	핵무기프로그램/ 테러 수출	1632	11.5537			39.9699
모든 국가	33503	6.52657	41.8691			

자료: Gony King, 2007,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 (1990~2004),” <<http://gking.harvard.edu/events/>>.

이상의 연구결과는 두 가지로 종합된다. 첫째,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불량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반면, 핵무기프로그램 보유국 또는 테러 수출국은 정상국가에 비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즉, 통상적으로 알려진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갈등은 국제사회와 ‘불량정권’ 사이에 존재한다. 둘째, ‘불량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그리고 테러 수출국은 국제사회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더 많은 협력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와 국제사회 간 갈등 및 협력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결과로 볼 때,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가 일반적인 통설과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불량국가가 국제사회에 대하여 갈등적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불량국가에 대하여 갈등적 상호작용을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3장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제3장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

1. 문제제기

이 장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소위 비정상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들의 속성과 행동규칙을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비정상국가는 국제사회(international community)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기준의 한계를 벗어나 있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서 취약국가(혹은 실패국가)와 불량국가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렇지만 비정상국가에 관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정상의 조건을 구성하는 ‘기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량국가의 경우, 미국의 외교정책적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취약국가 역시 선진 원조 공여국의 자의적 정의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속성을 밝힘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 공통분모 격으로 활용되어온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비정상국가들은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테러리즘 등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 가능성 때문에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9·11 이후 미국의 외교와 국방 부문에서 국가실패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 작업이 진행되었고,³⁶⁾ 유럽도 국가실패가 유럽연합(EU)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³⁷⁾ 같은 맥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원조 공여국들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곤경에 처한 저소득국가’(LICUS, 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프로그램과 함께 소위 ‘취약국가 이니셔티브’(Fragile States Initiative)를 발족시켰다.³⁸⁾

36) US Government,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02).

37) European Council, *A Secure Europe in a Better World: European Security Strategy* (Brussels: European Union, 2003).

하지만 많은 저술들은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국제안보, 인도적 탄압, 인권침해 행위 등 정치군사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다. 주민 억압, 국제테러리즘 지원, 대량살상무기 추구 등 거의 비경제적인 요소로써 규정된 불량국가에 비하면, 취약국가나 실패국가는 국가기능의 약화를 전제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변수가 상대적으로 더 고려되었지만, 일차적으로 국제 안보에의 함의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경제적 궁핍은 국가들의 공격적 성향을 자극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진 마이어 (Eugene Meyer)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는 1946년 제1차 연차총회에서 “경제적 곤궁은 전쟁의 일차적 온상이다. 그것은 침략을 유일한 탈출구로 만든다. 따라서 더 나은 생활수준이야말로 평화의 불가결한 조건이다”고 강조했다.³⁹⁾ 이 점에서 불량국가를 포함한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속성을 밝히는 연구도 필요하다는 게 이 장의 문제의식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국가의 비정상적 행태로 귀결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분석적 편의를 위하여 비정상국가를 실패국가와 불량국가 두 부류로 나누고 어떤 경제 지표들이 국가 행태를 정상궤도에서 이탈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논한다. 이어 비정상국가를 식별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경제 지표들을 추출하고, 어느 국가가 비정상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표본으로 분류된 국가들의 속성 및 대외적 상호작용 파라미터를 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조명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비정상국가의 본원적, 행태적 특질에 관한 가상 데이터를 산출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38) OECD,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Paris: OECD, 2005); World Bank, *Engaging with Fragile States: An IEG Review of World Bank Support to 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Washington, DC: World Bank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2006).

39) “World Bank Group Archives Series 4478: President Eugene Meyer Speeches, Box 1,” September 27, 1946.

2. 정치경제의 비정상성

가. 취약국가

국가의 취약성(fragility)은 부분적 취약성에서 전반적인 붕괴내지 실패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의 취약성을 포괄한다.⁴⁰⁾ 따라서 취약국가의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취약성의 정도 또한 일률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그리고 정치학 저술에 따르면, 경제적 취약성은 국가실패의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다음의 <표 III-1>은 개괄적인 구성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1> 국가 취약성의 주요 구성요소

영역	효과성	정당성
안보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범죄를 제약하기 위한 군사력 및 경찰력	합당하고 공정하며 인권을 위반하지 않는 군사력 및 경찰력
정치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정치제도 및 과정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치과정과 규범 및 지도자
경제	경제성장(직업 포함)을 지원하고 경제적 변화에 적응하며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경제 및 금융제도와 인프라	접근 가능하며 합당하게 투명하고, 자연자원 접근과 관리가 가능한 경제 제도 및 금융서비스와 소득창출 기회
사회	취약 집단 및 소수 집단을 포함, 사회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다양한 관습과 문화 및 신념체계에 대한 관용

자료: USAID, *Measuring Fragility: Indicators and Methods for Rating State Performance* (Washington, DC: USAID, 2005), p. 4.

첫째, <표 III-1>과 같이, 미국 원조청(USAID, 2005)은 취약국가를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 네 영역에서 효과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국가로 정의한 바 있다.⁴¹⁾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국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천연자원을

40) 부분적 취약성을 가진 국가들은 '취약국가 또는 실패 중인 국가(weak or failing state)'로, 전면적 취약성을 갖는 국가는 '실패국가(failed state)' 혹은 '국가 붕괴(collapsed state)'로 구분할 수 있다.

41) USAID, *Measuring Fragility*. 효과성(effectiveness)은 질서, 공공재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당성(legitimacy)은 정부가 권력을 공정하고 또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요 사회부문의 인식을 의미한다.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제 및 금융 인프라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국가들이다. 한 국가의 경제적 효과성과 정당성이 악화될수록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 붕괴(1983년 나이지리아), 권위주의 정부의 승계위기(1991년 소련), 높은 수준의 국가 부패(1996년 필리핀), 게릴라 반란(2000년 콜롬비아), 인종분규 및 대량학살(1994년 르완다), 경제 붕괴(1990년대 자이르), 그리고 초인플레이션(1980년대 초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USAID는 취약성에 노출된 국가의 상황과 이들의 취약성 정도와 정치적 불안정의 추세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Conflict and Fragility Alert, Consultation, and Tracking System(C/FACTS)’을 운영해왔다. C/FACTS는 (1) GDP, 1인당 GDP, 유아사망률, 레짐 유형 등 구조적(structural) 지표, (2) 대립과 협력 사례 등 개인과 집단의 행태적(behavioral) 지표, (3) 여론(opinion) 지표 등을 종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의 취약성 정도를 서술하고, 무력 충돌이나 다른 형태의 정치적 불안정 위험을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세계은행은 취약국가의 의미와 매우 유사하게도 ‘곤경에 처한 저소득 국가(LICUS)’라는 개념을 통해, 정책·제도·거버넌스 등 세 부문의 취약성 여부를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세계은행은 취약국가들을 위기지속, 거버넌스 악화, 점진 개혁, 정치적 이행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점진개혁 국가와 정치적 이행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만 개발차관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이러한 4가지의 유형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은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를 개발한 바 있다. 그리고 CPIA 점수가 3.2 미만을 기록한 저소득 국가를 취약국가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CPIA가 3.0 미만이거나 관련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는 국가는 ‘핵심(core) 취약국가로’, 3.0 이상 3.2 미만에 해당하는 국가는 ‘한계(marginal) 취약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75%는 지속적인 무력충돌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취약국가 유형⁴²⁾

취약국가 유형	특 징
위기지속국가 (prolonged cri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와 정상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 - 통치 및 정책환경은 매우 취약함. - 정권은 권위주의적이며 정치적 상황은 불안정한 상태임.
통치체제 약화국가 (deteriorating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불안 속에서 통치 및 정책환경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음. -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환경 속에서 안보상황도 악화되고 있음.
점진적 개혁국가 (gradual reform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치 및 정책환경은 취약하며, 개혁의 진전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국제사회가 개입하고 있으나, 정부는 원조공여자들의 조율된 개입을 장려하지 않음.
정치적 이행국가 (political trans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교체로 정책방향이 변경되어 개혁의 전망이 크게 밝아짐. - 정부는 국제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정책대화를 개시함. - 그러나 정치적 이행은 아직 불안정하며,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 남아 있음.

셋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정치불안정지수(PII, Political Instability Index)’는 사회적·정치적 소요에 대한 취약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정치학 저술을 바탕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수량화했다.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의 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PITF) 작업을 기초로 한 PII는 심각한 정도의 불안정 상태의 발생을 사후적으로 80%이상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PITF 예측모델은 네 개의 요인, 즉 유아사망률로 측정되는 발전 정도, 사회적 소수에 대한 극단적인 정치·경제적 차별 사례, 인접국의 폭력 갈등, 그리고 레짐 유형(regime typ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II는 불안정의 발생을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불안정의 정도나 지속기간 및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42) World Bank, *Engaging with Fragile States*, p. 4; 김석진,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09-106), p. 86 재인용.

PII는 또 불평등, 역사적인 불안정 경험, 인종적 분열, 거버넌스, 노동분규 성향, 공공서비스 공급 수준, 국가 강도(state strength) 등을 고려한다. 경제적 역경은 정치적 불안정의 선행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0년 이후로 역(逆) 정권교체(adverse regime change) 사례 50건 중 46건은 소요 발생 1~2년 전에 1인당 GDP의 감소를 경험한 바 있다. PII에서 정치적 불안정(political unrest)이라 함은 정부 내지 기존의 정치질서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의회적(extra-parliamentary)이고 탈제도적인(extra-institutional) 위협을 일컫는다. PII는 기초적 취약성과 경제적 역경 두 카테고리의 지표를 산술평균하여 0(no vulnerability)부터 10(highest vulnerability)까지 불안정의 정도를 측정한다.

넷째, 평화기금(Fund for Peace)의 실패국가지수(FSI, Failed States Index)는 사회, 경제, 정치 등 세 영역에서 12개의 지표를 활용, 각국이 어느 정도 폭력적 충돌에 취약한지 측정했다. 사회적 지표는 인구 압력, 난민, 집단 불만, 인적 유출 등을 포함하고, 경제적 지표는 불균등 개발, 경제적 쇠퇴 등이 고려되었다. 정치적인 요인에는 국가의 탈정당화, 공공 서비스, 인권, 안보 기관, 엘리트 분열, 외부 개입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몇몇 대학과 연구소 차원에서도 실패국가의 징후를 지표화 하려는 시도가 진행된 바 있다. 먼저, 캐나다 칼튼대학(Carleton University)의 ‘국가취약성지표 프로젝트(CIFP, Country Indicators for Fragility Project)’는 거버넌스, 경제, 안보, 인적개발, 인구통계, 그리고 환경 등 여섯 부문을 총괄하는 종합지수를 개발했다. 경제 지표에는 경제성장,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 거시경제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세부 지표와 더불어 CIFP는 권위(authority), 정당성(legitimacy), 역량(capacity) 등 국가성(stateness)의 세 차원에서 국가의 강약을 고려했다. 권위는 주민에 대해 구속력 있는 입법을 할 수 있고 안정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능력을 말한다. 정당성은 정권에 대한 공중의 충성을 확보하고 입법과 정책 이행에 관한 국내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그리고 역량은 생산적인 용도를 위해 공공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⁴³⁾ 이 중 한 차원에서의 취약성은 국가의 전반적인

43) David Carment, Stewart Prest and Yiyagadeesen Samy, “Determinants of State Fragility and Implications for Aid Allocation: An Assessment Based on the Country Indicators for Foreign Policy Project,”

취약성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지표가 6.5이상인 사례들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국가(country performing poorly relative to others)로, 상위 5%에 속하는 사례를 최악의 성과 국가(country among worst global performers)로 분류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라이스와 패트릭(Rice and Patrick)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복지 등 정부기능의 네 가지 핵심적인 기능에 관련된 20개의 지표를 토대로 141개 개도국 및 이전경제의 ‘국가 취약성(state weakness)’ 정도를 측정했다.⁴⁴⁾ 이 국가취약성지수(ISW, Index of State Weakness)경제 항목에 속하는 지표는 경제성장률, 경제정책의 질, 소득 분배의 공평성 등으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 환경의 수립 능력을 나타낸다. 정치제도의 질과 거버넌스 시스템의 정당성 기준으로 정부의 책임성, 민주화 정도, 표현의 자유, 관료의 효과성, 독립성, 책임성 등 정치적 지표를 고려한다. 아울러 안보 지표는 무력 충돌의 빈도, 정치권력의 불법적 획득, 정치적 불안정 인식, 분쟁 지역의 범위, 인권침해와 정치적 폭력의 정도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지표는 영양상태, 교육, 식수 및 위생 등 시민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잴다.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의 마셜 등도 인구 50만 명 이상의 국가를 표본으로 ‘국가취약성지수(State Fragility Index and Matrix)’를 개발했다.⁴⁵⁾ 이 지수는 안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등 네 가지의 성과 영역에서 효과성(effectiveness)과 정당성(legitimacy)에 관한 각국의 점수를 도출한 것이다. 경제지표는 2009년부터 0(no fragility), 1(low fragility), 2(mediaum fragility), 3(high fragility), 4(extreme fragility) 등 다섯 단계로 나누고, 다른 여타 지표는 네 단계로 구분했다. 안보지표는 정치적 폭력과 국가억압의 정도를, 정치지표는 거버넌스 안정성 및 포용 정도를, 경제지표는 1인당 GDP와 공산품 수출 비중을, 그리고 사회지표는 인적자본

UNU-WZDER Research Paper No, 2008/46 참조.

44) Susan E. Rice and Stewart Patrick,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Developing Worl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7).

45) Monty G. Marshall and Jack Goldstone, *Global Report on Conflict, Governance, and State Fragility* (George Mason University, 2007); Monty G. Marshall and Benjamin R. Cole, *Global Report 2009: Conflict, Governance, and State Fragility* (Center for Systemic Peace of George Mason University, 2009).

개발과 유아사망률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밖에 매릴랜드대학(University of Maryland)의 국제개발갈등관리센터(CIDCM,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는 2001년부터 ‘Peace and Conflict Ledger(PCL)’를 산출해 왔다. 앞서 논의된 지표와 다른 점은 국가의 취약성을 사전적으로 미리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 PCL은 국가들의 평화 구축 역량, 자결운동의 성공적 관리, 안정된 민주주의 제도의 유지, 물질 자원의 확보, 그리고 외부위협에의 부재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와 같이 데이터 생산자에 따라 사용되는 지표는 일관되지 않지만, 경제 변수들은 취약국가의 불가결한 요소를 구성한다. 각 지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부록>에 상술되어 있다.

나. 불량국가의 경제적 측면

불량국가는 국제규범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국가로 정의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불량국가는 주로 대내적 행태에 기초하여 규정되었다. 즉 정권의 극심한 국내 행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초래한 국가들로 이해되었다.⁴⁶⁾ 이들의 잔학성은 대외적 행태이기보다는 대체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 의식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초부터 미국 외교정책 결정자들은 불량국가의 대외적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미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Caprioli and Trumbore 2005). 특히 2001년 9·11 이후 미국 외교가에서 불량국가는 포스트 소비에트 안보위협과 동일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로 인하여 미국의 불량국가 독트린은 ‘핵 및 생화학무기를 추구하고 군사적 공격을 통해 지역적 지배를 확보하려는 불량 지도자(rogue leaders)’를 겨냥한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이 되었다.⁴⁷⁾

46) Lewis A. Dunn, “Nuclear Gray Marketeer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 1, No. 3 (1977); Lawrence Freeman, “British Foreign Policy to 1985: IV, Britain and the Arms Trade,”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3 (1978).

47) US Department of State,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앞서 지적했듯이 불량국가에 대한 논의는 취약국가에 비해 경제적인 요인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해왔다. 예를 들어 리트윅은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지원을 불량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삼았다. 그는 불량국가의 의미가 대두한 것은 미 국무부가 1979년부터 발간한 테러리즘 지원국 리스트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때를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리비아는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인접국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감행한다는 이유로 ‘불량 정권(rogue regime)’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1980년대 말부터 불량국가의 개념 속에 대량살상무기(WMD)의 추구 행위가 추가되기 시작했다. 외교적으로 고립된 국가들이 WMD를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1970년대부터 존재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소위 ‘기피국가(pariah state)’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하여 자신의 안보를 담보할 목적으로 WMD를 획득하려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⁴⁸⁾ 이와 같은 방어적 불량국가의 의미는 1980년대 말 냉전의 와해가 진행되면서 공격적인 뉘앙스가 가미되었다. 이때 불량국가는 국제사회의 처벌을 받지 않고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WMD를 보유하려 하는 국가들로 여겨졌다. 한 예로 탠터(Tanter)는 재래식 무기, 테러리즘, 핵 능력 추구 등을 기초로 하여, 그리고 카프리오리와 트럼보어(Caprioli and Trumbore)는 테러리즘과 WMD 등을 기준으로 불량국가를 구별해내려고 했다.⁴⁹⁾

2000년대에는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이 불량국가의 속성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⁵⁰⁾ 그 배경에는 WMD와 테러리즘을 지표로 할 경우 잡아낼 수 없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사실상 핵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불량국가로 지칭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규모의 대내적 억압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불량국가의 행태로 간주했다. 이러한 속성은 불량국가들이 가하는 외부적 위협보다는

1993), p. 19.

48) Richard Burt,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Spread of New Conventional Weapons Technolo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 No. 3 (1977), pp. 119~139; Robert E. Harkavy, "Pariah States and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5, No. 1 (1981), pp. 135~163.

49) Tanter, Mary Caprioli and Peter F. Trumbore, "Identifying 'Rogue' States and Testing their Interstate Conflict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9, No. 3 (2003).

50) Paul Hoyt, "The 'Rogue State' Image in American Foreign Policy," *Global Society*, Vol. 14 (2000), pp. 297~310; Miroslav Nincic, *Renegade Regimes: Confronting Deviant Behavio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특정 레짐의 속성에 더 밀접하다. 불량국가의 대외적 행태로부터 대내적 속성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이유는 성과 인종을 기반으로 국내적인 차별과 억압을 가하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공격성과 폭력성을 띠기 쉽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은 국내적 정치문화와 규범이 국제적 행동으로 외부화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달리 말하면, 국제적인 행동 규범과 규칙은 국내 정치행위의 규범과 규칙의 연장에 다른 아니다.⁵¹⁾

이런 맥락에서 카프리올리와 트럼보어는 양성평등, 인종차별, 국가억압을 지표로 불량국가를 정의하였다.⁵²⁾ 양성평등은 여성의 노동참여율과 출산율로써, 인종차별은 정치적·경제적 차별 정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국가억압은 인권탄압의 정도로써 측정했다. 한편, 국가의 특정 행태가 아닌 미국 외교정책 담당자—예를 들어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인식을 바탕으로 불량국가를 규정한 경우도 있다.⁵³⁾

이상과 같이 불량국가의 경우에는 취약국가와 달리, 주로 비경제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춰 다루어져왔다. 요컨대, 불량국가는 자국 국민을 억압하고 국제 테러리즘을 촉진하며, WMD를 추구하거나 국제공동체의 외곽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제규범을 경시하는 국가로 정의되고 있다.⁵⁴⁾ 통제를 활용하여 불량국가를 유형화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변수는 통제 변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⁵⁵⁾

하지만, 경제 변수는 불량국가의 대내외적인 행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불량국가(행태)와 취약국가 간의 친화성이다. 취약국가를 구성하는 제반 조건들이 이들의 대외적 공격성과 무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국가안보 문서들은 취약국가를 네 가지 위협 영역, 즉 (1) 테러리즘, (2) 국제범죄, (3) 핵 확산, (4) 지역적 불안정 등에 연계시키고

51) Bruce Russett, *Controlling the Sword: The Democratic Governance of National Secur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O Neal (2001).

52) Caprioli and Trumbore, "Identifying 'Rogue' States,"

53) K. P. O'Reilly, "Perceiving Rogue States: The Use of the 'Rogue State' Concept by U.S. Foreign Policy Elites," *Foreign Policy Analysis*, Vol. 3 (2007), pp. 295~315.

54) Thomas H. Henriksen, "The Rise and Decline of Rogue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2 (2001), pp. 349~373.

55) Caprioli and Trumbore, "Identifying 'Rogue' States," p. 396.

있다.⁵⁶⁾ 취약국가들은 테러리즘의 일차적인 작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취약국가의 느슨한 법치를 이용하여 테러 활동, 훈련장 운영, 무기구입 자금의 조달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⁵⁷⁾ 또한 취약국가는 국제규범의 틀을 벗어나 국제범죄 조직의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마약과 무기의 불법거래, 돈세탁 등 범죄조직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취약국가의 허약한 거버넌스가 촉매제 구실을 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제범죄조직은 테러집단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에 따르면, 43개 테러조직 중 절반에 가까운 19개가 마약밀매 조직과 연결돼 있었다. 취약국가는 WMD의 확산에도 기여하는데, 이는 핵·생화학·방사능 물질의 유통을 통제할만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6년까지 1080건의 핵 및 방사능 물질 밀매는 허술한 국경 통제로 인한 것이었다.⁵⁸⁾ 더구나 이러한 국가의 취약성은 난민 이동이나 무기 밀수 등을 통해 인접국가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요컨대, WMD, 테러리즘, 국가실패, 지역적 불안정은 소위 ‘위협의 수렴(threat convergence)’⁵⁹⁾ 현상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공범이라는 점에서 취약국가와 불량국가의 대내외적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다.

3.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특징

여기에서는 먼저 비정상국가, 즉 취약국가와 불량국가의 경제적 속성과 대외적 상호작용의 파라미터를 추출하기 위해 관련 경제지표가 무엇인지, 또 비정상국가는 어떤 국가들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56) Liana Sun Wylar, "Weak and Failing States: Evolving Security Threats and US Policy" (CBS Report for Congress RL34252, August 28, 2008), p. 6.

57) 반대로 테러리즘은 취약국가보다는 정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정상국가를 활동기반으로 할 유인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Edward Newman, "Weak States, State Failure, and Terrorism,"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19 (2007), pp. 463~488.

58) IAEA, *Illicit Trafficking Database* (Vienna: IAEA, 2006); Wylar, "Weak and Failing States," p. 8 재인용.

59) Fund for Peace, *Threat Convergence: New Pathways to Proliferation?* (Washington, DC: Fund for Peace, 2006).

가. 경제지표

비정상국가는 경성개념(hard concept)과 연성개념(soft concept)을 모두 포함한다. 경성개념이 근원적(fundamental) 기준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라면, 연성개념은 파생적(derived) 측정방법에 의해 형성된다.⁶⁰⁾ 전자는 개념의 지표들이 개념 자체에 담겨져 있어 이론적 추론 작업이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량살상무기의 추구나 국제규범으로부터의 이탈 행위로 정의되는 비정상국가는 경성개념에 가깝다.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금융규범의 위반 여부를 핵심 지표로 삼는다면 비정상국가는 경성개념이 된다. 다만 국제금융규범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반면 연성개념은 개념 자체의 구성요소와 그 결과 간의 연결이 간접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 과정이 부가되어야 한다. 대체로 경제적 요인으로 본 비정상국가는, 비정상성 자체보다는 그 대내외적 행태에 관심을 둘 경우, 하나의 연성개념으로서 이론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비정상국가를 식별하고, 그 속성과 행동규칙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기존 연구의 이론적·경험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래의 논의는 비정상국가의 경성 및 연성 개념적 요소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의 경제적 속성과 대외적 상호작용을 고찰한다.

1인당 GDP

취약국가는 국가기능의 저하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근원 중 하나는 경제적 빈곤이다. 1인당 GDP가 낮을수록 내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빈곤의 결과인 낮은 기대수명도 국가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⁶¹⁾ 그 원인은 첫째, 소득과 정치체제의 안정성 간의 견고한(robust) 상관성이다. 정치발전에 관한 저술들은 거의 하나같이 정권 형태(regime type)와 국부의 수준, 혹은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안정성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본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빈곤 속에서 번성할

60) 불량국가와 유사한 일탈정권(regegade regimes)을 연성개념의 하나로 보는 시각으로는 Nincic, *Renegade Regimes*.

61) Paul Collier and Anke Hoeffler, "Greed and Grievance in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Vol. 56, No. 4 (2004), pp. 563~595.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⁶²⁾ 예를 들어 민주주의로의 이행 가능성은 1인당 GNP가 6천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때까지 높아지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정권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³⁾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민주정권과 마찬가지로 독재체제의 지속가능성도 경제적 성과에 비례한다. 요컨대, 경제적 여건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권의 유형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빈곤은 또 반란의 경제적 유인을 강화시킴으로써 특정 국내 집단의 공격적 성향을 증대시키고 정치적 혼란을 부추긴다.⁶⁴⁾ 가난한 나라에서는 무장 집단이 저렴한 비용으로 조직원을 충원할 수 있고, 무력을 통한 소득 재분배 노력이 경제적 생산 활동에 의한 이득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⁶⁵⁾ 한편, 국민소득은 국가의 능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 국가 취약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⁶⁶⁾ 국가의 재정이 빈약한 국가들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기 쉽다. 요컨대, 저발전은 정부가 동원할 국내적 자원을 제한시켜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효과성을 약화시킨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의 수준은 국가의 취약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불량 행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취약국가에 관한 많은 지수들이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구성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USAID의 C/FACTS는 국가의 정치적 효과성 지표로 GDP 대비 정부재정 수입율, 경제적 효과성 지표로 1인당 GDP 변화와 빈곤율, 즉 구매력평가(PPP) 기준

62) Seymour Martin Lipset,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3, No. 1 (1959), pp. 69~105. 경제성장 이외에 민주주의의 사회적·역사적 기반에 대해서는 Barrington Moore, Jr., *The Social Origins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Boston: Peacon Press, 1966); Evelyn Huber, Rueschmeyer Dietrich, and John D. Stephens, "The Impact of Economic Development on democra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7, No. 3 (1993), pp. 71~85.

63) Adam Przeworski and Fernando Limongi, "Modernization: Theory and Facts," *World Politics*, Vol. 49, No. 2 (1997), pp. 155~183.

64) Robert H. Bates, *When Things Fell Apart: State Failure in Late Century Af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65) Paul Collier and Anke Hoeffler, "Greed and Grievance in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Vol. 56, No. 4 (2004), pp. 563~595.

66) James D. Fearon and David D. Laitin,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 1 (2003), pp. 75~90.

으로 1일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을 포함하고 있다.⁶⁷⁾ EIU의 PII도 경제적 역경의 정도를 측정하는 하부 지표 중 하나로 1인당 GDP를 사용하고 있으며, Fund for Peace의 FSI는 실패국가의 경제적 지표로서 1인당 소득과 GNP 등으로 본 사회전반의 경제 패턴을 삼고 있다. 마찬가지로 CIFP와 SWI에서도 경제발전은 취약국가의 핵심 지표로 간주된다.

GDP 증가율

국가의 능력과 행태는 전반적인 경제발전 수준과 함께 경제성장의 폭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다. 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은 경제성장과 비정상국가의 관계에 대해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이 이론은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개발된 것으로, 대통령의 인기도와 군사력 사용 빈도 간에 높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⁶⁸⁾ 지도자의 인기도에 따라 대외적 무력개입 성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등 정권 형태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⁶⁹⁾ 한 연구에 의하면, 1인당 GDP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국가들은 플러스 성장을 이룬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을 확률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⁷⁰⁾

그런데 경제성장은 정부와 정권의 인기도를 가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⁷¹⁾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지도자는 자신의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적 불만을 외부로 돌려 무역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가들은 국내 경제적 여건이 악화될 때 대외적으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기 쉽다. 이 때문에 비정상국가의 여러 지수는 국가의 경제적 효과성(C/FACTS)과 경제적 취약성(PII, FSI, CIFP)을 측정하는 지표로 1인당 GDP 성장률을

67) Marshall and Goldstone, *Global Report on Conflict, Governance, and State Fragility*, Marshall and Cole, *Global Report 2009*의 실패국가지수도 1인당 GDP로써 경제적 효과성을 측정한다.

68) 찰스 오스트롬과 브라이언 잡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지지도가 43~58%에 이를 때 지지도 회복에 대한 기대와 무력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Charles Ostrom and Brian Job, "The President and the Political Use of For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1986), pp. 541~566).

69) John B. Londregan and Keith T. Poole, "Poverty, the Coup Trap, and the Seizure of Executive Power," *World Politics*, Vol. 42 (1990), pp. 151~183.

70) Daniel C. Esty et al., "State Failure Task Force Report: Phase II Findings" (1998).

71) Ross A. Miller, "Domestic Structures and the Diversionary Use of For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9, No. 3 (1995), pp. 760~785.

삼고 있다.⁷²⁾ 본 연구에서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기초로 1인당 GDP의 3년(2005~2007) 평균 변화율로써 비정상국가의 속성을 밝힌다.

개방적 무역과 투자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수출주도형 국가들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경제에의 통합 정도에 의존한다. 1970년대 종속이론은 국제 자본주의 경제로의 통합이 제3세계의 저발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⁷³⁾ 이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세계화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부정하는 이는 별로 없다. Esty 등은 국가실패에 연관된 것으로 가정한 75개의 관련 지표 중에서 세 가지, 즉 경제적 폐쇄성, 높은 유아사망률, 비민주주의 등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다고 말했다.⁷⁴⁾ 실패국가는 국제무역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낮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삶의 질을 재는 유아사망률은 국제 중앙값(median)보다 높고, 비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밀접한 통합은 무력충돌과 정치적 불안정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시장평화론과 자본평화론에 의하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는 국제평화에 기여한다. 무역과 자본이동이 국가 간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오늘날 민주주의·무역과 국제평과 간의 연관성을 양자무역 자료를 토대로 검증한 결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평화에 기여함을 밝혔다.⁷⁵⁾ 가츠케에 따르면, 자본의 경우, 개방적인 자본시장을 갖는 국가들 사이에는 무력분쟁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⁷⁶⁾ 특히 자본의 상호의존은 무역, 민주주의 등과는 독립적으로 평화에 기여한다. 흔히 개방성은 사람, 아이디어, 정보, 재화와 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정도로 이해

72) 한편 Rice and Patrick의 SW는 1인당 GDP가 아닌 GDP 변화율을 사용한다. Susan E. Rice and Stewart Patrick,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Developing Worl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7).

73) Samir Amin,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A Critique of the Theory of Underdevelopm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4); Fernando Cardoso and Enzo Falleto,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74) Esty et al., "State Failure Task Force Report."

75) John R. Oneal et al., "The Liberal Peace: Interdependence, Democracy, and International Conflict, 1950~85,"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3, No. 1 (1996), pp. 11~28.

76) Erick Gartzke,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1 (2007), pp. 166~191.

된다. 본 연구는 수출과 수입량을 합한 무역량, 자본의 유출(outward)과 유입(inward)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써 국가들의 경제적 개방성을 측정한다.⁷⁷⁾

국제경제규범 준수

비정상국가는 거시경제적 특징과 대외적 개방성 이외에 국제경제 규범 체제 안에서도 일탈 행태를 보인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게임 규칙에서 벗어나 행동한다. 본 연구에서 글로벌 경제규범에 반하는 비정상국가의 첫째 지표는 IMF규약 제8조(Article VIII) 상 경상계정(current account)의 태환성 수용 여부다.⁷⁸⁾ 태환성(convertibility)은 일정한 교환비율(환율) 하에서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MF규약 8조는 글로벌 차원에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화 간 태환성을 하나의 원칙으로 공식화했다. 이후 이 원칙은 ‘시장문명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a new formal global standard for market civilization)’이 되었다.⁷⁹⁾ IMF는 회원국의 제8조 수용 여부를 공개해왔는데, 1990년 초 43% (152개 회원국 중 66개국)에서 2008년 91%(185개 회원국 중 168개국)의 수용률을 보였다.⁸⁰⁾

두 번째 지표는 돈세탁과 테러리즘 지원 등 불법적인 국제경제활동의 개입 여부다. 돈세탁, 테러자금 지원, 기타 금융범죄는 국가 취약성의 원인이자 결과이면서 국제적 안보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⁸¹⁾ 국제범죄집단과 테러조직들의 불법적 금융활동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체제의 통합을 저해하고, 준칙에 기반을 둔 국제통상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미 국무성의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CSR,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를 바탕으로 돈세탁과 금융범죄에 관련된 15개 국제규범의 수용 정도로써 국가의 일탈 여부를 측정한다. 구체적으

77) 여기서 FDI은 스톡(stock)으로 단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2007년 데이터만을 반영했다.

78) Andre Broome, “Global Economic Norms and Renegade Regim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New York, February 14–16, 2009.

79) Michael J. Oliver, “Civilizing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s,” in Brett Bowden and Leonard Seabrooke (ed.), *Global Standards of Market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2006), p. 111.

80) 2010년 현재 187개국 중 168개국(89%)이 제8조를 수용하고 있다. IMF(2010).

81) US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Volume II: 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rimes* (Washington, DC: 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 2009).

로 이들은 규범 수용률 53.5% 미만으로서 하위 10%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그런데, IMF규약 제8조 가입여부는 0 또는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비정상국가의 속성과 행태에 관한 파라미터를 추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속적인 변수인 불법 경제활동의 정도만을 변수로 사용한다.

나. 비정상국가의 유형과 리스트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속성과 행동규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 기준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와 함께, 어떤 국가를 비정상국가로 간주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준의 선택과 가중치에 따라 비정상국가의 범주가 달라지는 자의성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보다 객관적인 비정상국가 식별을 위해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어떤 국가들이 취약국가와 불량국가로 분류되었는지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비정상국가를 식별하고자 한다.

취약국가는 (1) 세계은행의 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상 ‘취약국가(fragile states),’ (2) EIU의 PII(Political Instability Index)에서 ‘매우 위협한 국가(very high risk)’ 국가, (3) Fund for Peace의 FSI(Failed States Index)에서 ‘경계해야 할 국가(alert states),’ (4) 칼튼대학의 CIFP(Country Indicators for Fragility Project)에서 지수 6.5 이상 국가, (5) 브루킹스연구소의 ISW(Index of State Weakness)에서 ‘실패국가 또는 대단히 취약한 국가(failed and critically weak states),’ (6) 조지메이슨대학 마셜 등(Marshall and Goldstone 2007; Marshall and Cole 2009)의 SFI(State Fragility Index)에서 ‘적색경보국가(red states),’ 그리고 (7) 메릴랜드대학 PCL(Peace and Conflict Ledger)의 상위 25개국 등이다.

한편 불량국가는 (1) 미국의 무기금수(embargo) 조치를 받고 있는 국가, (2) 테러리즘·WMD·성평등·인종차별·국가억압을 수시로 자행하는 국가(C&T; Caprioli and Trumbore 2005), (3) IMF 규약 Article VIII을 수용하지 않은 국가, 그리고 (4) 돈세탁 및 금융범죄 방지 규범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앞의 두 기준은 군사적 측면, 뒤 두 기준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본 연구는 적어도 각각 두 개 이상의 기준에서 취약국가 또는 불량국가

로 지목된 국가만을 비정상국가로 간주한다.⁸²⁾ 이를 정리하면 <표 III-3>과 같이 35개의 취약국가, 16개의 불량국가 등 총 39개국이 비정상국가로 식별되었다.

<표 III-3>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비정상국가의 유형과 리스트

취약국가 (35개국)		불량국가 (16개국)
Afghanistan	Angola	Afghanistan
Bangladesh	Burundi	Angola
Cambodia	Central African Rep.	Burundi
Chad	Congo, Dem. Rep.	Cuba
Congo, Rep.	Cote d'Ivoire	Eritrea
East Timor	Eritrea	Ethiopia
Ethiopia	Guinea	Iran
Guinea-Bissau	Haiti	Iraq
Iraq	Kenya	Liberia
Lebanon	Liberia	Libya
Malawi	Myanmar	Myanmar
Nepal	Niger	Korea, North
Nigeria	Korea, North	Sao Tome
Pakistan	Rwanda	Sudan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yria
Somalia	Sudan	Zimbabwe
Uganda Zimbabwe	Zambia	

4.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상호작용

가. 속성 파라미터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파라미터는 경제발전, 경제성장, 개방경제, 그리고 규범준수 등 네 가지 지표를 통해 도출된다. 첫째, 경제발전은 1인당 GDP로서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현재가격(current price) 달러로 표시된 2005~2007년의 평균치이다. 최소값은 117.91달러(Burundi), 최대값은 9,470.73달러(Lybia)로 나타났다. 1인당 GDP 평균은 1,375.94달러, 표준편차는 2176.46로 조사되었다. 둘째, 경제성장은 GDP 증

82) 취약국가와 불량국가에 관한 상세 목록은 <부록> 참조.

가을로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2005~2007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로 측정되었다.⁸³⁾ 최소 증가율은 -5.3%(Zimbabwe), 최대 증가율은 19.82%(Angola)로 나타났다. 평균치는 5.73%, 표준편차는 4.31이었다. 다음 <표 III-4>는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파라미터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4>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파라미터

변수	관찰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GDP	39	1375.94	2,176.46	117.91	9,470.73
GDP 성장률	39	7.73	4.31	-5.30	19.82
무역개방도	39	66.16	34.14	0.30	143.42
투자개방도	39	51.04	130.41	0.20	805.20
규범준수도	39	54.87	26.42	6.67	100.00

셋째, 개방경제는 우선, GDP 대비 수출량과 수입량의 합으로 측정된 무역 개방성(trade openness)으로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⁸⁴⁾ ADB Key Indicators (미얀마, 동티모르), CIA World Factbook (북한, 이라크, 사오토미, 소말리아) 자료를 이용했다. 무역개방성의 최소값은 0.30% (Myanmar), 최대값은 143.42% (Congo, Dem)이었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66.16%, 34.14였다. 한편, 투자개방성은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2007, 2008)을 바탕으로 GDP 대비 FDI(스톡) 유입과 유출 비중의 합으로 계산되었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2% (Cuba), 805.2% (Liberia)였으며, 평균은 51.04%, 표준편차는 130.41이었다.

끝으로, 국제경제 규범 준수율은 미 국무성 INCSR 2009의 자료에 근거해서 계산하였다. 규범준수율은 돈세탁 및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규범을 수용하지 않은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준수율이 낮음을 말한다. 준수율이 가장 높음을 의미하는 최소값은 6.67%(Nigeria), 준수율이 가장 낮음을 의미하는 최대값은 100% (Central African Republic, East

83) 미얀마는 2004년, 동티모르는 2005~2007년 데이터이며, ADB의 아태주요지표를 기초로 했다. 북한과 이라크는 CIA World Factbook에서 2007년 추정치만을 활용했다.

84) 쿠바의 수출입 데이터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1999년 값이다.

Timor, Somalia, Sudan)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4.87%, 26.42로 나타났다.

나. 상호작용의 패턴

비정상국가의 지리적 인접성

많은 국제 및 비교정치 연구들은 국가의 개별적 속성들이 비정상성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내적 갈등과 붕괴가 해당 국가의 특수한 속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접근법을 택했다. 대신 지역적 요인이나 국제적 맥락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⁸⁵⁾ 그러나 국가의 비정상성은 단순히 해당 국가의 속성에 의해서만 정해지기보다 이웃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⁸⁶⁾ 국가실패의 경우, 경제·사회·정치·군사적 문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이웃 나라와 지역 및 글로벌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실패는 또 다른 국가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인접지역으로 전염되고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라이베리아의 내전은 3개 인접국가 모두에게 확산되었고, 콩고 내전도 중앙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불안정 요인으로 비화했다. 국가실패의 지역적 확산 또는 전염 가능성은 실패국가를 세계평화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⁸⁷⁾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비정상국가의 개별적 속성들이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상호작용 파라미터’를 고려해야 한다.

사실 어떤 사건이 확산 또는 전염과정을 통해 후속 사건의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⁸⁸⁾ 30년 전만 해도 확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공간적 확산

85)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해서는 Nicholas Sambanis, "A Review of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Quantitative Literature on Civil War," *Defence and Peace Economics*, Vol. 13, No. 3 (2002), pp. 215~243.

86) Michael D. Ward and Kristian S. Gleditsch, "Location, Location, Location: An MCMC Approach to Modeling the Spatial Context of War and Peace," *Political Analysis*, Vol. 10, No. 3 (2002).

87) "From Chaos, Order: Rebuilding Failed States," *The Economist*, March 3, 2005.

88) Benjamin A. Most and Harvey Starr, "Theoretical and 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Diffusion,"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2, No. 4 (1980), pp. 391~412.

(spatial diffusion)을 독립, 매개 또는 통제 변수로 취급해왔다. 이후 국제정치 분야에서도 국가의 지정학과 지리적 위치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고, 그 적용범위도 초기 내전과 국제분쟁에서 최근 정치경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⁸⁹⁾ 한 예로 스카치폴은 혁명적 사건들의 발생에 있어서 초국경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국경 밖에서 벌어진 일이 다른 나라의 국내문제로 전이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한마디로 국가의 위치는 단순히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기 때문에,⁹⁰⁾ 비정상국가의 발생과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 지리적 변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비정상국가의 공간적 확산은 국가 간 접촉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 전염(contagion)은 지리적 인접성(contiguity)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반면, 모방(emulation)은 지역 간 정보의 전파를 통해 이뤄진다. 후자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타 지역으로 침투되는 경로다. 내전, 국제분쟁과 같은 대규모 충돌이나 국가실패와 같은 불안정 요인은 인근 지역과 국가들의 기회와 위협 계산에 변화를 수반한다. 이를테면 자국 군대의 동원이나 이웃 나라에 대한 공격이 가져올 기대효용을 변화시켜 무력도발을 자극한다.⁹¹⁾ 북한의 핵 위기가 이란과 이라크의 핵 위기로 전파되는 경우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토적 주권을 결여하고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취약국가는 인접지역 및 글로벌 불안정 요인에 더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취약성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진앙이 된다. 이때 국가실패 그 자체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실패가 수반하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이웃나라로 확산된다. 즉 국가실패는 국가 간 비공식 네트워크 등 '갈등증폭 메커니즘(conflict-enhancing mechanism)'을 통해 전파된다.⁹²⁾ 그런데 이 메커니즘은

89) Nathaniel Beck et al., "Space is More Than Geography: Using Spatial Econometrics in the Study of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0, No. 1 (2006), pp. 27~44; Beth Simmons and Z. Elkins, "The Globalization of Liberalization: Policy Diffusion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8, No. 1 (2004), pp. 171~189 등이 그 예다.

90) John O'Loughlin and Frank Wilman, "Taking Geography Seriously: Disaggregating the Study of Civil War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Disaggregating the Study of Civil War and Transnational Viol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March 6-8, 2005).

91) 때로 국가붕괴는 국내집단 간 안보딜레마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비국가행위자들이 탈취한 국가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약탈적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국의 국경 밖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할 유인을 갖게 된다. Nelson, Kasfir, "Domestic Anarchy, Security Dilemmas and Violent Predation: Causes of Failure," in Robert I. Rotberg (ed.)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Michael Klare, "The Deadly Connection: Paramilitary Bands, Small Arms Diffusion, and State Failure," in Robert I. Rotberg (ed.)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국가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무장집단의 자원, 동기, 결심을 강화시킴으로써 또 다른 국가실패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⁹²⁾

실제로, 다음의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비정상국가로 분류된 39개국은 평균적으로 이웃나라의 절반 이상(52.74%)이 비정상국가였다. 라이베리아는 코트디부아르, 기니, 시에라리온 등 인접국가 모두가 비정상국가였으며, 시에라리온도 마찬가지였다.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차드, 에티오피아 등은 이웃국가의 80% 이상이 실패국가이거나 불량행태를 보이는 비정상국가였다. 요컨대, 비정상국가는 대체로 홀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대목은 비정상국가의 지리적 확산 현상이 대륙별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비정상성의 확산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동과 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정상국가의 고립적 성격이 강했다. 특히 아시아의 비정상국가인 북한, 미얀마, 네팔 등의 비정상적인 이웃국가를 갖지 않았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비정상성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속성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5> 비정상국가의 지리적 확산

비정상국가	비정상 인접국가(%)	비정상국가	비정상 인접국가(%)
Afghanistan	50.00	Lebanon	50.00
Angola	66.67	Liberia	100.00
Bangladesh	50.00	Lybia	50.00
Burundi	66.67	Malawi	33.33
Central African Rep.	80.00	Myanmar	0.00
Chad	83.33	Nepal	0.00
Congo, Dem. Rep.	88.89	Niger	42.86
Congo, Rep.	50.00	Nigeria	50.00
Cote d'Ivoire	40.00	Pakistan	50.00
Cuba	도서국가	Rwanda	75.00

92) Zaryab Iqbal and Harvey Starr, "Bad Neighbors: Failed States and Their Consequenc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5 (2008), pp. 315~331.

93) Thomas Ohlson, "Understanding Causes of War and Peac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4, No. 1 (2008), pp. 133~159.

비정상국가	비정상 인접국가(%)	비정상국가	비정상 인접국가(%)
East Timor	0.00	Sao Tome & Principe	도서국가
Eritrea	66.67	Sierra Leone	100.00
Ethiopia	80.00	Solomon Islands	도서국가
Guinea	66.67	Somalia	66.67
Guinea-Bissau	50.00	Sudan	88.89
Haiti	0.00	Syria	40.00
Iran	42.86	Uganda	80.00
Iraq	40.00	Zambia	50.00
Kenya	75.00	Zimbabwe	25.00
Korea, North	0.00		
평균		52.74	
최소값		0.00	
최대값		100.00	

비정상국가의 상호작용 파라미터

이 장에서는 비정상국가의 상호작용 파라미터를 도출하기 위해 비정상국가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의 속성 파라미터를 살펴본다. 특정 비정상국가와 인접국가와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일종의 역내 상호작용 파라미터로서, 2007~8년을 기준으로 하여 비정상국가와 그 이웃나라들의 경제적 속성을 비교·분석한다. 주변에 취약성이나 불량행태를 보이는 국가들이 많을수록 그러한 비정상성은 인근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된 비정상국가의 개별적 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한 결과, 이웃나라의 1인당 GDP는 최소 248달러에서 최대 12,120달러의 분포를 보이면서, 평균 2,275달러였다. 이들의 평균 GDP 성장률은 6.42%로서 3.38~11.84%의 차이 폭을 보였다. 무역 및 투자 개방성의 평균치는 각각 68.9%와 45.28%로 나타났으며, 규범 준수율은 평균 39%를 기록했다. 다음의 <표 III-6>은 비정상국가의 인접국가들이 지닌 경제 파라미터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6> 인접국가의 경제 파라미터

변수	관찰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GDP	36	2,275.80	3,051.92	248.62	12,120.49
GDP 성장률	36	6.42	2.11	3.38	11.84
무역개방도	36	68.99	15.50	22.79	106.08
투자개방도	36	45.28	70.92	9.59	411.15
규범준수도	36	39.30	18.18	6.67	70.00

비정상국가와 인접국가의 객관적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의 속성을 다음 <표 III-7>의 글로벌 지표들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접국가의 경제적 지표는 대체로 비정상국가들의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지만, 글로벌 평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1인당 GDP는 글로벌 평균인 12,275달러의 6분의 1에 불과했고, 무역 및 투자 개방성도 턱없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GDP 성장률은 글로벌 평균을 웃돌아 경제의 역동성이 더 큰 것처럼 보였다. 국제금융 규범 준수율의 경우, 비정상국가(54.87%)보다 더 높은 수준(39.3%)이었지만, 국제 평균인 22.45%의 절반에 가까웠다.

<표 III-7> 글로벌 경제 파라미터

변수	관찰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GDP	193	12,275.44	18,754.16	117.91	110,593.50
GDP 성장률	191	5.70	3.48	-5.30	28.65
무역개방도	178	97.40	54.01	26.10	443.21
투자개방도	200	175.31	1,309.74	0.00	18,099.63
규범준수도	204	22.45	22.59	0.00	100.00

한편, 비정상국가와 글로벌 지표를 비교해보면,⁹⁴⁾ 우선 1인당 GDP의 평균

94) 1인당 GDP는 현재가격(current prices)으로 표시된 US Dollar이며, GDP는 불변가격(constant prices)으로 표시된 10억 US Dollar임.

은 10배에 가까운 약 1만 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무역 개방성은 30% 이상의 격차를 보였으며, 투자 개방성도 51% 대 175%로 3배가 넘는 차이를 나타냈다. 규범준수율도 비정상국가 평균은 54%인데 반해, 글로벌 표본은 22.45%로 두 배 이상 높았다. 다만, 비정상국가 표본과 글로벌 표본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유일한 지표는 경제성장률 평균으로서 5.7%로 비슷했다. 요컨대, 비정상국가는 국제사회 일반의 평균적인 경제지표에 비해 최소 2~3배 이상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컨대, 비정상국가는 경제적 능력과 국제규범 부합도 면에서 글로벌 평균은 물론, 인접국가의 실적에도 미달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정상국가는 고립되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나쁜 이웃’(bad neighbors)⁹⁵⁾과 상호작용하면서 공존해왔다.

비정상국가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도 다른 저소득 국가(low-income countries, LICs)를 포함한 표본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⁹⁶⁾ 다음의 <그림 III-1>에서 굵은 선은 저소득국가들의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정상국가의 인간개발지수는 모두 이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비정상성이 단순히 소득수준의 하락뿐 아니라 인간생활의 기초적인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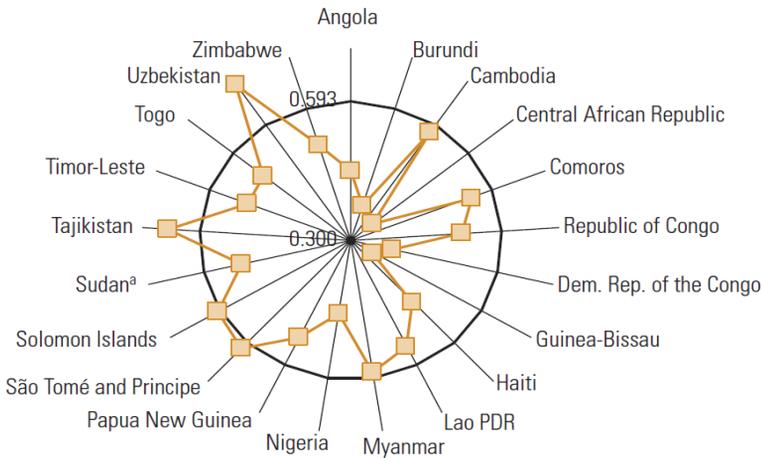
비정상국가는 일반적으로 국경 안팎에서 정당성과 효과성을 상실한 국가다. 국내적으로 안보, 교육, 보건, 치안과 행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의 통용 규범을 준수할 능력과 의지를 갖지 못한 국가들이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재가 아니라, 테러단체, 범죄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무장집단 등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제공되는 차별적이고 약탈적인 ‘준사유재(quasi-private goods)’가 된다. 그런데 이들 비국가행위자들은 대개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들에게 인접한 실패국가는 또 다른 활동공간이자 피난처가 된다. 이 때문에 한 비정상국가에서의 무력충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마약밀매와 돈세탁 등 불법적 경제

95) Iqbal and Starr, “Bad Neighbors.”

96) HDI는 인간개발의 세 차원 즉 출생 시 기대수명을 측정된 삶의 질, 문해독률·취학률로 측정된 지식 수준, 그리고 개인의 구매력 등 생활수준을 종합한 지표다.

활동이 파급되기 쉽다. 국가 권력의 공백을 틈타 정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집단에게 초국가적 테러집단과 범죄집단과의 네트워크는 자신의 물적 자원을 확대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인 셈이다. 실제로 실패국가의 대부분은 초국가적인 마약밀매, 무기밀수 및 테러활동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Ⅲ-1> 비정상국가와 저소득국가



출처: World Bank, *Engaging with Fragile States: An IEG Review of World Bank Support to 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Washington, DC: World Bank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2006), p. 12.

뿐만 아니라, 비정상국가들은 난민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국가들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최악의 난민 방출 클러스터인데,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수단으로 이어지는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 모잠비크, 알골라, 잠비아에서 자이르, 부룬디, 르완다 등에 이르는 중앙아프리카, 그리고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세네갈, 말리 등 서아프리카 지역 등이다.⁹⁷⁾ 이처럼 비정상국가의 열악한 정치경제적 조건은 인접국가와의 상호작용과 확산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및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의 수렴(threat convergence)’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97) Myron Weiner, “Bad Neighbors, Bad Neighborhoods: An Inquiry into the Causes of Refugee Flow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1 (1996), pp. 5~42.

제4장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에 대한 합의

북한의 정상외교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제4장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에 대한 합의

1. 불량국가의 정상화 과정

지난 몇 십 년 사이의 추세를 보면, 불량국가로 분류되는 국가 가운데 일부는 정상국가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정상국가 중에서도 새롭게 불량국가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그렇다면 불량국가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정상국가로 변화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불량국가가 정상국가로 바뀌는 현상을 유형화해보고, 불량국가의 정상화과정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가. 불량국가의 분화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정권이 정상화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불량정권’이 내부적으로 교체되는 경로이다. 보스니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르완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불량정권’이 외부의 압박으로 변화 또는 교체되는 경로이다. 유고슬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은 외부의 압박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 이라크, 우간다, 남월남은 외부 세력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되었다. 셋째, ‘불량정권’이 안정화되어 더 이상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로다. 칠레, 적도기니, 이란, 필리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정권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표 IV-1> 불량국가의 분화

	국가	지속 여부	사유
테러 수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단	외부세력에 의한 정권교체
	북한, 리비아	중단	미국과의 관계 개선
	예멘	중단	내부 정권교체 (통일)
	쿠바, 시리아	지속	
핵무기 프로그램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중단	내부 정권교체 (민주화)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단	적수끼리 합의
	한국, 대만	중단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
	이라크	중단	외부세력에 의한 정권교체
	리비아	중단	미국과의 관계개선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	지속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국 또는 테러 수출국과 같이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국가가 정상화되는 과정도 국내외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외부세력에 의하여 정권이 강제로 교체되는 경로(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국제사회와 화해 이후 정권의 행동이 변화하는 경로(리비아, 북한), 내부 정권교체 이후 테러 금수와 핵무기프로그램을 폐기가 일어나는 경로(남예멘, 남아공, 루마니아, 유고),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 후 핵무기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경로(대만, 한국) 등이 존재한다. 불량국가의 분화과정에 대한 유형화가 단순하게 진행될 수 없을 만큼 이들의 진화과정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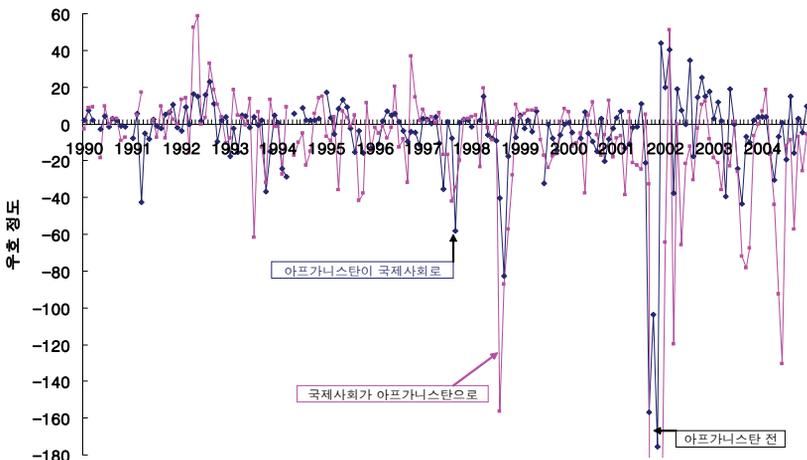
나.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

불량국가와 국제사회 간의 관계를 추세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불량국가를 정상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수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의 <그림 IV-1>은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국가에게 보낸 협력적 신호의 점수에서 갈등적 신호의 점수를 뺀 평화지수(‘아프가니스탄이 국제사

회로)와 세계 각국이 아프가니스탄에게 보낸 협력적 신호의 점수에서 갈등적 신호의 점수를 뺀 평화지수(‘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으로’)를 보인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아프가니스탄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전부터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 유화책보다는 제재 또는 비난에 집중했으며, 아프가니스탄도 국제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조치로 맞섰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국제사회로 향하는 평화지수와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평화지수 간의 상관계수는 0.5173(p-value = 0.000)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양자가 상대방의 행동에 조용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두 평화지수는 양자 관계가 우호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사회에 보인 행동을 평화지수로 환산하면, 평화지수의 평균이 -5.075이다.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게 보인 행동을 평화지수로 환산하면, 평화지수의 평균이 -27.780이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간을 제외한다면,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사회에 보인 평화지수의 평균이 3.497,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 보인 평화지수의 평균이 -11.336이다. 상기 수치들을 종합하면, 아프가니스탄과 국제사회는 부정적 상호작용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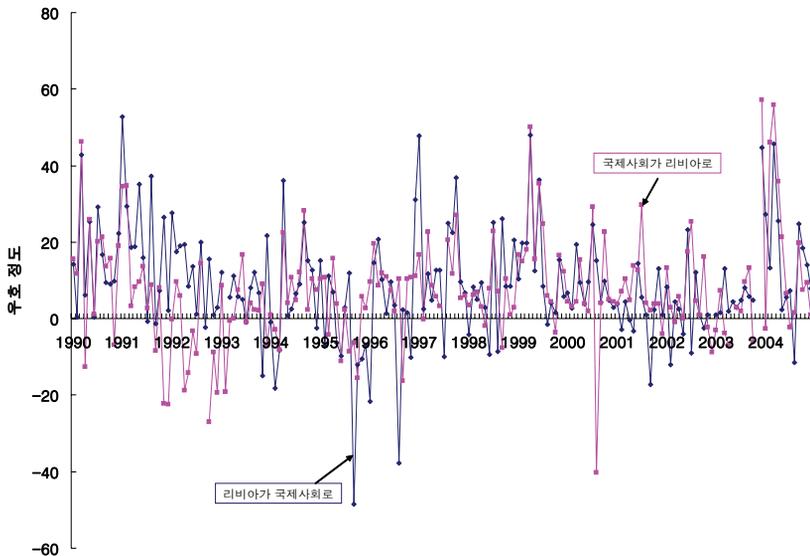
<그림 IV-1> 아프가니스탄과 국제사회의 관계



자료: King, 2007.

한편, 다음의 <그림 IV-2>는 리비아와 국제사회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리비아가 국제사회에 보낸 신호/행동에서 협력적 신호의 점수에서 갈등적 신호의 점수를 감한 평화지수(‘리비아가 국제사회로’)와, 국제사회가 리비아에게 보낸 신호/행동에서 협력적 신호의 점수에서 갈등적 신호의 점수를 감한 평화지수(‘국제사회가 리비아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림은 리비아와 국제사회의 관계가 1990년대 그다지 나쁘지 않았음을 보인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리비아와 국제사회의 관계는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리비아와 국제사회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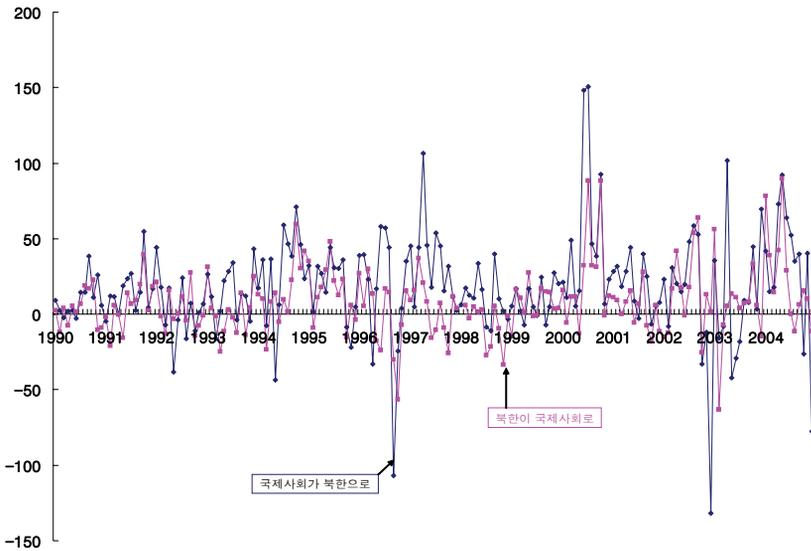
자료: King, 2007.

리비아로부터 국제사회로 향하는 평화지수와 국제사회로부터 리비아로 향하는 국제지수간 상관계수는 0.4576(p -value = 0.000)인데, 이는 양자가 상대방의 행동에 조응하여 행동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비록 양자 행동의 조응도가 중간 정도이지만, 상대방을 향한 신호/행동의 우호성을 고려하며, 그 의미가 커 보인다. 리비아가 국제사회에 보인 평화지수의 평균은 8.954이다. 국제사회가 리비아에게 보인 평화지수의 평균은 7.314이다. 리비아가 미국에

의하여 불량국가로 지목을 받던 시점에서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는 다르게 리비아는 국제사회에 우호적 입장을 취했다.

다음의 <그림 IV-3>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작용이 2004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음을 보인다. 이 그림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낸 신호/행동 가운데 협력적 신호의 점수에서 갈등적 신호의 점수를 감한 평화지수(‘북한이 국제사회로’)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보낸 신호/행동 가운데 협력적 신호의 점수에서 갈등적 신호의 점수를 감한 평화지수(‘국제사회가 북한으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그림에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2003년 초반(2차 걸프전쟁 발생 시기)과 1996년 하반기(강릉 잠수정 침투사건)를 제외하고는 좋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1년 남북정상회담 시기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3>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으로 향하는 평화지수와 북한이 국제사회로 향하는 평화지수 간 상관계수는 0.5316(p-value = 0.000)인데, 이는 양자가 상대방의 행동에 조응하여 행동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양자 행동의 조응도가 중간 정도이지만, 상대방을 향한 신호/행동의 우호성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크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인 평화지수의 평균은 18.449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보인 평화지수의 평균은 8.145이다. 북한이 미국에 의하여 악의 축으로 지목을 받던 시점과 강릉 잠수정 사건을 제외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 우호적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1993년부터 1994년 1차 북핵위기 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비하면, 여전히 좋은 편이었다.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가. 정치경제적 차원의 지원

국제사회의 비정상국가는 소득과 생활수준, 경제적 개방성, 국제규범 준수율 등의 면에서 국제적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국가들에서 발생한다. 이들은 탈냉전기 내전과 테러리즘 등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 가능성 때문에 학문적, 정책적 관심사로 대두했다. 미국과 영국 등 개별국가 차원은 물론, OECD, World Bank, EU 등 국제기구들도 비정상국가들이 이야기하는 안보상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북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실패'라는 요소를 뛰어넘어 국제사회의 '불량국가'라는 낙인이 추가로 찍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왕의 많은 연구들은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국제안보, 인도적 탄압, 인권침해 행위 등 정치군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경제적 궁핍은 국가들의 공격적 성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전쟁의 일차적 온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불량국가를 포함한 비정상국가의 경제적 속성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제3장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을 집중 부각시켰다. 먼저, 정상국가를 식별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경제 지표들을 추출, 39개 비정상국가를 식별해냈다. 이어 비정상국가들의 개별적 속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다른 저소득국가(LICs)는 물론, 글로벌 평균치에 큰 격차를 보이면서 미달했다. 경제성장률을 제외한, 소득수준, 무역과 투자 개방성, 국제경제규범 준수율 등 측면에서 세계의 바닥권을 형성

했다. 이는 이들의 개별적인 속성만으로 비정상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비정상국가들은 결코 고립된 존재는 아니었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지표를 보이는 인접국가와의 상호작용 및 교류를 통해 비정상성이 상호강화적(mutually reinforcing) 성격을 띠어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가 북한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은 우선 비정상국가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국가의 비정상성은 중앙정부의 정당성과 효과성 결여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 국가의 지원은 이들이 하나의 국가로서 자국 주민에게 기초적인 공공재를 공급할 능력과 의지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단순히 경제여건의 단기적인 개선보다는 국가체제 전반의 능력을 배양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 비정상성의 지역적 집중 현상이 아시아 지역보다는 아프리카에서 두드러졌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비정상국가에 대한 대응책은 개별 비정상국가에 초점을 맞춘 소위 ‘폐쇄적 정책 접근법(closed policy approach)’⁹⁸⁾보다는 지역적인 접근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역내 비정상국가들이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비정상국가 모두를 타깃으로 하는 포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반면, 북한 등 아시아의 비정상국가들은 아프리카 지역과 달리 ‘나쁜 이웃’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수준에서 이들 비정상국가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끝으로, 비정상국가에 대한 지원의 주체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비정상성의 지리적 확산으로 인해 지역적인 메커니즘을 통한 해결책을 추진하기 힘들다. 그보다는 UN 등 보편적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일종의 글로벌 취약국가 전략(Global Fragile States Strategy)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북한, 네팔, 미얀마 등 아시아 비정상국가들은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인접국가들이 비정상국가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국경을 넘어 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연구는 북한의 비정상성은 북한 중앙정부의 능력배양을

98) Halvard Buhaug and Kristian Skrede Gleditsch, "Contagion or Confusion? Why Conflicts Cluster in Sp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2 (2008), p. 216.

목표로 삼으면서, 하나의 고립된 대상으로 상정하되, 지역적인 접근법을 통해 그 변화를 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외교정책 및 정치군사적 차원의 지원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불량국가의 행위에 관한 경험적 분석 및 정상화 과정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인과사슬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정상국가가 불량국가로 전환되는 원인은 인종갈등, 장기집권 아래서 인권탄압과 같은 국내적 요인, 적수국의 존재와 안보위협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 국제규범으로 용인될 수 없는 현상이 국내정치에서 발생할 경우 ‘불량정권’으로 분류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게 된다. 적대국가의 존재 또는 안보위협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국가가 핵무기 개발 또는 테러 수출에 나서게 될 경우,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게 된다.

둘째, 불량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부분적으로 맞서려는 성향을 보인다.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불량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비정상 행위를 멈춘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불량국가는 상대적으로 오래 버틴다. 이 과정에서 무력분쟁과 같은 고강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강도분쟁은 불량국가의 정상화 경로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과정 속에서 불량국가는 국제사회에 대하여 유화적 입장을 취하곤 한다. 대부분의 불량국가가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 고강도전쟁의 대상이 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량국가는 정상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국제사회에 협력적 신호를 보낸다.

셋째, 불량국가가 국제사회의 압박에 맞설 경우, 국제사회와 불량국가 간의 상호작용에서 국제사회의 우호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맞서기 위하여 핵무기 프로그램까지 가지게 될 경우, 국제사회의 압박은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압박은 고강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제사회의 압박과 포용의 변화는 고강도 분쟁을 방지하면서 불량국가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2009년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관여(engagement) 정책과 봉쇄(containment)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

한 유형의 외교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한 대응방안이야말로 북한과 같이 다루기 힘든 불량국가 및 취약국가, 또는 실패국가들에 대한 최선의 해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한 실천방안

이상의 논의에서 이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취약국가와 불량국가의 특성 및 행동패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국제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하여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일반화의 어려움과 위험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과 진단에 대하여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및 실천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의 ‘취약성’보다는 ‘불량’ 속성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측면보다는 군사 및 외교안보적 측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경제적 지원이나 교류방안보다는 외교관계 및 국제기구에서의 소통 등 정치적 대화 및 안보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기존에도 자주 활용되는 정책수단들이지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취약국가 및 불량국가가 보여준 행태와 그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도 균형 잡힌 대응책을 항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인접국가 효과가 다른 취약국가 또는 불량국가에 비해 덜 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지리적 인접성은 큰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유사한 국내정치 및 경제적 속성을 지닌 국가들 사이에 연대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불법 무기거래 및 테러수출, 비민주적 행태 등에서 이러한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조체제가 글로벌 차원의 위협을 확산하는 주된 요인이

라는 점에서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연합 등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인접성’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권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입신호(input signals)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내보내는 산출신호(output signals)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 중국, 한국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해 제시하는 메시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의 ‘불량성’ 또는 ‘비정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낙인(labeling)이 보편화됨으로써 협상과 소통을 위한 인프라가 대단히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명분과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오가는 메시지의 함축적인 의미 또는 해결의 실마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특수한’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 국제사회에서 자주 관찰되는 ‘패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곧 북한을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불량국가나 취약국가처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유한 속성을 지닌 북한’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보다 효율적이면서 의미 있는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제5장

맺는 말

북한의 정상외교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제5장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북한이 처해 있는 현실은 크게 ‘취약국가’와 ‘불량국가’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두 가지의 담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도그마로서 설정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낙인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는 당분간 난망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 두 가지의 담론이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의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판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비정상성을 규정하는 첫 번째 요소, 즉 군사적 측면에서 ‘불량국가’적 모습을 진단하였다. 북한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불량국가들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테러를 수출하는 행태와 더불어 대내적으로 정치학살 또는 인종학살을 서슴지 않으며, 국내적 인권탄압의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불량국가의 낙인이 찍혀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내적 정권 차원의 속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 내부의 ‘불량정권’ 여부에 따라서 불량국가의 행태적 속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불량국가들이 대부분의 경우 군사적 갈등만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태도를 함께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불량국가에 대한 정책은 ‘국제규범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제재조치에 직면하든지’ 형태의 일방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불량국가는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불량국가의 외교적 관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밀도 있고 다양하게 전개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불량국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국제적 공조는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불량국가 또는 실패국가의 담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동맹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 체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려는 모습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온 담론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특징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실패국가’ 또는 ‘불량국가’로 규정해 온 국제사회의 담론 역시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한시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온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먼저 간파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하여 국제규범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 이전에, 북한이 ‘비정상성’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요구사항과 메시지, 즉 ‘신호(signals)’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다른 불량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불량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 GDP나 경제성장률, 그리고 무역개방도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준 역시 북한에만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며, 전 세계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국제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원조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지역적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이 비록 불량국가의 외교적 행태를 교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 해당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줌으로써 취약국가나 불량국가의 정상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취약국가나 불량국가의 대내적 역량을 제고하는 ‘국가건설(state-building)’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러한 국내 역량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장기적 방안을 제외한다면, 단기적·중기적 차원에서는 국제규범을 준수하게끔 도와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불량국가와 취약국가의 ‘신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복합적인 지원과 대응방안들—군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민병원·조동준·김치욱.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 연구원, 2009.
- Amin, Samir.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A Critique of the Theory of Underdevelopm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4.
- Bates, Robert H. *When Things Fell Apart: State Failure in Late Century Af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Cardozo, Fernando and Enzo Falleto.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 Frank, Andre Gunder.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7.
- Fund for Peace. *Threat Convergence: New Pathways to Proliferation?* Washington, DC: Fund for Peace, 2006.
- Ghani, Ashraf and Clare Lockhart. *Fixing Failed States: A Framework for Rebuilding a Fractured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Heston, Alan, Robert Summers and Bettina Aten. *Penn World Table Version 6.3*. Cent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Production, Income and Prices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9.
- IAEA. *Illicit Trafficking Database*. Vienna: IAEA, 2006.
- Marshall, Monty G. and Jack Goldstone. *Global Report on Conflict, Governance, and State Fragility: Gauging System Performance and Fragility in the Globalization Era*. Center for Systemic Peace. George Mason University, 2007.
- Marshall, Monty G and Benjamin R. Cole. *Global Report 2009: Conflict,*

- Governance, and State Fragility*. Center for Systemic Peace. George Mason University, 2009.
- Moore, Barrington, Jr. *The Social Origins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Boston: Beacon Press, 1966.
- Nincic, Miroslav. *Renegade Regimes: Confronting Deviant Behavio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 OECD.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Paris: OECD, 2005.
- Rice, Susan E., and Stewart Patrick.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Developing Worl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7.
- Rotberg, Robert I. ed.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Russett, Bruce. *Controlling the Sword: The Democratic Governance of National Secur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Russett, Bruce.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Russett, Bruce and John Oneal.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W.W. Norton, 2001.
- Simmer, Raymond. *Rogue Regimes: Terrorism and Prolifer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USAID. *Fragile States Strategy*. Washington, DC: USAID, 2005.
- _____. *Measuring Fragility: Indicators and Methods for Rating State Performance*. Washington, DC: USAID, 2005.
-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1993.

- US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Volume II: 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rimes*. Washington, DC: 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 2009.
- World Bank. *Good Practice Note for Development Policy Lending Development Policy Operations and Program Conditionality in Fragile State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5.
- _____. *Engaging With Fragile States: An IEG Review of World Bank Support to 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Washington, DC: World Bank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2006.
- Zartman, I. William. ed. *Collapsed States: The Disintegration and Restoration of Legitimate Authority*. Boulder: Lynne Rienner, 1995.

2. 논문

- 김석진.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정책 자료 2009-106, 2009.
- Bayer, Resat. “The Correlates of War Diplomatic Exchange Data Set.” (Version 2006.1) <<http://www.correlatesofwar.org>>.
- Beck, Nathaniel K. Gleditsch, and K. Beardsley. “Space is More Than Geography: Using Spatial Econometrics in the Study of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0, No. 1, 2006.
- Bearce, David H. and Sawa Omori. “How Do Commercial Institutions Promote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2, No. 6, 2005.
- Broome, Andre. “Global Economic Norms and Renegade Regim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New York, February 14-16, 2009.

- Buhaug, Halvard and Kristian Skrede Gleditsch. "Contagion or Confusion? Why Conflicts Cluster in Sp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2, 2008.
- Burt, Richard.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Spread of New Conventional Weapons Technolo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 No. 3, 1977.
- Caprioli, Mary and Peter F. Trumbore. "Identifying 'Rogue' States and Testing their Interstate Conflict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9, No. 3, 2003.
- _____. "Rhetoric versus Reality: Rogue States in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9, No. 5, 2005.
- Carment, David, Stewart Prest, and Yiagadeesen Samy. "Determinants of State Fragility and Implications for Aid Allocation: An Assessment Based on the Country Indicators for Foreign Policy Project." UNU-WIDER Research Paper No. 2008/46.
- Chestnut, Sheena.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Smuggling Net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1, 2007.
- Collier, Paul and Anke Hoeffler. "Greed and Grievance in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Vol. 56, No. 4, 2004.
- Coyne, C. J. "Reconstructing Weak and Failed States: Foreign Intervention and the Nirvana Fallacy." *Foreign Policy Analysis*. Vol. 2, 2006.
- Dunn, Lewis A. "Nuclear Gray Marketeer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 1, No. 3, 1977.
- Fearon, James D. and David D. Laitin.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 1, 2003.
- Freedman, Lawrence. "British Foreign Policy to 1985: IV. Britain and the Arms Trade."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3, 1978.

- Esty, Daniel C. Jack A. Goldstone, Ted Robert Gurr, Barbara Harff, Marc Levy, Geoffrey D. Dabelko, Pamela T. Surko, and Alan N. Unger. "State Failure Task Force Report: Phase II Findings," 1998.
- Gartzke Erik.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1, 2007.
- Gartzke, Erik and Quan Li. "The Shadow of the Invisible Hand: War, Peace, and Economic Globaliz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7, 2003.
- Gartzke, Erik, Quan Li, and Charles Bohemer. "Investing in the Peac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2, 2001.
- Harkavy, Robert E. "Pariah States and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5, No. 1, 1981.
- Henriksen, Thomas H. "The Rise and Decline of Rogue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2, 2001.
- Hoyt, Paul. "The 'Rogue State' Image in American Foreign Policy." *Global Society*. Vol. 14, 2000.
- Huber, Evelyne, Dietrich Rueschmeyer, and John D. Stephens. "The Impact of Economic Development on Democra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7, No. 3, 1993.
- Iqbal, Zaryab and Harvey Starr. "Bad Neighbors: Failed States and Their Consequenc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5, 2008.
- Kasfir, Nelson. "Domestic Anarchy, Security Dilemmas and Violent Predation: Causes of Failure." in Robert I. Rotberg. ed.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Klare, Michael. *Rogue States and Nuclear Outlaws: America's Search for a New Foreign Policy*. New York, NY: Hills & Wang, 1995.

- Klare, Michael T. "The Deadly Connection: Paramilitary Bands, Small Arms Diffusion, and State Failure." in Robert I. Rotberg. ed.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Lipset, Seymour Martin.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3, No. 1, 1959.
- Londregan, John B. and Keith T. Poole. "Poverty, the Coup Trap, and the Seizure of Executive Power." *World Politics*. Vol. 42, 1990.
- Miller, Ross A. "Domestic Structures and the Diversionary Use of For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9, No. 3, 1995.
- Most, Benjamin A. and Harvey Starr. "Theoretical and 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Diffusion."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 2, No. 4, 1980.
- Newman, Edward. "Weak States, State Failure, and Terrorism."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19, 2007.
- Ohlson, Thomas. "Understanding Causes of War and Peac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4, No. 1, 2008.
- Oliver, Michael J. "Civilizing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s." in Brett Bowden and Leonard Seabrooke. ed. *Global Standards of Market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2006.
- O'Loughlin, John and Frank Witmer. "Taking Geography Seriously: Disaggregating the Study of Civil War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Disaggregating the Study of Civil War and Transnational Viol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La Jolla, CA., March 6-8, 2005.
- Oneal, John R., Frances H. Oneal, Zeev Maoz, and Bruce Russett. "The Liberal Peace: Interdependence, Democracy, and International

- Conflict, 1950–85.”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3, No. 1, 1996.
- Oneal, John R. “Measuring Interdependence and Its Pacific Benefits: A Reply to Gartzke and Li.”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0, No. 6, 2003.
- Oneal, John R. and Bruce Russett. “The Kantian Peace: The Pacific Benefits of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885–1992.” *World Politics*. Vol. 52, No. 1, 1999.
- O’Reilly, K. P. “Perceiving Rogue States: The Use of the ‘Rogue State’ Concept by U.S Foreign Policy Elites.” *Foreign Policy Analysis*. Vol. 3, 2007.
- Ostrom, Charles, and Brian Job. “The President and the Political Use of For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1986.
- Patrick, Stewart. “‘Failed’ States and Global Security: Empirical Questions and Policy Dilemma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9, No. 4, 2007.
- 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 “Genocide and Politicide.” *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tional Wars and Failure Governance, 1955–2009*. 2010.
- Przeworski, Adam and Fernando Limongi. “Modernization: Theory and Facts.” *World Politics*. Vol. 49, No. 2, 1997.
- Rotberg, Robert I. “The New Nature of Nation–State Failure.” *Washington Quarterly*. Vol. 25, No. 3, 2002.
- Sambanis, Nicholas. “A Review of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Quantitative Literature on Civil War.” *Defence and Peace Economics*. Vol. 13, No. 3, 2002.
- Simmons, Beth and Z. Elkins. “The Globalization of Liberalization: Policy Diffusion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8, No. 1, 2004.
- Ward, Michael D., and Kristian S. Gleditsch. “Location, Location,

Location: An MCMC Approach to Modeling the Spatial Context of War and Peace.” *Political Analysis*. Vol. 10, No. 3, 2002.

Weiner, Myron. “Bad Neighbors, Bad Neighborhoods: An Inquiry into the Causes of Refugee Flow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1, 1996.

World Bank. “World Bank Group Work in Low 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A Task Force Report.” World Bank, 2002.

Wyler, Liana Sun. “Weak and Failing States: Evolving Security Threats and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RL34252. August 28, 2008.

Wyler, Liana Sun, and Dick K. Nanto. “North Korean Crime-for-Profit Activities.” CRS Report for Congress RL33885. Washington, DC: GPO, 2008.

3. 기타자료

<<http://gking.harvard.edu/events/>>.

부
록

A. 비정상국가의 경제지표

비정상국가	cGDP	gGDP	Trade	Investment	Norm
Afghanistan	303.45	13.96	85.75	12.60	13.33
Angola	2620.71	19.82	119.48	19.90	80.00
Bangladesh	408.51	6.34	43.44	6.30	46.67
Burundi	117.91	3.21	57.20	5.00	66.67
Central African Rep.	361.60	3.30	35.70	14.50	100.00
Chad	593.44	5.91	105.41	72.70	53.33
Congo, Dem. Rep.	140.11	5.93	72.45	14.90	33.33
Congo, Rep.	2050.80	4.12	143.42	53.80	33.33
Cote d'Ivoire	905.60	1.22	93.13	28.00	20.00
Cuba	9200.00	8.98	34.66	0.20	53.33
East Timor	741.00	7.48	95.40	36.30	100.00
Eritrea	274.61	10.82	46.94	28.90	66.67
Ethiopia	202.14	8.86	48.61	18.60	66.67
Guinea	352.15	2.42	71.88	17.10	73.33
Guinea-Bissau	221.08	2.25	71.50	23.60	33.33
Haiti	533.52	2.52	53.42	7.10	26.67
Iran	3328.89	6.11	56.10	2.30	86.67
Iraq	3200.00	1.50	115.14	2.20	33.33
Kenya	617.85	6.44	63.44	7.20	46.67
Korea, North	1800.00	-2.30	11.50	10.10	93.33
Lebanon	5603.95	4.62	65.85	90.80	20.00
Liberia	179.30	7.27	140.28	805.20	60.00
Lybia	9470.73	3.72	96.14	12.40	53.33
Malawi	227.57	5.82	57.50	24.50	66.67
Myanmar	888.00	11.30	0.30	40.20	26.67
Nepal	329.70	3.40	44.39	1.60	46.67
Niger	274.14	5.50	40.14	7.70	46.67
Nigeria	979.32	6.02	71.71	40.90	6.67
Pakistan	795.17	6.51	36.41	14.70	33.33
Rwanda	311.45	7.44	37.20	6.40	80.00
SaoTome	822.58	6.11	30.47	130.20	80.00
Sierra Leone	273.14	6.97	55.37	25.10	20.00
Solomon Islands	966.68	7.69	91.03	48.30	80.00
Somalia	478.00	-0.59	20.15	9.70	100.00
Sudan	923.84	9.26	44.77	30.00	100.00
Syria	1732.92	4.60	77.87	26.90	33.33
Uganda	349.70	8.57	43.67	25.90	60.00
Zambia	808.15	5.87	72.65	48.20	46.67
Zimbabwe	273.99	-5.30	129.78	220.70	53.33

B. 비정상국가 리스트

가. 취약국가

취약국가							
Countries	CPIA(2007)	PII(2007)	FSI(2007)	CIFP(2007)	ISW(2008)	SFI(2007)	PCL(2008)
Afghanistan	X	X	X	X	X	X	X
Angola	X	X			X	X	X
Bangladesh		X	X				X
Benin							X
Bolivia		X					
Bosnia		X					
Burma	X		X		X	X	
Burundi	X		X	X	X	X	X
Cambodia	X	X					
Central African Rep.	X	X	X		X		X
Chad		X	X		X	X	X
Comoros	X						
Congo, Dem. Rep.	X	X	X	X	X	X	
Congo, Rep.	X		X		X	X	
Cote d'Ivoire	X	X	X		X	X	X
Djibouti							X
Dominican Rep		X					
East Timor	X		X				
Ecuador		X					
Equatorial Guinea					X		
Eritrea	X				X		
Ethiopia			X		X	X	X
Guinea	X	X	X		X	X	
Guinea-Bissau	X	X			X	X	
Haiti	X	X	X		X		X
Iraq		X	X	X	X	X	X
Kenya		X	X				X
Kosovo	X						
Laos	X						
Lebanon			X				X
Liberia	X		X		X	X	X
Malawi			X				X
Mali							X
Moldova		X					
Mozambique							X
Nepal		X	X		X	X	
Niger		X	X		X	X	X
Nigeria	X		X		X	X	X
Korea, North		X	X		X		
Pakistan		X	X				
Rwanda					X	X	
Senegal		X					
Sierra Leone			X		X	X	X
Solomon Islands	X		X				
Somalia	X		X	X	X	X	X
Sri Lanka			X				
Sudan	X	X	X	X	X	X	
Tanzania							X
Togo	X				X		
Uganda			X		X	X	
Ukraine		X					
Uzbekistan			X				
Vanuatu	X						
West Bank and Gaza	X						
Yemen			X			X	
Zambia		X					X
Zimbabwe	X	X	X		X	X	

나. 불량국가

불량국가

Countries	US Embargo(2008)	C&T(2005)	IMF Article VIII(2008)	INCSR(2009)
Afghanistan	X	X	X	
Algeria		X		
Angola			X	X
Azerbaijan				X
Belarus	X			
Bhutan			X	
Burkina Faso				X
Burma	X		X	
Burundi			X	X
Cameroon				X
Chad				X
China	X			
Congo, Dem. Rep.	X			
Cote d'Ivoire	X			
Cuba	X	X		X
Cyprus	X			
East Timor				X
Egypt		X		
Equatorial Guinea				X
Eritrea	X		X	X
Ethiopia			X	X
Gabon				X
Gambia				X
Guinea				X
Haiti	X			
India		X		
Iran	X	X		X
Iraq	X	X	X	
Israel		X		
Kazakhstan				X
Laos			X	
Lebanon	X			
Lesotho				X
Liberia	X		X	X
Libya	X	X		X
Malawi				X
Maldives			X	
Mozambique			X	
Nigeria			X	
Korea, North	X	X		X
Korea, South		X		
Pakistan		X		
Papua NG				X
Rwanda				X
Sao Tome			X	X
Serbia		X		
Sierra Leone	X			
Solomon Islands				X
Somalia			X	
South Africa		X		
Sri Lanka	X			
Sudan	X	X		
Syria	X	X	X	
Tajikistan				X
Turkmenistan			X	
Uganda				X
Venezuela	X			
Vietnam	X			
Yemen	X			
Zimbabwe	X			X

C. 비정상국가의 지리적 확산

비정상국가	인접국가	비정상 인접국가	비정상국가비율	비정상국가	인접국가	비정상 인접국가	비정상국가비율
Afghanistan	China	0	0.50	Lebanon	Israel	0	0.50
	Iran	1			Syria	1	
	Pakistan	1		Liberia	Cote Divoire	1	1.00
	Tajikistan	0			Guinea	1	
Angola	Turkmenistan	0	0.67	Lybia	Sierra Leon	1	0.50
	Uzbekistan	1			Algeria	0	
	Congo, Dem. Rep	1		Chad	1		
	Namibia	0		Egypt	0		
Bangladesh	Zambia	1	0.50	Niger	1	0	
	India	0		Tunisia	0		
Burundi	Myanmar	1	0.67	Malawi	Sudan	1	0.33
	Congo, Dem. Rep	1			Mozambique	0	
Central African Rep.	Rwanda	1	0.80	Myanmar	Tanzania	0	0.00
	Tanzania	0			Zambia	1	
	Cameroon	0		China	0		
	Chad	1		India	0		
Chad	Congo, Dem. Rep	1	0.83	Nepal	Laos	0	0.00
	Congo, Rep	1			Thailand	0	
	Sudan	1		China	0		
	Cameroon	0		India	0		
Congo, Dem. Rep.	Central African Rep	1	0.89	Niger	Algeria	0	0.43
	Lybia	1			Benin	0	
	Niger	1		Burkina Fasc	0		
	Nigeria	1		Chad	1		
Congo, Rep.	Sudan	1	0.50	Nigeria	Lybia	1	0.50
	Angola	1			Mali	0	
	Burundi	1		Nigeria	1		
	Central African Rep	1		Benin	0		
Congo, Rep.	Congo, Rep	1	0.50	Pakistan	Cameroon	0	0.50
	Rwanda	1			Chad	1	
	Tanzania	0		Niger	1		
	Sudan	1		Afghanistan	1		
Cote d'Ivoire	Uganda	1	0.40	Rwanda	China	0	0.75
	Zambia	1			India	0	
	Cameroon	0		Iran	1		
	Central African Rep	1		Burundi	1		
Cuba	Congo, Dem. Rep	1	0.00	SaoTome	Congo, Dem	1	1.00
	Gabon	0			Tanzania	0	
	Burkina Faso	0		Uganda	1		
	Ghana	0		Solomon Islands	0		
East Timor	Guinea	1	0.67	Sierra Leone	Guinea	1	0.67
	Liberia	1			Liberia	1	
	Mali	0		Somalia	Djibouti	0	
	Indonesia	0			Ethiopia	1	
Eritrea	Ethiopia	0	0.80	Sudan	Kenya	1	0.89
	Sudan	1			Chad	1	
	Djibouti	0		Central Afric	1		
	Eritrea	1		Congo, Dem	1		
Ethiopia	Kenya	1	0.67	Syria	Egypt	0	0.40
	Somalia	1			Israel	0	
	Sudan	1		Jordan	0		
	Cote Divoire	1		Lebanon	0		
Guinea	Guinea-Bissau	1	0.50	Uganda	Turkey	0	0.80
	Liberia	1			Congo, Dem	1	
	Mali	0		Kenya	1		
	Senegal	0		Rwanda	1		
Guinea-Bissau	Sierra Leon	1	0.00	Zambia	Sudan	1	0.50
	Guinea	1			Tanzania	0	
	Senegal	0		Angola	1		
	Dominican Rep	0		Botswana	0		
Haiti	Afghanistan	1	0.43	Zimbabwe	Congo, Dem	1	0.25
	Armenia	0			Malawi	1	
	Azerbaijan	0		Mozambique	0		
	Iraq	1		Namibia	0		
Iran	Turkey	0	0.40	Zimbabwe	Tanzania	0	0.25
	Turkmenistan	0			Zimbabwe	1	
	Iran	1		Botswana	0		
	Jordan	0		Mozambique	0		
Iraq	Kuwait	0	0.00	Zimbabwe	South Africa	0	0.53
	Saudi Arabia	0			Zambia	1	
	Syria	1		전체평균			
	Ethiopia	1					
Kenya	Somalia	1	0.75				
	Sudan	1					
	Tanzania	0					
	China	0					
Korea, North	Korea, South	0	0.00				
	Russia	0					

D. 글로벌 경제지표

가. 1인당 GDP 변화

Year	Obs	Mean	Min	Max	Std. Dev.
1960	106	488.91	40.63	2881.10	595.52
1961	107	508.26	41.23	2934.55	619.90
1962	110	580.03	35.37	5518.00	803.38
1963	110	606.66	41.54	5106.40	812.24
1964	110	655.98	41.60	4938.48	862.25
1965	117	716.96	46.46	4452.65	877.09
1966	118	762.90	37.77	4554.39	942.26
1967	121	779.02	46.83	4207.97	972.01
1968	123	807.25	48.82	4491.42	1009.80
1969	123	872.61	51.67	4802.64	1085.78
1970	128	998.36	58.24	4998.73	1213.04
1971	129	1105.43	57.18	5361.62	1356.32
1972	129	1278.93	61.31	5838.13	1581.58
1973	130	1645.54	70.06	7535.18	2033.78
1974	130	2199.82	72.29	17462.55	3056.72
1975	130	2385.17	114.39	18724.49	3238.29
1976	131	2579.23	106.21	20744.27	3604.22
1977	134	2800.20	98.67	22511.79	3893.25
1978	133	3183.93	100.86	20257.67	4303.74
1979	135	3760.15	96.92	26497.89	5183.89
1980	144	4304.69	93.82	34122.32	6084.86
1981	148	4106.28	102.54	34486.69	5790.22
1982	150	3907.09	117.23	27434.63	5233.83
1983	151	3744.12	112.58	22181.98	4838.26
1984	152	3689.29	122.84	20799.77	4767.86
1985	157	3597.81	137.77	19492.08	4694.09
1986	157	4054.89	131.37	28322.78	5561.51
1987	163	4593.90	145.23	37755.48	6660.98
1988	164	4994.80	150.65	41119.80	7304.91
1989	165	5117.19	97.16	39125.70	7377.32
1990	180	5550.41	97.76	49028.35	8409.90
1991	181	5733.67	142.20	50506.08	8614.81
1992	182	5956.13	110.72	54793.95	9167.16
1993	184	5766.40	82.48	55458.61	8901.77
1994	185	6007.31	69.12	63737.12	9593.77
1995	187	6891.10	69.31	78472.94	11105.19
1996	188	7248.80	77.64	79903.79	11415.76
1997	189	6939.36	128.65	72465.61	10686.78
1998	191	7209.75	128.42	77244.63	11207.87
1999	191	7398.72	95.08	82022.49	11679.71
2000	193	7370.33	84.71	75585.00	11440.54
2001	193	7156.14	89.74	74944.57	11312.58
2002	192	7513.36	92.82	79956.55	12115.84
2003	192	8703.15	85.54	90289.95	14021.13
2004	192	10184.60	92.78	100514.30	16057.65
2005	192	11097.88	107.87	105372.60	17175.45
2006	190	12248.69	120.84	108710.00	18550.15
2007	189	13623.23	125.00	117698.00	20785.43
2008	175	11976.65	144.04	109903.10	18253.54

나. GDP 변화

Year	Obs	Mean	Std. Dev.	Min	Max
1960	112	280	1090	0.09	7280
1961	113	290	1130	0.09	7610
1962	115	301	1190	0.10	8020
1963	115	316	1250	0.09	8420
1964	115	337	1330	0.10	8980
1965	122	336	1360	0.10	9450
1966	124	349	1430	0.10	9990
1967	125	361	1480	0.09	10400
1968	126	381	1570	0.09	11100
1969	126	403	1650	0.10	11700
1970	133	406	1680	0.06	12200
1971	133	423	1740	0.06	12700
1972	133	448	1850	0.06	13500
1973	134	474	1960	0.08	14300
1974	135	479	1970	0.11	14600
1975	138	475	1970	0.10	14700
1976	139	495	2050	0.08	15400
1977	142	504	2120	0.08	16100
1978	142	526	2210	0.08	16800
1979	144	540	2290	0.07	17500
1980	154	517	2250	0.04	17800
1981	160	507	2250	0.04	18100
1982	164	497	2220	0.04	18200
1983	164	508	2280	0.04	18600
1984	169	516	2350	0.04	19500
1985	172	526	2420	0.04	20200
1986	174	538	2490	0.04	20900
1987	178	546	2550	0.04	21700
1988	180	564	2650	0.05	22700
1989	183	582	2730	0.05	23500
1990	196	561	2720	0.05	24200
1991	198	564	2750	0.04	24600
1992	200	571	2790	0.05	25100
1993	201	578	2830	0.05	25600
1994	203	591	2910	0.05	26400
1995	205	603	2970	0.05	27200
1996	205	624	3070	0.05	28100
1997	207	641	3160	0.06	29100
1998	208	653	3230	0.06	29800
1999	211	665	3310	0.07	30800
2000	213	686	3420	0.07	32000
2001	210	707	3490	0.07	32500
2002	209	725	3560	0.07	33100
2003	208	748	3650	0.08	34000
2004	207	785	3800	0.07	35400
2005	206	817	3920	0.08	36600
2006	204	861	4080	0.08	38100
2007	203	902	4230	0.08	39600
2008	188	992	4440	0.08	40200

E. 주요 비정상국가 지표

가. USAID의 C/FACTS

	EFFECTIVENESS	LEGITIMACY
POLITICAL	1. Quality of public service/ government effectiveness 2. Number of coups d'état in last five years 3. Government revenues, as percentage of GDP	4. Nature of political participation (absence or presence of factionalism) 5. % of population experiencing political discrimination 6. Extent of citizen participation in selecting government 7. Asylum requests, as % of population
SECURITY	8. Intensity of most severe ongoing armed conflict 9. Size of displaced population 10. Proportion of area affected by ethnic or revolutionary war	11. State use of political terror 12. Extent of state repression of citizens 13. Presence/change in support for militant groups
ECONOMIC	14. Three-year change in real GDP (PPP) per capita 15. Change in foreign investment 16. Poverty rate (% of population living on <\$2 [PPP]/day) 17. Primary commodity exports/total exports 18. Three-year inflation rate	19. % of population experiencing economic discrimination 20. Corruption 21. Extent of rule of law/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22. Number of days to start a business
SOCIAL	23. Infant mortality rate 24. Youth literacy rate 25. Change in % of population living with HIV/AIDS 26. DPT and measles immunization rates 27. % of population with access to improved water supplies/ sanitation	28. Male/female literacy ratio 29. Male/female life expectancy ratio 30. % of GDP spent on military 31. Deviance from GDP-predicted infant mortality 32. Deviance from GDP-predicted primary school completion rate 33. Cultural and religious freedoms

나. World Bank의 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riteria (weight in index)		Indicators (weight in index)
ECONOMIC MANAGEMENT (0.25)	q1 Macroeconomic Management (0.0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netary/exchange rate policy with clearly defined price stability objectives • Aggregate demand policies focus on maintaining short and medium-term external balance • Avoid crowding out private investment
	q2 Fiscal Policy (0.0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mary balance manag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 Public expenditure/revenue can be adjusted to absorb shocks • Provision of public goods including infrastructure consistent with medium-term growth
	q3 Debt Policy (0.0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bt burden indicators do not signal debt servicing difficulties • External and internal debt contracted with view to achieving/maintaining debt sustainability • Coordination between debt management and other macroeconomic policies • Debt management unit well established, has adequate system for recording and monitoring debt, and good analytical capacity as indicated by regular analytical work on debt • Accurate, timely, and publicly available debt data • Government has clear financing strategy and the legal framework for borrowing is clearly defined
STRUCTURAL POLICIES (0.25)	q4 Trade (0.083)	<p>75 percent weight for <u>trade restrictiveness</u>: (0.06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erage tariff rates, number of tariff bands, maximum tariff band • Internal taxes do not discriminate between imported and local products •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trade regime including in the use of NTBs <p>25 percent weight for <u>customs/trade facilitation</u>: (0.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putation of customs with respect to professionalism and corruption • Use of risk management, IT, physical examination • Processing of collections and refunds • Documentation of customs procedures • Resolutions of appeals of customs decisions

Criteria (weight in index)		Indicators (weight in index)
STRUCTURAL POLICIES (0.25) (CONT.)	q5 Financial Sector (0.083)	<p><u>Financial stability</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king sector's vulnerability to shocks • Banking system soundness (share of NPL and level of capital at risk) • Adherence to Basel Core Principles • Quality of risk management in financial institutions • Quality of supervision <p><u>Financial sector efficiency, depth, and resource mobilization</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ze and reach of financial markets •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 Interest rate spreads • Private sector credit/GDP • Efficiency of micro finance <p><u>Access to financial service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velopment of payment, clearance, and credit reporting systems • Share of population with access to formal sector financial services • Access of SMEs to finance •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supporting access to finance
	q6 Business Regulatory Environment (0.083)	<p><u>Regulations affecting entry, exit, and competition</u> (0.0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s on or investment licensing requirements • Procedures to enter or exit • Legal framework (and implementation thereof) to address anti-competitive conduct by firms • Procurement by public sector firms <p><u>Regulations of ongoing business operations</u> (0.0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rational licensing, permits, compliance and insp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taxes and customs • State intervention in goods markets (state ownership in competitive sectors, price controls, state making administrative allocation/decisions about production) • Corporate governance laws (and enforcement thereof) to encourage disclosure and protect shareholders rights <p><u>Regulations of goods and factor markets</u> (0.0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ployment law provides for flexibility in hiring and firing • State intervention in labor and land markets limited to regulation and/or legislation to smooth out market imperfections • Procedures to register property are simple and low-cost

Criteria (weight in index)		Indicators (weight in index)
POLICIES FOR SOCIAL INCLUSION/EQUITY (0.25)	q7 Gender Equality (0.05)	<p><u>Human capital development</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n primary completion rates, and access to secondary education (female to male enrollment) • Access to delivery care and family planning services • Adolescent fertility rate <p><u>Access to economic and productive resources</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der disparitie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land tenure, property ownership and inheritance practices <p><u>Status and protection under the law</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Law gives men and women equal individual and family rights. • Violence against women considered a crime • Gender dispariti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at national level
	q8 Equity of Public Resource Use (0.05)	<p><u>Government spending</u> (0.0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entification of those (individuals, groups, localities) that are poor, vulnerable, or have unequal access to services and opportunities • Adoption of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with explicit interventions to assist groups identified above • Systematic tracking of composition and incidence of public expenditures and their results feed back into subsequent allocations <p><u>Revenue collection</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idence of major taxes (progressive or regressive) and their alignment with poverty reduction priorities
	q9 Building Human Resources (0.05)	<p><u>Health and nutrition including reproductive health</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quitable access to basic health services • Prevention of malnutrition <p><u>Education</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stained progress towards universal basic education, literacy, and more equitable access to early child development program services • Standards for teacher preparation, student learning, and oversight of private/NGO providers • Systematic tracking of school performance and student learning outcomes and feedback to schools and parents • Policies for post-basic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 Quality, equity of access, and efficiency of resource use <p><u>HIV/AIDS, tuberculosis, malaria</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vention, treatment, care and support of HIV/AIDS, tuberculosis, malaria • Track disease prevalence, resources, and program implementation

Criteria (weight in index)		Indicators (weight in index)
POLICIES FOR SOCIAL INCLUSION/EQUITY (0.25) (CONT.)	q9 (cont) Building Human Resources (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ality and timeliness of services • Focus on the poor • Cost effective use of public resources
	q10 Social Protection and Labor (0.05)	<p><u>Social safety net programs</u> (0.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protection programs provide income support to poor and vulnerable groups <p><u>Protection of basic labor standards</u> (0.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re labor standards <p><u>Labor market regulations</u> (0.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bor market regulations on health and safety, working conditions, and hiring and firing <p><u>Community driven initiatives</u> (0.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courage and support communities' own development initiatives or local accountability mechanisms <p><u>Pension and old age savings programs</u> (0.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nsion and savings programs provide income security to most potentially vulnerable groups
	q11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ions and policies (and implementation thereof) for pollution and natural resource. • Information widely available • Priority setting • Sector ministries incorporate environmental concerns
PUBLIC SECTOR MANAGEMENT AND INSTITUTIONS (0.25)	q12 Property Rights and Rule- Based Governance (0.05)	<p><u>Legal basis for secure property and contract rights</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nsparent and well-protected property rights • Current and non-corrupt property registries • Enforced contracts <p><u>Predictability, transparency, and impartiality of laws and regulations affecting economic activity</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nsparent and predictable laws and regulations affecting businesses and individuals • Low cost means for pursuing small claims • Impartial and predictable applic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p><u>Crime and violence as impediment to economic activity</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ll-functioning and accountable police force protects citizens and their property from crime and violence.

Criteria (weight in index)		Indicators (weight in index)
PUBLIC SECTOR MANAGEMENT AND INSTITUTIONS (0.25) (CONT.)	q13 Quality of Budgetary and Financial Management (0.05)	<p><u>Comprehensive and credible budget linked to policy priorities</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ulti-year expenditure projections integrated into budget formulation process Spending ministries and the legislature consulted in budget formulation, adhering to fixed budget calendar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Minimal and transparent off-budget items <p><u>Financial management</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dget implemented as planned Budget monitoring based 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Negligible payment arrears <p><u>Fiscal reporting</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conciliation of banking and fiscal records Regular in-year fiscal reporting Timely preparation of public accounts Timely auditing of accounts and appropriate action taken on budget reports and audit findings
	q14 Efficiency of Revenue Mobilization (0.05)	<p><u>Tax policy</u> (0.0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lk of revenues from low-distortion taxes such as sales/VAT, property, etc. Low and relatively uniform import taxes Functional export rebate or duty drawback Broad tax base Few arbitrary exemptions <p><u>Tax administration</u> (0.0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Rule-based tax administration Low administrative and compliance costs Tax payer service and information program Efficient and effective appeals mechanism

Criteria (weight in index)		Indicators (weight in index)
PUBLIC SECTOR MANAGEMENT AND INSTITUTIONS (0.25) (CONT.)	q15 Qu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0.05)	<p><u>Policy coordination and responsiveness</u> (0.01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ffective coordination mechanism ensure high degree of policy consistency <p><u>Service delivery and operational efficiency</u> (0.01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rganizational structures along functional lines with little duplication; regular review of business processes to ensure efficient decision making <p><u>Merit and ethics</u> (0.01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ring and promotion based on merit and performance; ethics prevail <p><u>Pay adequacy and management of the wage bill</u> (0.01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stainable wage bill and does not crowd out public services spending Pay and benefit levels adequate Flexibility in paying higher wages for hard to fill positions
	q16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0.05)	<p><u>Accountability of the executive to oversight institutions and of public employees for their performance</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ong public service ethic reinforced by audits, inspections, and adverse publicity for performance failures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ry Corruption monitored and sanctions implemented <p><u>Access of civil society to information on public affairs</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sults and costs of government decisions clear and communicated to public Citizens access government documents at nominal cost Media independent of government and fulfill critical oversight roles <p><u>State capture by narrow vested interests</u> (0.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rules for public servants observed and enforced Top government officials required to disclose income and assets and can be prosecuted for malfeasance

다. EIU의 PII(Political Instability Index)

Underlying Vulnerability	Inequality	Gini coefficient 0 if lower than 40 1 if 40-50 2 if higher than 5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e history	date of independence 0 if before 1900 1 if between 1900 and 1950 2 if after 1950	CIA, Factbook.
	Corrupti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atings 0 for low 1 for moderate 2 for high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thnic fragmentation	Ethnic fractionalisation index (0 to 100 scale) 0 if lower than 30 1 if 30 to 50 2 if higher than 50	Alesina Alberto et al, "Fractionalization", NBER Working Paper 9411, 2003.
	Trust in institutions	Percentage of population that trusts/has confidence in parliament 0 if more than 50% 1 30-50% 2 if less than 30%	The Euro, Latino, Africa and Asia Barometer polls; World Values Survey
	Status of minorities	High rates of economic or political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0 if low or no discrimination (MRP scores lower than 3) 1 if significant discrimination (if score of 3 by for any minority by MRP) 2 if extreme discrimination (if score of 4 for any minority by MRP)	Minorities at Risk Project (MRP)

History of political instability	Significant episodes or events of political instability (regime change) as recorded by 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 (PITF) 0 if no recorded episode 1 if one major episode 2 if two or more episodes	PITF database
Proclivity to labour unrest	Risk of labour unrest 0 if low 1 if moderate 2 if high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isk Briefing
Level of social provision	"Expected" infant mortality rate 0 if the actual infant mortality rate is lower than predicted, or if the actual rate does not exceed the predicted rate by a significant margin 1 if ratio between actual and predicted infant mortality rate is greater than 1.1 but less than 1.5 2 if ratio between actual and predicted infant mortality rate is greater than 1.5	Economist Intelligence Unit;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 country's neighbourhood	Average vulnerability index (calculated on the basis of all indicators except the neighbourhood indicator) for all of the country's geographic neighbours 0 if index is less than 5.8 1 if index is 5.8 to 6.3 2 if index is higher than 6.3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egime type	Classification of political regimes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Regime type and factionalism	Interaction of regime type with the existence of political factionalism 4 if a country is both an intermediate regime and suffers from factionalism 0 if not	Polity IV database
Economic Distress	Growth in incomes	Growth in real GDP per head 0 if forecast growth in real GDP per head is positive, with minimal risks that it could be negative 1 if a fall in GDP per head is forecast or there is a significant risk of that occurring, but the decline is less than by 4% 2 if a forecast decline in GDP per head is greater than by 4% or there is a significant risk that this could occur	Economist Intelligence Unit
	Unemployment	Unemployment rate, % 0 if forecast unemployment rate is less than 6% and there are only minimal risks that it could be higher than 6% 1 if a forecast unemployment rate is higher than 6% or there is a significant risk of that occurring, but the rate does not surpass 10%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2 if a forecast unemployment rate is higher than 10% or there is a significant risk that this could occur	
	Level of income per head	GDP per head at PPP, US\$ 0 if more than US\$12,000 1 if between US\$3,000 and US\$12,000 2 if less than US\$3,000	

라. Fund for Peace의 FSI(Failed State Index)

Social Indicators	<p>Mounting Demographic Pressur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sures deriving from high population density relative to food supply and other life-sustaining resources . Pressures deriving from group settlement patterns that affect the freedom to participate in common forms of human and physical activity, including economic productivity, travel, social interaction, religious worship . Pressures deriving from group settlement patterns and physical settings, including border disputes, ownership or occupancy of land, access to transportation outlets, control of religious or historical sites, and proximity to environmental hazards . Pressures from skewed population distributions, such as a "youth or age bulge," or from divergent rates of population growth among competing communal groups
	<p>Massive Movement of Refugees or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creating Complex Humanitarian Emergenc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ced uprooting of large communities as a result of random or targeted violence and/or repression, causing food shortages, disease, lack of clean water, land competition, and turmoil that can spiral into larger humanitarian and security problems, both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p>Legacy of Vengeance-Seeking Group Grievance or Group Parano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story of aggrieved communal groups based on recent or past injustices, which could date back centuries . Patterns of atrocities committed with impunity against communal groups . Specific groups singled out by state authorities, or by dominant groups, for persecution or repression . Institutionalized political exclu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blic scapegoating of groups believed to have acquired wealth, status or power as evidenced in the emergence of "hate" radio, pamphleteering and stereotypical or nationalistic political rhetoric
	<p>Chronic and Sustained Human Fligh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ain drain" of professionals, intellectuals and political dissidents fearing persecution or repression . Voluntary emigration of "the middle class," particularly economically productive segments of the population, such as entrepreneurs, business people, artisans and traders, due to economic deterioration . Growth of exile communities
<p>Economic Indicators</p>	<p>Uneven Economic Development along Group Lin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based inequality, or perceived inequality, in education, jobs, and economic status . Group-based impoverishment as measured by poverty levels, infant mortality rates, education levels . Rise of communal nationalism based on real or perceived group inequalities
	<p>Sharp and/or Severe Economic Declin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pattern of progressive economic decline of the society as a whole as measured by per capita income, GNP, debt, child mortality rates, poverty levels, business failures, and other economic measures . Sudden drop in commodity prices, trade revenue, foreign investment or debt payments . Collapse or devaluation of the national currency . Extreme social hardship imposed by economic austerity programs . Growth of hidden economies, including the drug trade, smuggling, and capital flight . Increase in levels of corruption and illicit transactions among the general popu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ilure of the state to pay salaries of government employees and armed forces or to meet other financial obligations to its citizens, such as pension payments
Political Indicators	Criminalization and/or Delegitimization of the 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sive and endemic corruption or profiteering by ruling elites . Resistance of ruling elites to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 Widespread loss of popular confidence in state institutions and processes, e.g., widely boycotted or contested elections, mass public demonstrations, sustained civil disobedience, inability of the state to collect taxes, resistance to military conscription, rise of armed insurgencies . Growth of crime syndicates linked to ruling elites
	Progressive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appearance of basic state functions that serve the people, including failure to protect citizens from terrorism and violence and to provide essential services, such as health, education, sanitation, public transportation . State apparatus narrows to those agencies that serve the ruling elites, such as the security forces, presidential staff, central bank, diplomatic service, customs and collection agencies
	Suspension or Arbitrary Application of the Rule of Law and Widespread Violation of Human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ergence of authoritarian, dictatorial or military rule in which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ocesses are suspended or manipulated . Outbreak of politically inspired (as opposed to criminal) violence against innocent civilians . Rising number of political prisoners or dissidents who are denied due proces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p>norms and practic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despread abuse of legal, political and social rights, including those of individuals, groups or cultural institutions (e.g., harassment of the press,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internal use of military for political ends, public repression of political opponents, religious or cultural persecution)
	<p>Security Apparatus Operates as a "State Within a Sta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ergence of elite or praetorian guards that operate with impunity . Emergence of state-sponsored or state-supported private militias that terrorize political opponents, suspected "enemies," or civilians seen to be sympathetic to the opposition . Emergence of an "army within an army" that serves the interests of the dominant military or political clique . Emergence of rival militias, guerilla forces or private armies in an armed struggle or protracted violent campaigns against state security forces
	<p>Rise of Factionalized Elit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gmentation of ruling elites and state institutions along group lines . Use of nationalistic political rhetoric by ruling elites, often in terms of communal irredentism, (e.g., a "greater Serbia") or of communal solidarity (e.g., "ethnic cleansing" or "defending the faith")
	<p>Intervention of Other States or External Political Act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itary or Para-military engagement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state at risk by outside armies, states, identity groups or entities that affect the internal balance of power or resolution of the conflict . Intervention by donors, especially if there is a tendency towards over-dependence on foreign aid or peacekeeping missions

마. Carleton University의 CIFP(Country Indicators for Fragility Project)

거버넌스(Governance)

Indicator Name	Indicator Description	Indicator Source
Freedom of the Press	Press freedom	Freedom House
Government Effectiveness	Government effectiveness, point estimate	World Bank Group, Governance Matters V
Level of Corruptio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Transparency International
Level of Democracy	POLITY2 - Net Democracy/Autocracy score	Polity IV
Level of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olitical organisations	Number of organizations in which the country is a member	CIA World Factbook
Percentage of Female Parliamentarians	Proportion of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Permanence of Regime Type	Number of years since last regime change	Polity IV
Refugees hosted	Refugee population by country or territory of asylu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UNHCR
Restrictions on Civil Liberties	Civil Liberties Index	Freedom House, Annual Survey of Freedom
Restrictions on Political Rights	Political Rights Index	Freedom House, Annual Survey of Freedom
Rule of Law	Rule of law, point estimate	World Bank Group, Governance Matters V
Voice and Accountability in Decision-making	Voice and accountability, point estimate	World Bank Group, Governance Matters V

경제(Economics)

Indicator Name	Indicator Description	Indicator Source
Economic growth – Percentage of GDP	GDP Growth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conomic Size – Relative –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constant 2000 US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conomic Size – Total – GDP	GDP (constant 2000 US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xternal Debt – percentage of GNI	Present value of debt (% of GNI)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FDI – percentage of GDP	Foreign direct investment, net inflows (% of GD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Foreign Aid – percentage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s	Aid (%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Foreign Aid – Total per capita	Aid per capita (current U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equality – GINI Coefficient	GINI Coefficient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flation	Inflation, consumer prices (annual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formal Economy – Black Market	Informal Market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Informal Economy – Ratio of PPP to GDP	PPP/GDP (both in constant 2000 international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frastructure – Reliability of Electricity Supply	Electric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osses, % of output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frastructure – Telephone mainlines per capita	Telephone mainlines (per 1000 peopl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ternet Usage per capita	Internet users (per 1,000 peopl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vestment Climate – Contract Regulation	Contract Regulation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Level of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sations	Number of organizations in which the country is a member	CIA World Factbook
Paying Taxes	Paying taxes rank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Regulatory Quality	Regulatory quality, point estimate	World Bank Group: Governance Matters
Remittances Received – percentage of GDP	Workers' remittances and compensation of employees, received (US\$)/GD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Calculated by CIFP
Reserve Holdings – Total	Total reserves (inCMudes gold, current U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Trade Balance – percentage of GDP	Current Account Balance (as % of GD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Trade Openness – percentage of GDP	Trade (% of GD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Unemployment – Total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ur forc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men in the labour force	women as a percentage of the labour forc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안전 및 범죄(Security & Crime)

Indicator Name	Indicator Description	Indicator Source
Conflict intensity	Number of conflict-related deaths per year	Uppsala Conflict Database
Dependence on External Military Support	Intervention of other states or external actors	Fund for Peace (FFP) Failed States Index
Human Rights - Empowerment	Empowerment Rights Index	CIRI Human Rights Index
Human Rights - Physical Integrity	Physical Integrity Rights Index	CIRI Human Rights Index
Military Expenditure - percentage of GDP	Military expenditure (% of GD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Political Stability	Political stability/no violence, point estimate	World Bank Group: Governance Matters V
Refugees Produced	Refugee population by country or territory of origin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isk of Ethnic Rebellion	National Aggregate Ethnic Risk Score	CIFP Score based on Minorities at Risk Data Set, single measure
Terrorism - Number of Fatalities	Total number of fatalities during recorded terrorist attacks per year	US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Terrorism - Number of Incidents	Total number of recorded terrorist attacks per year	US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인적개발(Human Development)

Indicator Name	Indicator Description	Indicator Source
Access to Improved Water	Improved water source (% of population with acces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ccess to Sanitation	Improved sanitation facilities (% of population with acces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ducation - Primary Completion - female	Primary completion rate, females (% of relevant age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ducation - Primary Completion - total	Primary completion rate, total (% of relevant age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ducation Primary Enrolment - total	School enrollment, primary (% gros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ducation - Primary Enrolment - Ratio of Female to Male	Ratio of female to male primary enrolment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Food Security - Aid as percentage of total consumption	Share (%) of food aid in total consumption	FAOSTAT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nder Empowerment Measure	UNDP HDR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nder Development Index	UNDP HDR
Health Infrastructure -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DP	Health expenditure, total (% of GD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IV/AIDS - New AIDS Cases Reported	AIDS new cases reported (UNAIDS-WHO)	UN Common Database
HIV/AIDS - Percentage of Adult Females Infected	Female adults with HIV (% of population ages 15-49 with HIV)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IV/AIDS - Proportion of Adult population infected	Prevalence of HIV, total (% of population ages 15-4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uman Development Index	Human Development Index	UNDP HDR
Infant Mortality	Mortality rate, infant (per 1,000 live birth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Literacy - total	Literacy rate, adult total (% of people ages 15 and abov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Literacy - female	Literacy rate, adult female (% of females ages 15 and abov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인구학적 지표(Demography)

Indicator Name	Indicator Description	Indicator Source
Life Expectancy - Female	Life expectancy at birth, female (year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Life Expectancy - Total	Life expectancy at birth, total (year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Migration - Estimated Net	Migration, international net rate per year (UN Pop. Div. quinquennial estimates and projections)	UN Common database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density (people per sq. k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Population Diversity - Ethnic
Population Diversity - Religious
Population Growth	Population growth (annual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lum Population - proportion of populatoin	Slum population in urban areas/total population	UN Common Databas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Calculated by CIPF
Urban Growth Rate - Annual percentage	Urban population growth (annual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Youth Bulge - Pop. Aged 0-14 as a % of Total	Population ages 0-14 (% of total)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환경(Environment)

Indicator Name	Indicator Description	Indicator Source
Arable/fertile land availability	Hectares per person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Consumption - Commercial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Energy consumption, commercial, per capita, kilograms oil equivalent, thousands (UNSD/SYB50) [code 17510]	UN Common database
Consumption - Use of solid fuels	Air pollution, percentage of population using solid fuels (WHOMDG) [code 30020]	UN Common database
Disaster Risk Index	Average number of deaths per million inhabitants - UNDP/BCPR and UNEP/GRID-Geneva, Disaster Risk Index	UNDP website, Disaster Risk Index Project
Ecological Footprint - Global hectares per capita	Total Ecological Footprint, global ha/person	Global Footprint Network
Water - annual withdrawal	Water withdrawal as a percentage of total renewable water resources	FAOSTAT
Water - Renewable available per capita	Cubic metres per capita per year	FAO Aquastat
Forest - annual percentage change in area	Percentage annual change	Data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05
Pollution - CO2 Emissions per capita	CO2 emissions (metric tons per capita)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Pollution - CO2 Emissions per dollar PPP	CO2 emissions (kg per 2000 PPP \$ of GD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바. Brookings의 ISW(Index of State Weakness)

Political indicators	Government Effectiveness	<p>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the quality of the civil service and the degree of its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ressures, the quality of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and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such policies.'</p>	World Bank, <i>Governance Matters VI</i> , 2007
	Rule of Law	<p>the 'extent to which agents have confidence in and abide by the rules of society, in particular the quality of contract enforcement, the police, and the courts, as well as the likelihood of crime and violence.'</p>	World Bank, <i>Governance Matters VI</i> , 2007.
	Control of Corruption	<p>the 'extent to which public power is exercised for private gain, including petty and grand forms of corruption, as well as 'capture' of the state by elites and private interests.'</p>	World Bank, <i>Governance Matters VI</i> , 2007.
	Voice & Accountability	<p>the 'extent to which a country's citizens are able to participate in selecting their government, as well a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a free media.'</p>	World Bank, <i>Governance Matters VI</i> , 2007.

	Freedom	Score for 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rights	Freedom House, <i>Freedom in the World 2007</i> .
Security indicators	Conflict Intensity	'Magnitude of societal-systemic impact (Mag)'	Monty G. Marshall, Center for Systemic Peace University of Maryland, George Mason University, Major Episodes of Political Violence 1946 - 007.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the 'perceptions of the likelihood that the government will be destabilized or overthrown by unconstitutional or violent means, including domestic violence and terrorism.'	World Bank, <i>Governance Matters VI, 2007</i>
	Incidence of Coups	Extraconstitutional or violent overthrow of political leaders	Archigos: A Database on Leaders, Version 2.8, 2007
	Gross Human Rights Abuses	Widespread oppression and terror to maintain power	Mark Gibne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Asheville, <i>Political Terror Scale, 2007</i> .
	Territory Affected by Conflict	the 'scaled portion of [a] country affected by fighting' in ethnic and revolutionary wars, ranging in score from 0 (less than one-tenth of the country and no significant citie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to 4 (more than one-half the country	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 2006.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Economic indicators	Gross National Income (GNI) per Capita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converted into current U.S. dollars	World Bank, <i>World Development Indicators</i> , 2007
	Growth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nual percentage growth in real GDP at market prices based on constant (inflation-adjusted) local currency.	World Bank, <i>World Development Indicators</i> , 2007
	Inflation	Annual absolute percentage change in consumer pric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i> , 2007
	Income Inequality	Gini coefficient	World Bank, <i>World Development Indicators</i> , 2007
	Regulatory Quality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formulate and implement sound 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permit and promote private sector development.'	World Bank, <i>Governance Matters VI</i> , 2007
Social Welfare indicators	Child Mortality	The annual probability (per 1,000 live births) of a child dying before reaching five years of age	UNICEF, <i>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7</i>
	Primary School Completion	the proportion of pupils starting grade 1 who reach grade 5.	World Bank, <i>World Development Indicators</i> , 2007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whose food intake is insufficient t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06. Available at

		meet dietary energy requirements continuously.'	http://www.fao.org/faostat/foodsecurity/index_en.htm .
	A ccess to Improved Water Sources & Improved Sanitation Facilities	the percent of the population with access to improved sanitation facilities and access to improved water sources.	World Bank, <i>World Development Indicators</i> , 2007
	Life Expectancy	Life expectancy at birth	World Bank, <i>World Development Indicators</i> , 2007.

사. George Mason University의 SFI(State Fragility Index)

Security Indicators	Security Effectiveness	general security and vulnerability to political violence	Monty G. Marshall, Major Episodes of Political Violence, 1946-2009, www.systemicpeace.org .
	Security Legitimacy	state repression, 1994-2007	Mark Gibney, Linda Cornett, and Reed Wood, Political Terror Scale (PTS; www.politicalterroryscale.org).
Political Indicators	Political Effectiveness	Regime/Governance Stability	Monty G. Marshall, Keith Jagers, and Ted Robert Gurr, Polity IV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08; Henry S. Bienen and Nicolas van de Walle, Leadership Duration (updated by Monty G. Marshall); and Monty G. Marshall and Donna Ramsey Marshall, Coups d'Etat, 1960-2008, datasets (www.systemicpeace.org).
	Political Legitimacy	Regime/Governance Inclusion, 2008	Polity IV, 2008; Ted Robert Gurr, Monty G. Marshall, and Victor Asal, Minorities at Risk Discrimination 2008 (updated by Monty G. Marshall); and Ted Robert Gurr and Barbara Harff, Elite Leadership Characteristics 2008 (updated by Monty G. Marshall) data.
Economic Indicators	Economic Effectiveness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constant 2000 US\$), 2001-200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www.worldbank.org/data).

	Economic Legitimacy	Share of Export Trade in Manufactured Goods, 1994-2006.	UN Development Programme, Structure of Trade, 2008, and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2008, (manufacturing as a percentage of merchandise exports).
Social Indicators	Social Effectiveness	Human Capital Development, 2006.	UNDP <i>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i> , Human Development Index (HDI), 2006 (www.undp.org).
	Social Legitimacy	Human Capital Care, 2008.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 Base, 2009, (IDB; www.census.gov/ipc/www/idb), Infant Mortality Rate, 2008.
<i>Regional Effects</i>		Two important "neighborhood" clusters of countries: "Mus" indicates a Muslim region country that is characterized by a Muslim majority (countries mainly located in northern Africa,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nd Southeast Asia) and "Afr" indicates a country located in non-Muslim (sub-Saharan) Africa.	

아. Caprioli and Trumbore(2003)의 RSI(Rogue State Index)

Gender equality	Women's economic equality	Percent women in labor force 0 = 40.01- highest percent of women in the paid labor force. 1 = 0-40.00 percent of women in the paid labor force.	World Bank
	Quality of women's lives	Fertility level 0 = 0 - 4.00 average fertility rate. 1 = 4.01 - highest fertility rate.	World Bank
Ethnic discrimination	Political discrimination	0 = MAR categories 0 - 2	MAR project
	Economic discrimination	1 = MAR categories 3 - 4	
State repression	Sever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Political Terror Scale 0 = categories 1 - 2 1 = categories 3 - 5	Purdue University Political Terror Scale

자. INCSR 2009

Criminalized Drug Money Laundering	laws criminalizing the offense of money laundering related to drug trafficking.
Criminalized Beyond Drugs	extended anti-money laundering statutes and regulations to include nondrug-related money laundering.
Record Large Transactions	banks are required to maintain records of large transactions in currency or other monetary instruments.
Maintain Records Over Time	banks are required to keep records, especially of large or unusual transactions,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e.g., five years.
Report Suspicious Transactions	banks are required to record and report suspicious or unusual transactions to designated authorities. On the Comparative Table the letter 'M' signifies mandatory reporting; 'P' signifies permissible reporting.
Financial Intelligence Unit	established an operative central, national agency responsible for receiving (and, as permitted, requesting), analyzing, and disseminating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disclosures of financial information concerning suspected proceeds of crime, or required by national legislation or regulation, in order to counter money laundering. These reflect those jurisdictions that are members of the Egmont Group.
System for Identifying and Forfeiting Assets	laws authorizing the tracing, freezing, seizure, and forfeiture of assets identified as relating to or generated by money laundering activities.
Arrangements for Asset Sharing	permits sharing of seized assets with third party jurisdictions that assisted in the conduct of the underlying investigation.
Cooperates w/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banks are permitted/required to cooperate with authorized investigations involving or initiated by third party jurisdictions, including sharing of records or other financial data.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Currency	controls or monitors the flow of currency and monetary instruments crossing its borders. Of critical weight here is the presence or absence of wire transfer regulations and use of reports completed by each person transiting the jurisdiction and reports of monetary instrument transmitters.

Mutual Legal Assistance	agreed to provide and receive mutual legal assistance, including the sharing of records and data.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requires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o meet the same customer identification standards and adhere to the same reporting requirements that it imposes on banks.
Disclosure Protection Safe Harbor	provides a 'safe harbor' defense to banks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employees who provide otherwise confidential banking data to authorities in pursuit of authorized investigations.
States Parties to 1988 UN Drug Convention	States parties to the 1988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or a territorial entity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has been extended by a party to the Convention.
Criminalized the Financing of Terrorism	criminalized the provision of material support to terrorists and/or terrorist organizations.
States Parties to the U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or a territorial entity to which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has been extended by a party to the Convention.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윤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성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C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근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공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근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기 타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